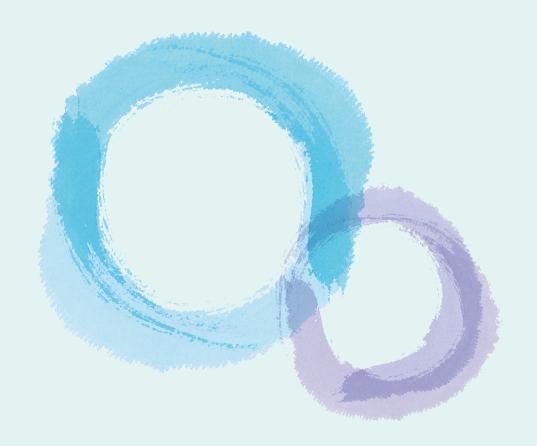
#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 창조경제 기반 문화·환경·산업 융합 남북협력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임강택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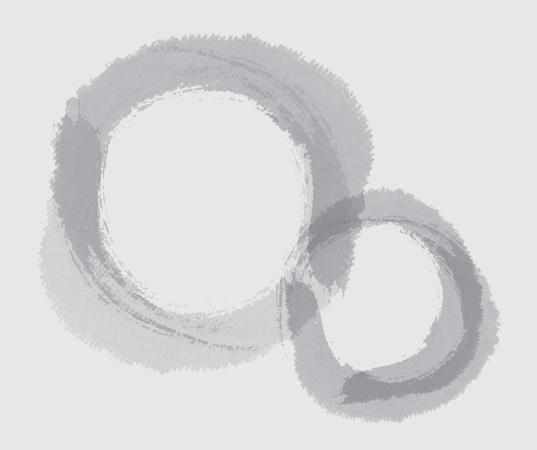




#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 창조경제 기반 문화·환경·산업 융합 남북협력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임강택 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런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01-26	창조경제 기반 문화·환경·산업 융합 남북협력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통일연구원	임강택 (총괄책임자)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통일교육원	권영경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영정	연구위원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양현미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연구부교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HK교수	

#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창조경제 기반 문화·환경·산업 융합 남북협력 추진방안"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6월 통일연구원 원 장(대 행) 최 진 욱

## 요 약

남북경협을 포함하는 남북협력은 일반적 형태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남북협력은 특수관계에 기초한 민족내부의 관계이자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관계와 다른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남북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 생태계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생태계는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또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지칭하는 용어로, 같은 곳에 살면서 서로 의존하는 유기체집단이 완전히 독립된 체계를 이루면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생태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호의존성과 자기완결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단으로 인해 파괴된 민족생태계의 발전적 복원을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적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통일생태계(Reunification Ecosystem)'는 민족생태계의 창조적 복원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남북한 간 단절된 각 분야의 생태적 연결이 필요하며, 이는 '통일생태계'개념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통일생태계 형성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의 신성장동력 기반의 마련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북한지역의 시장화와 민주화가 촉진됨으로 해서 평화적인 통일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핵심은 창의와 융합에 있다. 기존 남북협력모델의 한계를 넘어 민족생태계의 복원을 지향하는 통일생태계 복구사업이라는 점에서 창의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문화·환경·산업의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창출이라는 의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생태계와 통일생태계 개념을 적용할 경우 창의적 남북협력모델의 최종 목표는 미래지향적인 민족생태계의 복원및 창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간 목표로 통일생태계의 복구를 모색하게 된다.이 같은 관점에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그린 데탕트」 및 「비전 코리아 프로젝

트」에 대한 재해석과 아울러 발전적 확대과정이 요구된다. 창의적 남북협력 모델은 환경·문화·역사·평화와 산업의 융합을 통해 민족생태계의 발전적 복원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통일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창의·융합형 남북협력의 목표는 '통일생태계'의 조성, 신성장동력의 창출 그리고, 통일 미래의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생태계' 구축에 있어 남북한의 상호연계성 회복과 남북협력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정책추진의 주요 방향성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협력의 추진 환경의 조성, 실현가능성이 크고 정치적 상황에 덜 민감한 협력부문 우선 추진, 남북 사회의 변화 수용능력의 강화, 남북경제협력의 수익 가능성 가시화 및 다양성 최대화,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한 통일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 관련 조치들이 필요하다.

접경지역 활용은 창의·융합형 남북협력모델의 구상에 있어서 우선적 고려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관계부터 구축되기 위해서는 접경지대를 다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접경지대는 고려역사와 태봉국의 역사현장이 묻혀 있는 '미발굴의 한국사 현장'이면서 '분단의 반사적 이익으로 선물받은 생태계의 보고'이며, 청정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과 결합된 개발도 가능한 지역이다. 남북한은 접경지대를 생태보존·평화벨트화하는 협력을 통해 기본 신뢰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차가운 냉전지대'인 접경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민족공동 문화자산이란 북한에 사회주의체제가 성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형성된 일체의 문화자산을 의미하며, 현재는 북한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다시 민족공동의 문화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자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유·무형의 문화재로 이루어진 민족 문화유산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민족공동 문화자산은 그 보존과 활용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나가야 한다는 미래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민족공동 문화자산의 관광산업화는 좁게는 북한내 민족공동문화자산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을 말하며, 넓게는 남북한의 민족공동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문화관광'으로서 남북관광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유산의 공동 보존 디지털화 및 남북 문화콘텐츠 협력의 확대발전 방안의 모색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남북 문화유산의 공동보존이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취약했던 이들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보존관리, 디지털화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의 문화콘텐츠 분야의 남북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성', '유연성',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문화협력사업은 주문 생산을 하거나 생산 여건에 따라서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제조업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문화협력사업은 문화적인이해와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청정개발체제(CDM)란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 중 하나이다. 이 청정개발체제에의 구축과 관련해 남북한의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많다. 관련 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남북공동의 노력으로 북한 지역 CDM을 추진할 경우 북한 측은 온실가스 발생 시설 즉 발전소, 비료공장 등을 현대화하고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며, 남한 측도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등 남북 상생의 협력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다.

통일은 일류경제로 진입하는 '한국경제의 재창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 기회의 현실화는 창조경제적 마인드를 겸비한 통일미래 인재가 남과 북 양지역에서 사전적으로 양성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통일이 가져다 준 새로운경제생태계를 통찰하고 이에 도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조경제적 인재들에 의한 선도적인 역할이 의미를 가질 때 통일한국의 경제는 재창조의 방향으로 도약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 마인드를 겸비한 통일대비 인재양성은 남북한 양지역 출신을 대상으로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인력은 발전된 시장경제 및 한국경제발전 경험의 전수와 더불어 통일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불확실성 요인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며 신경제를 창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반면, 북한 인력들은 북한경제가 시장화 개방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경제마인드 인식부여 역할과 더불어 사회주의계획경제의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실제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Abstract**

The essence of the new South-North cooperative model lies in creativity and convergence. The importance of creativity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 cooperative model goes beyond the previous attempts at inter-Korean cooperation and further aims to restore the ethnic-ecosystem by re-establishing the reunification-ecosystem. In addition, through the convergence of the cultural,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realms, this new model is meaningful in that it will create new engines for economic growth. The aim of this model is to 'establish a unification-ecosystem, create new engines for growth, and nurture creative and outstanding individuals for unified Korea.' The main policy directions in establishing a 'reunification-ecosystem' are to restore the two Koreas' mutual relationship and establish sustainable inter-Korean cooperation. To this end, actions must be taken to create an environment conducive to inter-Korean cooperation, prioritize areas which are politically less sensitive and at the same time feasible, strengthen the capacity for North and South Korean societies' to embrace change, gauge and maximize the potential economic gains of inter-Korean cooperation, and strengthen the sustainability of the reunificationecosystem through the cooperativ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border area is a region where Korea's history has not yet been excavated. It also holds the history of the Goryeo and Taebong's Kingdoms. It is an unintended gift of the division, in that it has yielded a well-preserved ecosystem, and holds much pot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environment. The basic trust building process can be established through the cooperative efforts to preserve the region's ecosystem and establish a 'peace belt.' Moreover, the area which was once

tainted with the remnants of the Cold War needs to be turned into a zone of peace.

The preservation and usage of a shared ethnicity's cultural resources must be done through the cooperative efforts of both Koreas in a forward-looking manner. In the narrower sense, it implies using North Korea's cultural assets as resources for tourism. In the broader sense, the two Koreas' cultural resources are used for the purpose of broadening both Korea's 'cultural tourism industry.'

There is also a need to find ways to expand the cooperative efforts to preserve and digitalize common historical legacies, as well as the cultural assets of both Koreas. In the latter case, 'stability, flexibility, and professionalism' must be provided to encourage inter-Korean cooperation. This is because the cultural industry is different from the manufacture industry in that the latter is operated by order production, and can choose which specific product it wants to focus 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the cultural industry will only be able to maximize the synergy effects by having a deep understanding of the bond between culture and business.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is an area which can yield much mutual benefits, if inter-Korean cooperation is done on a full-scale. If the CDM is carried out in the North Korean region through both Korea's efforts, the North will be able to modernize its electric power and fertilizer plants, which emit greenhouse gases, and both Koreas will be able to obtain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redits(CER), among other benefits, allowing them to establish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industries.

Nurturing creative and outstanding individuals to prepare for unification will need to be pursued by targeting people from both North and South Koreas simultaneously. The South Koreans should pass down South Korea's experienc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market economy, prevent factors that would add to the economic uncertainty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and lead the creation of a new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North Koreans should focus on shaping the economic mindset of the North Korean citizens, which will be required as the North Korean economy goes through marketization and opening-up, in addition to carrying out the practical role of transforming a socialist planned economy into a market economy.

# 목 차

요약문	1
제1장 연구 의의 및 필요성	13
제2장 창의·융합형 남북협력모델의 기본 개념: '생태계' 개념 도입 ······	18
가. '민족생태계'의 발전적 복원	18
나. '통일생태계(Reunification Ecosystem)'의 창조적 구축 ·····	19
다. 창의·융합형 남북협력 모델의 기본 추진구도·····	22
제3장 창의·융합형 남북협력의 목표와 전략 ·····	25
가. 창의·융합형 남북협력의 추진 목표	25
1) 남북한 상호연결성 강화	25
2) 남북협력의 지속 가능성 확보	25
3)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전략산업의 육성	26
4) 통일한국의 경제성장 기반 구축	26
5) 통일 미래의 창의적 인재 양성	26
나. '통일생태계'구축 전략	27
1) 남북 신뢰관계의 구축 및 심화: '다름'을 '다양성'으로 승화	27
2) 남북 연계망 구축 및 확산: 흐르는 물처럼 남북한을 연결	27
3)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 절대빈곤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	출 … 27
4) 정치적인 합의 도출: 정치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28
5) 남북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모두가 참여하고 혜택을 공수	<del>ئ</del> ···· 28
6) 민간 주도의 사회·경제형력체계 구축: 민간부문이 주체세력으로 기	늣 28

다. 창의·융합형 남북협력의 추진 전략······29	)
1) 남북협력의 추진 환경(통일생태계의 자연성장 환경)의 조성 29	)
2) 실현가능성이 크고 정치적 상황에 덜 민감한 협력부문 우선 추진 29	)
3) 남북 사회의 변화 수용능력의 강화 29	)
4) 남북경제협력의 수익 가능성 가시화 및 다양성 최대화 30	)
5)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남북협력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의 강화 30	)
제4장 주요 분야별 남북협력 추진방안31	
가. 접경지역 활성화 31	
1) 접경지대 생태환경 보전과 유기농 농업협력 추진 31	
2) 남북한 강, 섬, 육지 접경지역 관광협력 38	}
3) DMZ 평화산업48	3
나. 민족공동 문화자산의 관광산업화58	}
1) 추진 필요성과 의의 58	}
2) 사업 추진 방안60	)
3) 주요 사업별 실행 계획68	}
다. 역사유산의 공동 보존과 디지털화 72	)
1) 한인 디아스포라 박물관 조성 72	)
2) 남북 문화유산의 공동보존과 디지털화 사업78	}
라. 남북 문화콘텐츠 협력86	)
1) 추진 필요성과 의의86	í
2) 주요 사업내용 98	}
3) 실행계획 111	
마. 그린 데탕트의 선도적 주도116	í
1) 청정개발체제(CDM)의 사업화를 통한 상호이익 창출 ······ 116	<b>,</b>
2) 남북한 그린바이오 협력126	í

바. 통일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	137
1) 창조경제 마인드 겸비 통일미래 인재의 양성	137
2) 고려역사유적지 탐방을 활용한 통합리더십 인재의 배양 …	153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59
가. 생태적 접근 및 선도형 통일의 접목	159
나. 접경지대의 생태-평화 벨트화	160
다. 통일과정과 미래 인재 양성의 융합	161
라. 통일생태계와 동북아 국제환경과의 조화	162
참 고 문 헌	163
부 록	167

# 표 목 차

< 丑 4−1>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북한 문화자산 현황61
<	재외동포 현황74
<	등록문화재 지정 현황 81
< 翌 4−4>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현황
< 翌 4−5>	북한 전력 부문의 CDM 잠재성119
<班 4-6>	대북 CDM 사업 적용 사례120

# 그 림 목 차

[그림 2-1]	통일생태계 구축 체계	22
[그림 2-2]	창의적 남북협력모델 추진 구도	24
[그림 4-1]	개성지역의 역사문화자원/개성시 주변 관광자원	41
[그림 4-2]	개성공업지구내 관광자원	42
[그림 4-3]	서해연안 접경지역 및 한강하구	43
[그림 4-4]	사리원 민속거리(왼쪽)와 평양민속공원	62
[그림 4-5]	북한문화재자료관 홈페이지	85

# 제 1 장 연구 의의 및 필요성

현 정부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는 '한 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이행에 있어서 남북교류 협력은 실질적 수단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제시된 '창조경제'는 산업·문화·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내자는 것으 로, 이 창조경제의 개념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결합한 창의적 남북경협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동기이자 배경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남북협력은 경협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 세를 유지했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 2012년 말 기준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는 53,000여 명이며, 누적 생산액은 20억 불에 달한다. 금강산관광사업은 한국민의 자유로운 북한방문이라는 점에서 남북 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은 관광객 피격사건이후 중단되었으며, 개성공단사업 역시 북한 의 장거리로켓 실험발사 및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및 한 미 군사훈 련에 반발한 북한 측의 정치적 압박으로 잠정 중단상태에 들어갔다. 현재와 같은 상황의 도래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간 대결과 갈등에서 화해·협력의 실현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의의가 강조된 남북관계 발전의 초기적 현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남북 관계의 한계를 뛰어 넘는 지속가능한 창의적 남북협력모델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대결국면이 대화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 내외 환경을 살펴보면 도전적인 요인들 이 산재해 있다. 먼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동북아지역을 둘러싼 미국과의 영향 력 확보 경쟁으로 발전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이를 발판으로 아시아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적·안보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때문에 중국은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천안함 사건 이후한·미 간 서해안에서의 군사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이 지역에서 전략적 행보를 확대해 오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직접 경제·안보·문화적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대외전략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치밀하고 전략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강대국 지도부의 동시적 교체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10년 주기의 권력교체, 미국의 대통령 선거,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의 재선, 일본의 정치적 위기와 한국의 새정부 등장 등은 지역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역내 리더십의 동시적인 교체는 지역질서를 구축하는 데 부정적·긍정적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각국의 보호무역과 민족주의 성향이 촉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 경향의 강화,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마찰, 독도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 등 동북아 역내 영토 및 역사문제의 미해결로 인하여 이 지역의 외교·안보적 협력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핵문제가 역내 군비경쟁 가속화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동북아 역내 주요 국가들의지도부 교체를 계기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경제·안보·외교적 사안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실험의 성공과 3차에 걸친 핵실험 등으로 확인된 북핵 위협의 증대와 이에 따른 북한 김정은 체제의 대외정책 강성화 및 군사적 모험주의 선호 가능성이 증대된 점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가장 큰 극복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심화되고 남북 간의 대치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남북협력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된다. 보다 근본적인 고민은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어 남북협력사업이 다시 추 진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불확실성을 확인한 한국의 민간사업자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망설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남 북협력을 복원·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과 새로운 형태의 남북협력 모델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진행된 남북협력관계의 전개과정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는 동시 에 문제점들을 노출하였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협력을 추구하면서도 남한 측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북한 측의 구태의연한 관행이 척결되지 못하였으 며, 남북 사이의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협력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사례가 현재 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의 결과가 남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는 점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경우를 보더라도 북한 사 회의 산업기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성장 잠재력의 강화가 절실한 한국 사회에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 을 확인시켜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남북협력 모델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한 사회의 근본적 인 변화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창의적 방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남북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과제는 정치적 환 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협력 사업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약속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과 공개적인 합의가 요구되며 이를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시 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협력모델을 통해서 남북한 사회가 서로를 향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통일을 향한 동반자라는 믿음과 신뢰를 구축해 가는 데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현재 남북관계는 초기적 단계를 넘어 질적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진통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양적 발전과 상징적 의의가 중요했던 초기에 비해 현 단계의 경우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의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점에서 경제·환경 남북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박근혜 정부의 「그린 데탕트」」) 및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2)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산업과 환경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아울러 문화·예술, 역사, 평화 등 영역과의 융·복합을 통한 창의적 발전방안이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경협은 순수 산업 및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된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환경, 문화·예술, 역사, 평화 등과 산업의 융합을 통한 협력모델의 중요성이 있다. 이는 기존의 경향과 차별화되는 창의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신성장동력의 창출과 아울러 일자리 창출 및 통일 미래세대의 양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모델은 창의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며, 단순 인력제공 형태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기존 모델과 달리 새로운 차원에서 북한 변화를 촉진할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에서 주요 목표로 제기되고 있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여전히 비용과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는 문제는 단순히 남북협력을 확대하는 작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sup>1) 「</sup>그린 데탕트」는 남북 환경공동체 형성 추진을 위한 녹색경협, 접경지역·DMZ·백두 산 화산 등의 분야별 공동연구와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의 모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2013. 2.), p. 192

<sup>2) 「</sup>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방안이며, 중장기적으로 철도 도로, 전력, 통신 등 산업 인프라의 단계적 연결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위의 글, p. 192.

위해 최근에는 통일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아직까지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협력과 통일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생명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창조 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제 2 장 창의·융합형 남북협력모델의 기본 개념: '생태계' 개념 도입

남북경협을 포함하는 남북협력은 한국과 타 일반국가들과의 일반적 형태와 차 별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남북협력은 특수관계에 기초한 민족내부의 관계 이자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관계와 다른 의미와 목적 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남북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 생태 계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생태계는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또 그들과 서 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지칭하는 용어로, 같은 곳에 살면서 서로 의존하는 유기체 집단이 완전히 독립된 체계를 이루면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생태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호의존성과 자기완 결성이라고 할 수 있다.

## 가. '민족생태계'의 발전적 복원

정상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적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회의 각 구성부분이 유기적 관계를 통해 합목적적으로 작용하는 상태를 정상적 민족생태계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같은 생태계가 단절될 경우, 생태계 파괴로 인한 비정상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단일 생태계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단절된 각각의 지역의 생태계는 분단상태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에서비정상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경제적 위기는 단절된 '민족생태계'의 극단적 위기를 상징한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지닌 한국이 전 근대적인 이념대립 및 사회갈등 상황에 직

면해 있다는 점도 민족생태계의 단절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의 핵 위기와 고도로 훈련된 무장병력이 좁은 한반도에 200만명에 달한다는 점도 단절된 민족 생태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간 및 남북한 사회 내부 문제의 상당부분 은 민족생태계의 단절에서 비롯되며, 양 사회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저해 한다. 이 같은 점에서 민족생태계는 재 연결 및 복원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양 사회의 미래 발전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민족생태계의 재 연결 및 복원은 양 사회의 정상국가화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북 통일정책은 단절된 민족생태계의 복원을 지향하는 정책으로서 의미를 지 닌다. 그러나 민족생태계의 복원은 단순한 단절 이전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하지 는 않는다. 과거와 달리 전 지구적 차원의 변화가 진행되었으며, 남북한 양 사회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근대화가 상당부분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단일 한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화가 진행되었으며, 다문 화 영역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민족생태계의 복워은 미래지향적 이며 창조적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창의적 방식의 민족생태계 복 원은 분단의 해소와 남북한 사회내의 냉전문화해소, 21세기 세계를 선도하는 정 치·경제·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을 포함한다.

민족생태계의 발전적 복원을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적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통일생태계(Reunification Ecosystem)'는 민족생태계의 창조적 복원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남북한 간 단절된 각 분야의 생태적 연결을 의미하며, 이를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의 과정을 의미한다.

## 나. '통일생태계(Reunification Ecosystem)'의 창조적 구축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창의적 남북협력모델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를 위해 서는 '통일생태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일생태계'는 남북 한의 통일문제에 생태계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통일생태계의 기본 개념은 남북 한의 통일을 이루는 내적 요인들이 긴밀하게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또한 통일생태계의 이러한 특징은 남북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남한과 북한 내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모색하는 새로운 남북협력 모델은 남북한의 내적 상호연계성을 회복, 강화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둘 것이다.

남북한의 내적 상호연계성을 회복·강화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남북주민들의 정서적 유대감과 문화적 연계성 및 통일에 대한 열망이다. 남북한 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통일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통일의 동반 자이자 협력자로서의 정서적·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남북한 내적 연결성의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통일생태계의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일인 것이다. 둘째는 물리적 연결성이다. 교통·통신 등을위한 연계망의 건설과 3통(통행, 통신, 통관)이 자유화되고 에너지망 등의 상호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남북한을 물리적·공간적으로 연결시키자는 것이다. 남북한의 물리적 연결은 통일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공간적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이다. 남북한이 기능적으로 연결되도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유무상통하고 상호 간 이익을 창출하는 상생협력을통해서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확대시켜나가자는 것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적 관계의 심화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통일생태계의 순환기능을 강화시킬 것이다.3)

'통일생태계'의 두 번째 시사점은 생태계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체조정(정화)능력의 회복 및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남북협력관계의 한계는 정치·안보적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남북협력 모델의 두 번째 목표는 정치·안보적 환경 변화에

<sup>3)</sup> 이와 함께 자체정화(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른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와 같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재화(現在化)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 치적 결정에 따른 충격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정 치·안보적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은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당국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면,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남북협력의 정경분리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준 수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법제화하며, 여기에 더하여 국제사회가 이 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남한과 북한 사회 내부의 충격흡수능력 강화를 통해서 '통일생태계'의 문제해결(자체정 화)능력을 개선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 제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양극화 심화와 경제적 소수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지나친 개인주의적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주의를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4) 북한 사회에서는 통일생태계의 기본적인 토양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경제적 요소가 확대 도입되어 경제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린 데탕트」와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남 북한의 생태적·물리적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통일생태계를 회복시 키기 위한 작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다만, 통일생태계를 보다 창의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앞에서 언급한 문화, 역사, 평 화 등 한반도의 고유한 창의적 자산을 남북협력과 연계시키고, 이러한 협력사업 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sup>4)</sup>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확산 움직임과 협동조 합운동을 남북협력모델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 일정부분 보완이 필요하다. 「그린 데탕트」의 경우 문화·역사·평화 영역과 융합되면 창조적 영역의 개척이 가능하며,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타영역과의 융합을 통한 발전적 영역의 개척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점에서 통일생태계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구체적 시행과정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통일생태계는 또한 창의적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한사회의 순기능적 변화를 촉진함과 아울러 중장기적 차원에서 통일비전을 구현하는 유기체적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통일생태계 형성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의신성장동력 기반의 마련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북한지역의 시장화와 민주화가 촉진됨으로 해서 평화적인 통일기반의 마련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목표
 내적 상호연결성의 회복
 자기완결성의 회복

 핵심 과제
 정서적 유대감 강화
 물리적 연결성 강화
 장화의존성 강화

 자체정화능력 확보 강화

[그림 2-1] 통일생태계 구축 체계

### 다. 창의·융합형 남북협력 모델의 기본 추진구도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핵심은 창의와 융합에 있다. 기존 남북협력모델의 한 계를 넘어 민족생태계의 복원을 지향하는 통일생태계 복구사업이라는 점에서 창 의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문화·환경·산업의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창출이라는 의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생태계와 통일생태계 개념을 적용할 경우 창의적 남북협력모델의 최종 목표는 미래지향적인 민족생태계의 복원 및 창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간 목 표로 통일생태계의 복구를 모색하게 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그린 데탕트」 및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에 대한 재해석과 아울러 발전적 확대과정이 요구된다.

남북한 통일은 단절되어 있던 한반도 북부와 남부의 두 경제권이 단지 하나로 통합되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가져다준다. 즉 무엇보다 국토규모 의 확대로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제적 영토가 커진다. 현재 남한이 차지하 고 있는 국토는 세계 120위로서 99,000㎢에 지나지 않지만, 통일국가가 되면 물 리적 경제영토는 세계 50위권인 220,000㎢로 확장된다. 내수시장의 핵심요소인 인구도 세계 50위에 지나지 않은 5천만 명 수준에서 세계 18위인 8천만 명대로 늘어난다. 두 번째로 통일국가 달성은 한반도경제권이 북방경제권에 바로 연결 되고, 한국경제가 해양경제와 대륙경제의 허브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경제환경의 변화를 초래한다. 세 번째로 남북한 통일은 상호 분리되어 있고 발전단계가 상이 한 남북한 산업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상호보완적 차원으로 결합해나가야 하 는 과제를 안겨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통일은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자본주의경 제체제의 통합으로서 각 분야별 경제통합을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며 추진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를 안겨준다. 이처럼 통일로 인한 경제생태 계의 변화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경제가 선진일류경제로 진입하는 '한국경 제의 재창조'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통일에 따른 불안정성의 극복이라는 도전 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통일과정은 한반도의 사회문화생태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류 열풍이 증명하듯이 21세기 세계문화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한류 에 대한 다양한 요인분석이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문화의 문화적 잠재력이 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인 언어체계인 한글과 아울러 한국문화는 21세기 새로운 자본인 창의적 '콘텐츠'의 개발에 있어서 충분한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000 년간 지속된 한국의 역사도 콘텐츠의 풍부한 보고로서 잠재적 가치가 있다. 또한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은 평화문화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환경·문화·역사·평화와 산업을 융합한 창의적 방식의 남북협력 모델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남북경협 및 협력 모델과 근본 적으로 차별화되는 것이며, 창조경제의 기본정신을 구현할 수 여지가 크다는 점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분단체제의 취 약성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동시에 기존 영역을 뛰어넘는 창조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남북한 내부에 새로운 일자 리 창출과 통일미래세대의 교육 및 양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창의적 남북협력 모델은 환경·문화·역사·평화와 산업의 융합을 통해 민족생태계의 발전적 복원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통일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 [그림 2-2] 창의적 남북협력모델 추진 구도

#### 민족생태계 단절 단계

- 정치·경제·사회적 단절 ○ 분단의 고비용 구조
- 북한체제의 구조적 위기
- 한국의 이념 갈등

#### 통일생태계 구축 단계

- '선도형 통일'5)의 추진○ 민족공동체 추진
- '그린 데탕트
-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 문화·환경·산업 융합형 남북협력 모델

#### 민족생태계 복원 단계

- 민족생태계의 창의적, 발전적 복원
- 분단비용 해소 및 체제통 합을 통한 정상국가화
- 열린 민족주의 완성
- 세계 선도 국가 진입

<sup>5) &#</sup>x27;선도형 통일'은 남북한 모델 중 모범적 주체의 선도 및 현 단계가 아닌 발전적 미래 모델의 지향이라는 이중적 의미에서의 선도 개념을 포함한다. 김규륜·조한범 외(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통일연구원.

# 제 3 장 창의·융합형 남북협력의 목표와 전략

가. 창의 융합형 남북협력의 추진 목표

- 3대 목표 -'통일생태계'의 조성 신성장동력의 창출 통일 미래의 창의적 인재 양성

#### 1) 남북한 상호연결성 강화

'통일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정서적·지리적·물리적·경제적 연결성 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하위 목표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① 남 북한 주민들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질감 회복, ② 남북 간 지리적・물리 적·공간적 통로의 개설과 자유로운 이용, ③ 자본과 노동력, 문화와 산업이 자유 롭게 교류하고, 남북한 주민의 복지공동체를 형성

#### 2) 남북협력의 지속 가능성 확보

'통일생태계'는 남북한 연결성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때 발전해 나갈 수 있 으며, 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갈등과 중단 등과 같은 문제를 스스로 해 결할 수 있는 자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남북협력의 지 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하위 목표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① 정치·안보분야의 외부충격에 대한 내구성 강화, ②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능력의 배양. ③ 남북협력 참여 주체의 다양화와 국제화

#### 3)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전략산업의 육성

박근혜 정부가 중요한 국정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남북협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을 남북협력의 목표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① 평화산업: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평화에 대한 가치를 전파하는 계기로 활용하면서,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 ② 녹색공동체산업: 「그린데탕트」등을 포함하여 환경분야의 남북협력을 수익성사업으로 육성, ③ 문화공동체산업: 남북 역사·문화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문화산업으로 개발

#### 4) 통일한국의 경제성장 기반 구축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은 남북통일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시기적·경제주체별로 분산시킴과 동시에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물리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① 운송망·산업단지 등 북한지역산업인프라의 확충 및 현대화, ② 남북협력의 동북아지역으로 확산 및 연계망 구축, ③ 북한지역에 창의적 산업인재 양성

#### 5) 통일 미래의 창의적 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며, 남북협력의 차원에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① 통일 미래를 꿈꾸는 창의적 인재 개발,②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일꾼 양성,③ 통일한국을 이끌어나갈 청소년 지도자 육성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나. '통일생태계' 구축 전략

#### 1) 남북 신뢰관계의 구축 및 심화: '다름'을 '다양성'으로 승화

통일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오랜 분단과 다른 성격의 체제가 유지되어온 데 따른 이질성을 긍정 적인 에너지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남북의 신뢰관계 형성은 정부당국 만의 문제가 아니며, 양쪽 사회와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는 목표로는 ① 남북 사회의 연대의식 제고, ② 남북 당국의 신뢰 회복 및 심화, ③ 남북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 고취 등이 있다.

#### 2) 남북 연계망 구축 및 확산: 흐르는 물처럼 남북한을 연결

통일생태계의 물리적인 측면은 남북 양측이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리 적으로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① 남북 도로와 철도 등 육상 통로의 연결 및 자유 통행, ② 남북 해로 및 항공로의 정기운송(운행)망 개설, ③ 남북 통신망의 연결 등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3)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 절대빈곤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통일생태계의 경제적인 측면은 북한지역의 빈곤을 해소하고 경제발전의 기반 을 마련하면서 한반도 차원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감으로써 경제적 상호의존성 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당면 목표로 북한의 시장화 촉진과 남북경제의 교류협력사업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 4) 정치적인 합의 도출: 정치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통일생태계 구축의 핵심은 정치적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당국의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남북당국이 경제·사회·문화분야의 남북협력을 정치적 환경변화로부터 독립시키자는 데 합의하고,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위의 내용을 담은 '신민관분리/정경분리 원칙'을 선언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치·안보적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문화·경제부문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5) 남북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모두가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

통일생태계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사업추진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협력영역의 개발을 통하여 남북한 주민들이 남북협력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6) 민간 주도의 사회·경제협력체계 구축: 민간부문이 주체세력으로 기능

남북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북협력의 핵심 주체인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문화·경제협력을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북 간 비당국 협의체계 구성하고, 민간단체와 정부의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 갈등조정 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다. 창의 융합형 남북협력의 추진 전략

#### 1) 남북협력의 추진 환경(통일생태계의 자연성장 환경)의 조성

창의적 남북협력은 기존의 협력영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남북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 과 통일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키고 심리적·제도적·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 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① 남북한 주민들의 상대방에 대한 의식 개선, ② 통일에 따른 남북주민들의 불안감 제거, ③ 남북 교류·협력 확대의 법적·제도적 장애물 해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실현가능성이 크고 정치적 상황에 덜 민감한 협력부문 우선 추진

아직까지 남북협력은 극복해야하는 장애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과를 거두고 이를 토대로 협력 영역을 확산시켜나가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즉,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또한 문화의 관광자원화, 역사유산의 공동자산화, 환경분야의 협력 등과 같이 비정치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여 신뢰를 구축한 이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3) 남북 사회의 변화 수용능력의 강화

남북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사회가 이 에 따르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폐쇄적 인 북한사회의 변화 수용능력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대북한 인식 및 통일문제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남북협력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시켜 야 한다.

# 4) 남북경제협력의 수익 가능성 가시화 및 다양성 최대화

남북협력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북 양측이 경제적 수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협력사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크지 않도록 소규모사업의 진출을 유도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남북 간의 접촉면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5)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남북협력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의 강화

남북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뒷받침되어 한다. 특히 남북협력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면서, 통일한국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역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 교류와 협력에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남북 통일생태계의 자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제 4 장 주요 분야별 남북협력 추진방안

# 가. 접경지역 활성화

# 1) 접경지대 생태환경 보전과 유기농 농업협력 추진

#### 가) 추진 필요성과 의의

일반적으로 접경지대라고 하면 국가 간에 영토가 맞닿아 있는 경계지역을 말한 다. 국가 간 경계지역은 대체로 산맥, 하천, 강, 호수 등의 자연적 지형이나 지구 의 위도·경도를 기준으로 그어지고 국가 간 조약체결에 의해 설정된다. 탈냉전 이 후 대부분의 국가들간 접경지대는 오랜 영토분쟁이나 군사안보적 갈등을 넘어 각 기 주권국가의 관할권을 안정화하고 양 지역의 풍습, 문화소통과 관광 및 상품거 래를 활발히 함으로써 접경지대를 평화지대화(peace zone)하는 방향으로 발전하 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일부 접경지대의 경우 양 지역의 문화, 경제, 사람들이 소통-융합할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해 번영의 지대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우리와 같 은 분단국이었던 남북 예멘, 동서독 그리고 현재의 중국 대만 등도 접경지대가 갖 는 이러한 기능적 효과에 주목해서 처음에는 접경지대를 물류와 관광, 문화교류, 변경무역거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대로 육성하여 접경지대를 평화지대 화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민족 간 통합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체제 경쟁의 격화로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차원에서 접경지대를 활용한 분단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접경지대의 공동개발을 이끌어냄으로써 접경 지대를 평화공존의 지대로 발전시켜나갔으며, 이를 토대로 민족공동체를 점진적 으로 구축해나갔다.6) 즉 양안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의 푸젠성(福建)과 대만의 진먼(金門)사이의 접경지대에서 1967년 중국의 기습침략으로 인한 400명 이상의

살상자 발생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70년대 후반 푸젠성 특구를 개발하고 대만이 2001년도에 이른바 '소삼통'정책을 시행하면서7), 드디어 2010년 양안 간에 '경제긴밀화협정(ECFA)'이 맺어지게 되고, 현재 접경지대에서는 양 지역 간에 걸친 경제특구의 공동운영을 비롯해 출입증만으로도 물류·관광·문화협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남북 간 접경지대는 총괄적으로 전쟁이 잠시 멈추어서있는 '휴전지대'로서 오랫동안 물류통행과 관광, 문화적 소통, 상거래 등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존재해왔다. 남북 간 접경지대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군사력의 비무장 격리공간인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통제보호구역인 민통선 그리고 민통선 이하 제한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양 지역 간 접촉 및 교류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장벽의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남북 간 접경지대는 여전 히 '차가운 전쟁' 상황 중에 놓여 있게 되고,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늘 화약고 와 같은 접경지대의 공포심을 안고 살아오게 되었다. 특히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제적 낙후와 활동의 제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타지역과 격리된 일종의 '제3지대'에 갇힌 존재로 살아오게 되었다. 또한 철저한 격리와 장벽으로 존재하는 남북한 접경지대는 국토개발의 한계도 가져오게 하였다.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보호구역, 제한구역 등을 합한 개념인 접경지대를 거리로 계산해 보면 36km거리로서 면적만 해도 총 8,833km²나 된다.8) 북한의 접경지역도

<sup>6)</sup> 분단국의 접경지대를 평화지대화한 사례는 손기웅 외 (2009), 『접경지역의 평화지 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활성화방안(1)』, 통일연구원 참조.

<sup>7) &#</sup>x27;소삼통정책'이란, 대만이 중국 푸젠성 연해도시들과 마주하고 있는 진먼섬, 마주섬, 평후제도 등 3개섬들과 중국 연해도시들과의 선박, 항공기 등 직항에 대한 3통(통상, 통항, 통우)을 합법적으로 허용한 정책을 말한다. 양안 간에 3통이 전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대만이 2008년 12월 15일 '3불정책'을 철회하면서부터이다.

<sup>8)</sup>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한 각기 2km이내 지역으로서 총 907km에 이르고, 민간통제보호구역은 휴전선 이남 10km내외의 지역으로서 총 1,760km가 되며, 제한구역은 민통선 이하 25km로서 총 6,216km에 이른다.

단순하게 똑같이 계산한다면 남북한 합해서 접경거리는 72km, 경지대 총면적은 17,666㎢에 이르게 된다. 철저하게 단절의 거리가 되고 있는 남북한 접경거리 72 ㎞는 어쩌면 현재의 남북한 사람들 간의 심리적 거리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단절 된 접경지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관계부터 구축되기 위해서는 접경지대를 다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접경지대는 한편으 로 '냉전의 사회학 교실'이자 '전쟁박물관'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고려역사와 태봉국의 역사현장이 묻혀 있는 '미발굴의 한국사 현장'이면서 '분단의 반사적 이익으로 선물받은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9) 또한 청정지역 으로서 오늘날 신경제의 흐름으로 강조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과 결합된 개발 도 가능한 지역이다. 이제 남북한은 접경지대를 생태보존 평화벨트화하는 협력 을 통해 기본 신뢰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차가운 냉전지대'인 접경지대를 평화지 대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통일생태계의 형성이란 휴전지대로서 의 접경지대 개념이 사라지고, 접경지대에서 남북한 물류·문화·관광·교류·개발과 생태보존 등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20세기가 지구상에 남긴 냉전의 유적, 접경지대는 다층적 활용을 통해 민족생태계가 복원되는 공간 으로, 남북한 신뢰공동체가 형성되는 공간으로 변환되어 나가야할 것이다.

#### 나) 주요 사업내용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 공히 여 러가지 규제로 낙후되어 있는 반면, 어느 지역보다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미래 통일국가시대에도 보존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특히 비무장지대는 장기 간 인간의 흔적이 개입되지 않은 각종 생물들의 보고(寶庫)로서 유네스코의 자연 유산에 등재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역이다. 실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일찌감치 철원철새도래지, 대암산·두타연·해안분지, 향로봉산맥 일대에 생태계보

<sup>9)</sup> 함광복 (2010), 『미래를 위해 남겨놓은 과거, DMZ』, 통일교육원, p. 18.

전지역 설치를 제안한 바 있었다.10) 어느 전문가는 비무장지대가 원시적 생태계로 회귀되었다기보다는 '전혀 뜻밖의 자연생태계'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지만, 환경조사에 의해 보고되는 바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처한 독수리, 황새, 물범 등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는 현재 북부지대의 경우북한의 경제난과 심각한 산림훼손으로, 남부지대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와 개발로 본래의 생물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어 있는 현실이다.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창조경제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함이 기본과 제라고 할 때, 통일 이후 활발하게 진행될 경제발전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면서 한반도 전체 생물생태계가 복원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즉 경제발전이 환경과 선순환적인 관계로 전개되어나가야 할 것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로 21세기 전세계적인 과제로 인간생존을 위한 환경보존이 주요 관심사로 되어 있고, 환경과 선순환관계를 맺지 않는 경제개발은 결국경제발전의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태계보존은 그 지역의 발전 및 경제적 가치 산출과 연계되어야만 지속가능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생태보전과 연계된 남북 경제협력사업으로서 접경지대에서의 남북공동 유기농 농업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접경지대를 생태보존·평화벨트화하고 생태·문화체험·관광지대로 조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와 맞아떨어지면서 남북한에 상생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난 이후 저개발이 초래한 환경의 위기와<sup>11)</sup>함께 만성적인 식량난에 처해 있다. 피폐해진 환경을 복원하면서 식량문제도 해

<sup>10)</sup>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민통선지역의 생태계보전과 지역사회활성화 동시달 성을 위한 조사연구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p. 18~23.

<sup>11)</sup> 저개발이 초래한 환경위기란,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원인 에너지와 식량부족이 환경악화를 초래하고, 이 환경악화가 다시 에너지와 식량문제를 보다 악화시키고 또 이것이 재차 환경의 악화를 초래하는 구조를 말한다.

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남한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와 개발 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위협을 받고 있고, 소득증대에 따라 친환경적인 식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접경지대에서의 남북한 유기농 농업혐력은 직 접적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접경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며 한반도 전체의 경제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사안보적 공간으로만 통용되어왔던 접 경지대를 경제협력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 업은 '먹거리' 생산이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생명인식을 일깨워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 실행계획

#### ① 추진목표와 전략

첫째, 남북 접경지대가 생태보존·문화체험·관광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져 평화벨 트화하는데 기여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남북공동의 유기농 농업 단지를 조성하도록 한다. 그동안 남북 접경지대는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뜻밖의 선물인 천혜의 자연생태계 지역이지만, 경제적 낙후성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적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현재 환경부가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 로 지정받으려 하는 지역으로서 장래에도 생태환경권이 보전되어나가야 하는 지 역이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분단이전 시기에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되는 지역으 로서 대륙으로의 물류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던 교통결절점 지역으로서 그 기능 이 복워되어야하고. 아울러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다. 통일 이후 한반도 전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전적으로도 생태환경보전과 결합된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둘째, 남북경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상업적 협력사업이 되 도록 한다.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2000년대 중반경까지 남북한은 비교적 다 른 분야에 비해 농업분야에서 남북협력사업들을 많이 진행했었다. 그러나 대부분 은 농기계지원, 씨감자지원, 옥수수종자 지원, 채소 수경재배지원, 젖소목장 지원, 벼농사지원 등 지원성 협력사업들이었다. 일부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수출농업을 육성해 남한시장에 판매해보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사회주의적인 경직된 북한의 농업시스템과 '3통문제'에 의한 원활한 기술지원 및 물자이동의 곤란, 북한의 거부 감에 의한 농사현장 접근의 곤란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었다.12)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과거보다 식량생산량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과 계층에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농업의 복구를 위해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와 농업원 자재들의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하고, 최신 농업기술들의 도입이 절실한 현실이다. 그리고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원천의 개발도 절실한 실정이다. 반면, 남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후변화로 우리 고유의 농업작물들이 한반도 북부지대로 이동할 필요성이 본격 제기되면서, 점차 확대된 토양의 오염으로 안전한 먹거리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한 간 유기농 농업협력은 남북 모두의 이러한 경제적 수요에 맞아떨어진 협력사업으로서 상업적 농업협력이 가능하다.

셋째, 남북 양 지역 민간인 통제보호구역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비무장지대는 생태보전지역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정전체제와 맞물려있는 지역으로서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남북한은 비무장지대 바깥에 민간인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민통선을 그어놓고 있지만, 철저한 통제 아래 일부 허락받은 민간인들이 이 지역에서 농사 등 생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에도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일부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기농 농업단지 조성의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추진체계

남북한 신뢰프로세스 가동과 함께 북한에 「남북한 유기농 농업협력위원회」를

<sup>12)</sup> 이종무 (2007),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 《남북 농업협력 10년 - 성과와 과제 -》, 2007년 8월 28일, [한국농촌연구원], p. 71.

제안해 구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접경지대에서의 남북한 유기농 농업협력은, 접 경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이 위원회에 지방자치단 체의 관련 기구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접경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발제한 으로 오랫동안 저개발의 어려움을 겪어왔으므로, 경제적 가치 창출의 주체자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 남북한은 2005년 8월 18일~19일에 열린 남북농업협 력위원회 1차회의에서 북한의 협동농장을 선정하여 남북한이 농업분야 시범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남북한 간 농업기술협력 뿐만 아니라, 북한 의 식량증산을 위한 종자생산과 가공시설의 지원협력도 하기로 협의한 바 있기 때문에 접경지대에서의 남북한 유기농 농업협력의 시행가능성은 여건만 조성되 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기농 농업단지는 접경지대를 장기적으로 교류 협력벨트화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남북 양 지역의 민간인 통제보호구역에 설정하도록 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도 '남북교류접 경벨트'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남북관계 추이에 따라 접경벨트에 남 북한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할 것을 보고서로 제안한 바 있다. 개성공단사업과 금 강산관광사업은 남측 인력이 북측에 들어가 일하는 구조로 쌍방향적이지 못하고 3통문제라는 한계를 가졌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상 호 신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한 양 지역에 걸쳐 협력공간을 만들 필요 가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인력 이동이 민간인 통제보호구역으로 한정되므로 체 제에 대한 영향을 걱정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력지역으로는 남한의 경 우 강화군의 교동면지역, 연천군의 신서면지역, 철원군의 구철원지역, 고성군의 현내면 지역들이, 북한의 경우에는 개풍군 및 판문군지역, 철원군 맞은편 지역, 북고성군지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지역들은 인근에 광할한 평야지대와 용수공급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점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한 유기농농업 공동사업 방식은, 금강산관광사업이 진행될 당시 북한의 북고성군에서 추진되었던 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고성온실농장협력사업은 남한의 북고성군농업협력단과 현대아산, 그리고 북한의 조선국영고성남새온실농장 간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 경우 당국이 개입되지 않은 민간의 농업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여기서 생산된 온실채소들은 유기농재배로 생산되어 금강산 현지 남한 관광객들에 의해 소비되는 구조였다. 그리고 채소재배에 필요한 모든 농자재들을 남한이 공급해주고 그 대가로 생산된 채소를 납품하도록 했었다. 13) 북한은 노동력과 토지만 제공할 뿐이었지만, 북한의 협동농장 농장원들은 생산된 채소의 약 40%정도를 자신들의 시장에 판매해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 이 방식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곤란하지만, 이 방식을 참조해서 남북한이 윈-윈하는 운영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남북한 강, 섬, 육지 접경지역 관광협력

#### 가) 추진 필요성과 의의

남북한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중앙지대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남북한의 완충지대로 교류협력의 주요 거점 및 경유지로서 높은 발전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요한 국가 간선 교통망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남북 간의 연계와 함께 대륙과의 연계 거점지역이기도 하다. 접경지역은 안보 및 역사적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개발 가치가 높으며, 자연생태자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한편 미개발 토지자원이 풍부하여 남북교류협력지구로 지정 평화시, 평화공단, 대단위 농업

<sup>13)</sup>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성온실농장 농업협력사업은 연불수출하의 현물상환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아산은 농장의 시설재와 농자재를 turn-key 방식으로 연불수출하고, 농장운영에 필요한 유동자본재도 공급했었다. 연불수출금 상환은 현대아산이 정한 품목과 양을 북측 농장이 납품하는 방식이었다. 총납품액의 60%는 시설재 투자자금 상환 명목으로, 40%는 현대아산이 현금으로 구입하는 방식을 취했었다. 김영훈·권태진 (2003), 『북고성군 온실농장 협력사업 사례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지개발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14)

특히 남북한 접경지역은 반세기 동안의 출입의 통제와 규제에 의해 자연환경 이 보전됨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15) 특히,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서 사라져 가는 희귀생태자원들이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 보전의 가치가 높고 나아가 연구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은 다양한 생태계의 복구가 이 루어지고 있어 생태계 연구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강, 섬, 육지 접경지역의 협력이 이뤄질 경우 경제·문화·관광의 통합적 특구를 완성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한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 및 레저 사업개발의 지연 등에 따라 서비스 산업이 낙후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서해와 동해지역을 연결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 낙후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 문화교류를 통한 인적왕래를 활 성화시켜 경제협력의 상승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는 물론 미래 중국인들의 국내 관광이 크게 증대할 것을 대비해 중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상품을 집 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접경지역 활용은 평화의 개념을 남북 간의 정치적 군사적 평화만이 아니라 지역사 회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평화, 이 지역의 환경 및 생태계와 인간 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확보하는 것까지 목표로 확대하여 정치군사적 평화, 지역사회 의 지속가능한 삶의 평화, 생태·환경적인 평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남북한 강, 섬, 육지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공동사업은 분단 전에 서로 활발히 소 통하던 도서지역과 육지지역의 관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은 자연환경의 부자연스러운 분단의 복원이

<sup>14)</sup> 김영봉 (2013), "남북공유하천과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한반도 '그린 데탕트' 의 길을 찾는다》, 2013년 5월 7일, 2013년 민화협 정책토론회, pp. 42~43.

<sup>15)</sup> 김영봉 외 (2002), 『남북협력을 통한 임진강유역의 평화적 활용에 관한 연구』, 국 토연구원.

라는 관점에서, 바다만이 아니라 남북한의 옹진군, 인천시, 황해남도 연안 지역 등 육상지역과의 연계를 함께 고려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산 유통 및 가공, 어족자원보호, 관광 등 다양한 사업이 분단 이전에 이 지역에서의 인간과 환경과의 자연스런 관계가 복원되는 방향으로 구상,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주요 사업내용

① 인천 - 개성지역 서해연안 관광단지 및 연계상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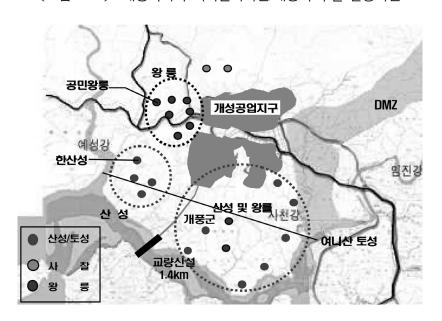
인천의 강화도, 영종도 등 섬지역과 DMZ를 연계하는 생태환경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천과 개성은 남북분단의 강인 한강, 임진강, 예성강 접경도시들이며, 남북한 분단 60년은 민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기도 했으나, DMZ를 중심으로 독특한 문화를 창조했다. 따라서 섬지역뿐만 아니라 한강, 임진강, 예성강관광은 생태관광임과 동시에 분단 극복과 평화의 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우선 시범적으로 인천지역과 개성지역 관광단지 및 연계상품을 개발하여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여행자 및 체류자를 유치한다. 개성 남대문, 선죽교, 숭앙서 원 등 개성시내 관광자원과 고려 태조릉을 비롯한 왕릉, 그리고 송악산 일대의 관광자원 등을 인천의 용유, 무이지역 및 일왕리, 동막 등의 해수욕장과 연계 개 발을 통한 서해안 관광레저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자원을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강화도와 개성지역을 연계한 역사, 안보, 자연생태계 관광 등 종합적 관 광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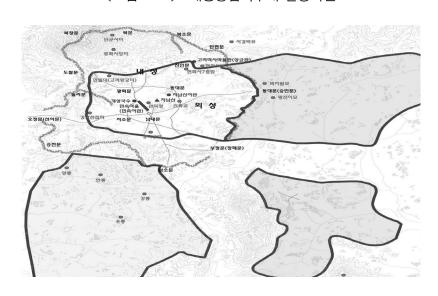
개성은 고려왕조의 도읍지이므로, 고려왕궁터, 선죽교, 고려성균관, 왕건왕릉, 공민왕릉, 만월대를 비롯한 수많은 역사유물이 있고, 개성공업지구 인근에도 많은 유적이 있어 고려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는 2007년과 2008년 상반기 개성관광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또 인천의 강화도는 몽고군 침입 시 공식 도읍지로서 고려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양 지역의 연계관광은 고려를 대표하여 경주의 신라 문화권, 공주·부여의 백제 문화권, 평양의 고조선·고구려 문화권, 서울·수도권 일원의 조선왕조 문화권과 함께 5대 역사관광권의 하나로 부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자연환경 측면에서 보면 한강하구 및 그 연장선상에 있 는 지역이며, 또한 서해연안의 접경지역으로서 비무장지대의 생태축과 도서연안 자연생태축이 만나는 지역이라는 다양한 성격과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지역의 생 태·환경적 가치를 논할 때 한강이라는 대형 하천의 하구 지역이라는 특성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강하구는 새만금사업 이후 남한 유일의 열려진 대형 강 의 하구이다. 한강하구와 갯벌은 서해안 생태계 및 수산업과 직결된 핵심적인 장 소이며, 한반도에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어 하구 생태계와 그 운영체계 를 연구할 마지막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고려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발굴하고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재정립하게 되면 이 는 역사, 문화 교육의 장이자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한강하구에서 시작되는 해상크루즈와 육로를 이용한 역사문화 탐방이 결합된다면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개성지역의 역사문화자원/개성시 주변 관광자원



[그림 4-2] 개성공업지구내 관광자원

인천-개성의 연계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연계관광의 차원을 넘어 유사한 테마들의 연계를 통해 상호 원-원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연계가능 테마로는 '고려역사문화', '생태환경체험' 등을 들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함께 개성주변의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개성지역의 관광자원을 '역사적 관광자원 개발',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 '생태환경적 관광자원 개발'의 세가지 테마로 범주화하고 이들의 상호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한다면 국제적 관광명소가만들어 질 수 있다.

관광벨트 개발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투자규모를 감안하여 3단계로 구분 하여 추진할 수 있다. 1단계는 기존의 도로망을 활용하여 인천-개성의 개별 관광 상품을 연계시키고 2단계는 인천 - 개성의 해상로를 연결하여 해상관광을 연계시 키며, 3단계는 강화와 개풍을 직접 연계하는 연육교 건설을 통해 이를 직접 연결 하는 육로관광 연계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 ② 동해 -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인천-개성 지역의 연계를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북한의 동해, 서해안을 연결하 는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③ 한강하구 생태 및 역사관광16)

한강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17) 국내 유일하게 바닷물이 거 슬러 옴을 막기 위한 하구둑이 설치되지 아니한 하천으로 원시 자연 상태를 유지 하고 있다. 장항습지(고양시), 산남습지(고양시 구산동, 파주시 산남면, 김포시 전 류리), 시암리습지(김포시) 등 대규모 습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태계가 발달되 어 있고, 저어새의 산란지인 유도(김포시 월곶면) 등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4-3] 서해연안 접경지역 및 한강하구

자료: Daum, <www.daum.net>.

<sup>16)</sup> 심의섭 (2007), "한강하구 지역자원의 평화적 이용방안", 2007년 4월 10일 《(사)남 북물류포럼 정책간담회》, p. 11.

<sup>17)</sup> 기수역(汽水域, brackish water zone)은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 바닷물과 서로 섞이 는 곳을 말한다.

특히, 저어새, 매,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등 멸종위기종18) 1급 4종, 재두루미, 개리,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 2급을 포함하여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황오리 등 조류 16종, 23만여 마리가 한강하구를 찾아들고 있다. 특히 한강하구 습지보호지 역 지정 후 모니터링 결과, 멸종위기종 6종(1급 2종 : 참수리, 노랑부리저어새, 2 급 4종 : 큰고니, 가창오리, 검은 목 두루미, 흰 이마 기러기)이 추가 발견되었고, 포유류인 삵, 녹생식물인 매화마름 등 멸종위기종 2급 22종이 서식 또는 도래하 는 등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 보호가치가 매우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금개구 리, 맹꽁이 등 양서류 2종, 녹생식물인 매화마름 등 멸종위기종 2급 26종이 서식 또는 도래하고, 대규모 습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태계가 발달되어 있는 등 보호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 이에 따라 한강하구 유역의 보존 개발 논의는 매우 다 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한강하구와 서해 접경지역 전체를 '해양평화 공원'으로 만드는 구상, 조강(한강·임진강 합류부~유도) 일대에 '항만항구'를 건설하자는 제 안, 그리고 한강하구를 '생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제안 등이 있다. 전문가 들은 남북 평화공존의 시대에 한강하구의 물길을 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앞서 천혜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④ 서해 해양평화공원 구상

'국제해양 평화공원' 구상은 한강하구를 포함해 서해 접경지역 일대에 해당되는 것이다. 2005년 6월 22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해 채택된 이 안은 한강하구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서해 연안 남북 경계선 일대를 남북이 함께 해상공원으로 관리하자는 구상이다. 이어서 해양수산부는 2006

<sup>18)</sup> 멸종위기종 I급 4종(저어새, 흰꼬리수리, 매, 검독수리), Ⅱ급 22종(재두루미, 개리, 큰기러기, 물수리, 솔개, 말똥가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흰목물뗴새, 흑두루미, 흰죽지수리, 큰말똥가리, 털발말똥가리, 참매, 새홀리기, 알락꼬리마도요, 붉은발말똥게, 삵, 금개구리, 맹꽁이, 물장군, 매화마름 등).

년 2월 12일 저어새, 두루미, 물범 등이 서식하고 있는 한강하구와 백령도 사이 를 '국제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 해역이 한반도 평화조성 및 통일 노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지역인 데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협력분야 등에서 남북 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보 고 평화공원을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철새 및 생물종 보호를 위해 2006년 4월에 한강하구 지역을 습지보 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경관 보전방안, 생태계 관리방안, 생태관광 활성화 방 안, 지역주민 지원방안 등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 적인 보전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습지지정지역 중 생태계가 우수한 일부지역을 람사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DMZ와 연계하 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을 추진하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이 수 도권에 인접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Eco-Tourism)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양평화공원제도 운영의 기본 목적은 '생태적 가치, 천연 및 문화자원의 보호 (protection)'와 '평화와 협력의 증진(peace)'에 있다. 분쟁의 바다 서해에 해양평화 공원을 만들 수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평화 가능성을 확인시켜 줄 것이 며, 국제적인 평화관광 지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해양평화공원은 해양생태 보존과 지속가능한 평화 경제지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해 평화 협 력지대를 3대 권역으로 세분화할 경우, 백령-대청 권역은 해양 평화공원, 연평 권역은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구역, 강화 - 한강하구 권역은 역사문화와 환경 보존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해 해양평화공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백령 - 대청 권역과 연평권역을 포함하며, 해당지역 과 접경하는 북한의 연안 지역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역사생태관광 지대의 구축이다. 서해 해양평화공원 구 상에서 백령도를 중심으로 장산곶과 인당수 지역을 평화 관광지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이 협력단지가 될 경우, 백령도 - 장산곶 지역은 자연스럽게 육로를 통 한 접근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북 관광을 위한 국제적인 거점을 확보하는 것일 수도 있다. 1차적인 대상은 중국관광객이 될 것이다. 해양 평화관광지대의 형성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을 한반도 생태관광의 상징적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백령도 인근해역의 물범 서식지를 비롯하여, 이 지역의 해양 생태를 보존하면서, 지속가 능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다섯째, 해주만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해주항만을 환경친화적 수변공간(waterfront)으로 조성하고, 다목적 기능을 담당하는 경쟁력 있는 미항(美港)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⑤ 서해뱃길 복원 및 생태·환경·역사문화 소재 연안 크루즈 도입

강화도~한강·임진강·예성강 하구에 이르는 삼각크루즈(Triangle Cruise) 항로를 개발해야 한다. 크루즈 선박 운항을 위한 준설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크루즈 선박과 육상관광, 외해관광을 연계하여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크루즈 선박은 강화군, 예성강하구, 개풍군일대 등육상관광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강화군~해주항~장산곶~백령도를 연계하는 외해 크루즈는 별도 노선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성~해주~옹진군을 연결하는 육로관광' 및 '북한↔백령도 연계 관광'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⑥ 임진강, 북한강 유역에서의 자연생태계 및 역사유적 관광

임진강 및 북한강 접경지역은 생태계의 보고라고 일컬어지고 있어 남북이 공 동으로 보호하면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많 은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임진강유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희귀한 동식물을 남북이 공동으 로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진강유역의 접경지역은 역사적 유적이 풍부하여 공동으로 역사문화 유적조사발굴 및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가능한 사업으로는 비무장지대 내 궁예도성과 고려유적 등이 있다. 북한강유역은 구석기와 신석기 등 고대유적이 발굴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문화 역사자원도 풍부하다. 이 지역 의 주요 문화자원으로는 화천의 탑둔리·위라리 유적, 청동기 유적, 간척리 선돌, 양구의 파로호 상류지역의 선사유적, 고인돌 등 다양한 유적이 발굴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 역사자원의 남북한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 은 적절해 보인다.

#### 다) 실행 계획

상반기에 남북한 강, 섬, 육지 접경지역 관광협력을 위한 단계별 개발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관계부처별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작성하고, 분기 별로 이행을 점검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그린 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공동연구 등 평화적인 이용을 중점사업으로 선 정한 바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환경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 및 주변 생태계우 수지역의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추진에 대한 남북공동합의를 거쳐 남북한 공동 생태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용도구획 설정 및 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MAB)에 신청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주요 생태자원을 중 심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보전과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 야 할 것이다.19)

남북한 강, 섬, 육지 접경지역 관광협력과 관련한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지역에 대한 남북공동의 정밀 생태·환경조사, ②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현황, 사회경제적 이용특성 등을 고려해서 보전-전이-이용 등으로 구획

<sup>19)</sup> 김영봉 (2013), "남북공유하천과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p. 55.

하는 용도구역제 도입, ③ 전략환경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통한 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 검토, ④ 충분한 공론화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순차적 혹은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근본적 요소로서⑤ 남북이 공동으로 해당 수역의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군사적 평화체제 구축을 기본목표로 경제적 평화와 생태환경적 평화를 조화롭게 추진한다. 단기, 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초기에 제도적 틀을 합의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갈등발생요인(남-남, 남-북)을 사전에 차단하고,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한 남북한 강, 섬, 육지 접경지역관광협력을 위한 정부내 추진부서 혹은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한다. 접경지역관광협력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태스크포스팀은 논의 진전에 따라 정식부서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 남북관광협력을 위한 특별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남북 고위급 회담 의제로 제안할 필요도 있다. 추후 열릴 회담에서는 합의사항 이행방안 및 남북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를 통해 접경지역 남북관광협력을 위한 프로토콜(관광범위 설정, 단계별 추진체계 등)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북한 측과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회담 결과를 토대로 접경지역 관광협력 추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남북 직접교류협력과 국 제기구를 연계한 교류로 다각적 접근을 통한 성과 극대화도 도모해야 한다.

# 3) DMZ 평화산업

#### 가) 추진 필요성과 의의

한국은 오랜 분단과 북한의 도발적 행동 때문에 세계에서 매우 불안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는 이념갈등과 군사적 대결

이 첨예화된 냉전시대의 상징적 장소로 각인되어 있다. DMZ는 좁게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넓게는 유엔의 모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국제적 대상지역으 로서 이념대결의 냉전적 갈등과 평화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담고 있는 상징적 공 간이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대립으로 세계인들이 한반도를 위험지대로 인식 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와 세계적 관심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경제적 자산으로 만들려는 창의적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산업과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중견국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국의 반열에 서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남북의 분단상황 이나 통일문제는 한국인의 것으로만 인식되기보다는 세계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분단과 통일의 문 제를 세계가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담론과 정책을 바꾸 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첨 예한 이데올로기 갈등이 구조화되어 있고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전쟁의 트 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하는 평화와 갈등해소, 트라우마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통일문제는 인류가 갈망하는 평화 의 형성이나 갈등해결, 심리적 트라우마의 치유를 한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실현 해 내는가를 세계에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분단극복과 남북협력도 단순히 남북한 간에 지속적이고 융합적인 협력모델을 찾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이러한 융합적 모델이 한 반도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세계인들에게 정치군사적 갈등 상황에서 협력과 평화 를 구축하는 희망적 메시지를 주는 원대한 행보이기도 하다. 한반도와 세계가 소 통하는 방식으로서의 창의, 융합형 남북협력모델의 의미를 더 부각시켜도 좋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협력사업에 평화의 가치를 접목하여 세계인의 관심을 유인하는 사업을 구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그린데탕트'와 '비전코리아'는 한국이 지니는 '분단' 상 황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 '평화'의 가치로 활용해 나 가는 창의적 기조 위에 입각해 있다. 한국을 세계적 냉전시대의 치열한 전장으로 기억하는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전쟁의 고통과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경제와 문화의 강국을 건설한 우리 역사는 기적이며,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제 세계는 분단의 극복과 남북협력을 통해 세계인이 소망하는 평화의 실현이 어떻게가능한지 한국인에게 기대하고 있다. 평화의 문제는 매우 절실한 인류적 과제로부상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민족적, 지역적, 문화적, 종교적 갈등이 만들어내는다양한 폭력과 증오, 갈등을 관리하고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지고 있고 문명론적 평화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분단극복과 남북협력은 바로 인류가 당면한이러한 평화의 문제가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한반도발 평화의 메시지다. 이데올로기 갈등이 딱딱하게 구조화된 집단들 간의 화해와 평화가 어떻게가능한가를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감동의 드라마이자 희망의 메시지다.

이런 점에서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동북아와 전 지구적 공간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사건이다. 지난 30년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빠른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준 한국은 지금과학기술과 정보화, 스포츠와 음악, 예술 영역에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세계인들이 분단코리아에 거는 기대 또한 결코 작지 않다. 전쟁을치른 한국과 조선이 폐쇄적 울타리를 헐고 평화를 성취한다면 인류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분단극복과 남북협력에 평화의가치를 적극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한다. 한국의 분단상황을 평화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는 창의적사고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나) 주요 사업내용

#### ① 세계평화공원 조성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모두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있고 관심이 높으므로 '평화박물관' 또는 '평화공원'을 DMZ 평화산업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세

계적으로 분쟁이 심각한 여러 지역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평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평화공원 안에는 '생태공원' 과 '평화박물관' 등 평화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갖추는 것이 보통이다. 한반도에서는 이데올로기 분단과 전쟁의 아픔, 무력충돌과 인명희생, 가족이산의 눈물, 그러나 남북한이 함께 노력한 화해의 노력, 한국정부가 신념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포용의 정신과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과 주변 공원시 설들을 아우르는 평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평화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 서 언급을 한 바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으므로 조만간 청사진이 나올 것으 로 생각되는데, 접경지대를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와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궁예도성이 있는 철원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고성 2곳을 세계평화공원 최적지로 보 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철원지역은 개발이 쉬 운 평지인데다 옛 궁예도성 터를 복원하면서 평화공원을 조성할 경우 남북 양측 모두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또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고성은 양양국제공항 등 교통망 확충도 이미 조성돼 있어 접근 성과 관광객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6년 DMZ를 생태체험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평화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세워 지 난 2009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생태탐방로, 에코뮤지엄거리 등 세부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파주 군내면 백연리 일원에 총 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DMZ 일원에 평화공 원이 조성되면 세계 최고의 생태 역사 안보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 ② 유엔평화기구 유치

DMZ 안에 유엔평화기관을 유치한다든가 평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수 있다. 기존의 문화, 환경, 산업에 평화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국제적 프로젝트를 여기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인근에 평화생태공원과 조화를 이루며 세계평화의 상징으로서 유엔의 평화관련 기구를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엔본부가 뉴욕과 제네바에 설립되어 있듯이 유엔평화구축위원회(UN Peacebuilding Commission)와 같은 몇 개의 유엔 평화기구를 유치하는 방안이나, 또는 '유엔평화센터'를 건립하여 유엔의 평화관련 기구를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유엔환경기구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엔평화병원과 같은 시설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부경대학교 등 몇몇 대학과 기관이 유엔평화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최근 한국에 유치하여 운영하다가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 유엔평화대학도 이곳으로 유치하여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University for Peace (UPEACE)로 이름을 달고 있는 유엔평화대학은 한국외대 등 평화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의할 수 있는 대학의 공간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DMZ에 유엔평화기구를 유치하게 된다면 그 안에 유엔의 여러 평화기구와 함께 유엔평화대학도 포함하여 DMZ를 유엔평화지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DMZ 안에 유엔평화센터를 건립하고 유엔평화기구를 유치한다면 분단 한반도의 평화브랜드 가치가매우 높아질 것이다. DMZ는 생태평화의 개념과 녹색평화의 가치를 담고 있어유엔평화기구를 유치할 경우 한반도의 평화브랜드 가치는 더 없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판문점을 세계평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평화센터나 평화기구의 유치의 중심도시는 판문점으로 하여, 냉전시기에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조인식이 이루어졌고 분단과 군사적 대결이 상징적인 도시를 세계적 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마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을 기억하고 있는세계인들에게 두 도시를 평화의 도시로 발전시킨 일본처럼, 한국도 한반도의 가

장 불안하고 암울한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는 판문점을 세계적 평화도시로 탈바 꿈하고 이러한 '평화도시' 건설을 평화산업으로 연결함으로써 한국의 경제를 창 조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③ DMZ 평화문화산업

DMZ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활용하여 평화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적극 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평화문화산업으로 <DMZ 평화콘서트> 를 기획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미 몇 차례에 걸쳐 DMZ와 가까운 지역에 서 '평화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파주시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동으 로 주최하고 KBS와 MBC 등 방송매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K-POP 가수들과 평 화,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의 음악인들이 공연을 펼치는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최근 아시아는 물론 유럽 전역에 K-POP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들이 젊음과 평화를 노래하며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대를 초월 한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임진각 평화 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주로 진행했었는데, 이러한 평화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는 음악당을 DMZ 안에 설치하고 언제든지 이러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동북아 및 세계의 젊은 세대들이 한류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 으므로 이러한 관심을 십분 활용하여 이들을 한반도로 초청하여 국제적 문화행 사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DMZ 평화영화제도 좋은 문화상품이다. 최근 DMZ 평화콘서트와 함께 진행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하도록 홍보하고 주요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DMZ 평화영 화제는 DMZ생태관광과 평화콘서트 등 다른 문화활동과 함께 연계하여 참여하도 록 한다면 세계적인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 분단의 현장을 안보상품화했던 데서 더 적극적으로 평화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마인드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 ④ 철원 평화산업단지

철원 평화산업단지는 정부의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의 4대 평화사업의하나로 통일연구원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아이디어다.20) 손기웅은 4대 중점전략사업으로 파주세계평화문화타운,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유네스코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고성 유엔환경기구 유치와 함께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평화산업단지는 개성공단과 쌍벽을 이루는 산업지대로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는 남북협력 공단지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이 북한지역에 위치하여 여러 가지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남북한 인력이 DMZ를 오가며 교류하는 새로운 개념의 남북경협을 '평화산업단지'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경원선과 금강산선의 복원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한다.

국내의 산업은 초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ICT를 비롯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고임금 고지가로 인해 제조 기업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력의 이용에도 한계가 있고 언어문화적 제약도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토지비용과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면서 생산성이 월등하고 언어의 이질감이 없는 북한 인력 활용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북한노동력을 이용하는 평화산업 개발이 시급하다. 공단 조성비용에서 고지가는 기업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짐을 고려할 때 수출입이 용이한 물류유통망의 거점 지역이면서 동시에 저렴한 토지비용 및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철원지역은 기업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투자지역이다. 21) 내수 시장 불황으로 인한 공단지역의 슬럼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 성장 주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sup>20)</sup> 손기웅 외 (2012),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통일연구원.

<sup>21)</sup> 위의 책, pp. 40~41.

수 있는 신경제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결국 한반도 경제성장 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북한개발 및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거점으로서 평화 산업단지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이다.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은 기존 개성공단사업의 역개념으로서 북측 지역이 아 닌 남측 지역에 중심을 두는 공단을 조성하는 형태다. DMZ는 남북측 철원 평화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통로적 역할만 하도록 하여 최소한으로 이용하는 호리병 형태로 조성하되, 남측 철원지역에 산업단지의 주요 시설이 들어서는 남측 중심 의 산업단지로서 북측 근로자가 남쪽 철원 산업단지로 출퇴근 하는 새로운 남북 경협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 평화산업단지 조성은 향후 남북한 자원공동개발 사업, 에너지연결사업, 금강산관광철도연결사업 등 남북 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동북아 물류유통의 중심지로서 동북아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다. 평화산업단지가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사업과 연동되어 추진되며 중국 및 시베리아횡단철도 사업 추진과 연계되어 동북아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이 가 시화될 경우 국제자본 유입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동북아 지역 경제거점으 로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22)

#### 다) 실행계획

#### ① 추진목표와 전략

이러한 평화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접경지대를 분단과 갈등, 대 립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바꾸어 내려는 창의적 마인드가 가장 먼 저 필요하다. 분단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유지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는 역발상을 해야 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한반도의 분 단현장을 방문하고 싶어하고 군사대결의 역사적 현실을 체험하고 싶어한다. 방 문객들의 이러한 심리와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DMZ와 접경지대에 걸맞는 평 화산업을 개발하여 경제활성화에 창조적으로 연결시킨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

<sup>22)</sup> 위의 책, pp. 43~44.

야 한다. 이러한 평화산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 산업을 통해 한반도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세계의 이 목을 집중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실제로 구현해 내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가장 이상적으로는 북한과 평화의 공간적 활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평화산업을 DMZ 안에 조성하여 남북한이 원-원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남북한 간에 최소한의 무력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상호간 합의가 있어야만 실제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협력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북한의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평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단계에서는 한국이 DMZ인근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DMZ남측 지역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확정하고 '유엔평화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도 지정하여 경기도 및 강원도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남북의 군사적 대립과 분단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지역과 부지를 선정하고 인근에 개발할 문화, 생태, 역사의 복합적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 2단계로 북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DMZ 안에 있는 판문점을 세계평화도시로 개발하는 사업과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완전한 평화협정을 타결한다면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북한의 일정한 협력 하에 DMZ를 평화생태공간 또는 남북의 평화협력지대로 지정, 선포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판문점은 더이상 대결의 장소가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세계평화 공원을 판문점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조성함으로써 판문점이 세계평화도시로 탈바꿈할 경우 평화박물관과 유엔평화기구, 유엔평화센터 등도 판문점에 유치해야할 것이다. 개성공단과 같은 산업시설을 DMZ남쪽에 조성하는 것이므로 북한으

로부터 약간의 협력만 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한의 군당국이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만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DMZ 평화산업이 남한과 북한의 전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통과 통신 인프라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세계인들이 이 지역을 손쉽게 방문하도록 하려면 인천공항과 서울시내에서 판문점과 평화산업 지역으 로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교통과 통신 인프라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강 원도 동해안 지역으로 평화산업이 개발된다면 양양, 속초 등 동해안 지역에 국제 공항을 재정비하고 설악산과 금강산 국립공원을 연결한다든가, 환경친화적인 전 기버스나 모노레일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추진체계

평화산업을 발굴, 발전시켜 나가려면 이러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대통령 직 속기관 형식의 'DMZ 평화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접경지대 평화산업은 생태관광과 연계된 '세계평화공원', 유엔평화기구 를 유치하는 사업, 평화문화산업, 평화산업단지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으 므로 위원회 산하에 네 개의 분야로 나누어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산업발전위원회는 남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 혀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남북한은 물론 해외인사들을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 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책연 구기관과 국내외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모든 사안에 대해 함께 모여 모두 동시에 토론하는 총합적 공동연구로 진행하여 제시되는 정책방 안의 전문성과 적실성, 실현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위에서 제시한 평화산업 개발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절대적 호응이 있어야 하 는 것이므로 국가적 전방위 외교를 펴나가야 한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환경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 중앙 및 지방정

부의 여러 단위가 동일한 목표의식을 갖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정치적 협상으로 진행되는 한반도 통일이 이러한 창의적 평화산업을 중간단계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모든 부서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직접 기여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하는 데 있어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이 어렵고도 중요하다. 북한도 유엔의 회원국이므로 유엔 평화기구를 함께 유치하고 세계의 평화지대를 조성하는 데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대북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의 불안과 위기의 진원지인 북한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협력을 이끌어 내느냐가 DMZ 평화산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된다. 북한을 설득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의 상징적 공간인 DMZ를 평화와 화해의 상징적 장소로 변환시키려는 한국의 평화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한국의 평화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나. 민족공동 문화자산의 관광산업화

# 1) 추진 필요성과 의의

'민족공동 문화자산'이란 북한에 사회주의체제가 성립되기 이전 단계에 형성 된 일체의 민족문화자산을 의미하며, 특히 현재는 북한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미 래에는 다시 민족공동의 문화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자원을 말한다. 구체 적으로는 유·무형의 문화재로 이루어진 민족문화유산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또 한 민족공동 문화자산의 개념 속에는 그 보존과 활용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 력해야 나가야 한다는 미래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족공동 문화자산의 관광산업화는 좁게는 북한 내 민족공동 문화자산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을 말하며, 넓게는 남북한의 민족공동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문화

관광' 차원에서 '남북관광'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공동 문화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서는 북한의 관광산업이나 남북관광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 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민족공동 문화자산 관광산업화의 필요성과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공동 문화자산의 관광산업화는 문화유산분야 남북 문화교류협력사 업을 '보존과 복원을 위한 협력'에서 새로운 가치를 재생산하는 '상생 협력'의 단 계로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남북 문화유산 교류는 유물 전시회, 유적 관련 공동 조사 및 연구, 문화유산 관련 학술행사 개최, 문화유적 복원공사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초창기인 1990년대에는 베이징이나 도쿄에 서 남북한 역사학자들의 학술행사가 주를 이루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북한 지역 역사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 등 실제적인 사업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안학궁 발굴조사 사업, 개성 고려궁궐(만월대) 발굴 조사 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 다. 또한 북한 소재 유적지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위한 남북협 력 등 새로운 형태의 성과도 축적되고 있다. 현재는 일체의 교류협력이 중단되어 북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 사업도 미진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향후 남북관 계가 발전되면 이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물 론 민족공동 문화자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 중요하다.

둘째, 민족공동 문화자산의 관광산업화는 남한 국민 및 재외동포에게 민족문 화유산 향유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남한 국민 들은 북한 지역에 소재한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채 살고 있다. 북한 소재 민족공동 문화자산의 관광산업화가 이루어지면, 개성을 중 심으로 한 고려 문화,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문화를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 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유산의 향유 는 현지성과 원형성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므로 북한 지역을 방문하여 향유하는 북한 관광과 접목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북한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에 이어 관광자원화 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민족공동 문화자산의 관광산업화가 이루어지면, 금강산 관광 및 개성 관광에 제한되어 있던 남북관광을 질적으로 고도화하여 남북한이 상생하는 창조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남한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는 관광, 남북한 지역을 동시에 방문하는 명실 상부한 '남북관광' 프로그램도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륙관광'으로까지 확대되면 이는 남북한 모두에게 관광산업의 획기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족공동 문화자산이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족공동 문화자산의 관광산업화는 문화유산분야 남북 교류협력사업과 관광분야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융합형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2) 사업 추진 방안

#### 가) 북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현황

최근 북한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2011년 가을에는 평양에서 국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였는가 하면, 평양공항을 재정비하고, 평양과 지방의 호텔 및 식당 등의 리모델링도 한창이다. 특히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남한 자산에 대한 몰수 조치 후 「국제관광특구법」을 만들어 직접 관광사업에 나서고 있다.

북한에서 제공·운영하는 관광 콘텐츠를 보면, 냉전체제의 현실을 보여 줄 수 있는 것, 북한 사회주의의 '번영'을 나타내는 것, 고구려 고분 등 문화유산을 보여 주는 것,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여 주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 관광코스는 일부 자연 자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체제 선전용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양 시내의 만경대, 개선문, 주체사상탑 등 김일성 관련 기념물을 비롯, 서

해갑문, 동봉협동농장, 청산리협동농장, 계남협동농장, 강서약수공장 등의 산업 시설,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김일성대학 수영 관, 평양교예극장, 만수대창작사 등 문화·교육시설 참관도 체제 선전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지난 2002년부터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대집단체조 와 예술공연 <아리랑>도 주요 관광 코스의 하나로 고정되어 있고, 보현사·성불사 등의 사찰이나 동명왕릉이나 왕건왕릉 등의 문화유적지들도 관광 코스로 정비되 어 활용되고 있는데, 모두 체제 선전과 연계되어 있다.

민족공동 문화자산의 활용 관점에서 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동명왕릉 등 고구려 고분군, 묘향산 보현사 등 불교문화유적 등 문화유산을 활용 하는 유적지 참관형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2년 10월에는 남북한 소재 민 족공동 문화자산의 미니어처로 구성된 평양민속공원을 개관하여 관광명소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요 문화유산은 다음과 같다.

〈표 4-1〉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북한 문화자산 현황

구분	주요 문화자산
선사 유적지 및 고분	단군왕릉, 강서세무덤, 덕흥리무덤, 동명왕릉, 왕건릉, 공민왕릉 등
성곽 및 고궁	평양성, 안학궁, 대성산성, 정방산성, 함흥본궁, 보통문, 대동문, 개 성 남대문 등
불교 유적	보현사, 광법사, 성불사, 안국사,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신계사, 영 통사, 심원사, 개심사 등
유교 유적	숭인전, 숭녕전, 숭양서원, 용곡서원, 소현서원, 고려성균관 등
박물관 및 민속공원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고려박물 관, 함흥력사박물관, 사리원민속거리, 평양민속공원 등
기 타	판문점 등 분단역사 자원, 근대문화재 등

[그림 4-4] 사리원 민속거리(왼쪽)와 평양민속공원



#### 나) 민족공동 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의 방향

관광 콘텐츠는 여행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리적 요소 및 장소성이 기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관광상품을 구성한다 하여도 다양한 요소가 부분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다. 풍부한 역사자원을 기반으로 한 역사유적 탐방이라는 테마 관광상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대중관광이 성립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북한 당국이 원하는 대로사회주의체제 선전 위주의 관광 콘텐츠를 구성하게 되면 외부 관광객의 호기심을 순간적으로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매력성을 갖추는 데 한계를 갖게된다. 따라서 북한 당국 입장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결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당국에서는 2002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공연을 기획하면서 외부 관광객 모집을 겨냥한 관광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실제 2012년까지 계속된 <아리랑> 공연은 북한 관광상품의 대표적인 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10만명 출연의 대공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람객(관광객) 모객에는 뚜렷한 성과를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5년 하반기에는 남한에서 수천 명이 '방북 관광'을 전개한 바 있는데, 이 때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의 <아리랑> 관람을 비롯, 묘향산 보현사, 평양 근교 동명왕릉, 평양시내 만수창작

사, 민예전람관 등 문화유산 및 당대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프로그 램이었다. 남북한이 적대적 대결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한 관광객의 선호를 고려하여 민족공동 문화자산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생각된 다. 물론 북한의 모든 관광 콘텐츠는 체제 선전과 분리할 수 없다.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고향집', 개선문 및 개선광장, 주체사상탑, 예술 공연, 미술 작품 등은 물 론이고 민족의 공유자산인 역사유적지나 유물, 심지어 자연유산조차도 체제 선 전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 2005년의 평양관광 사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의 남한 국민이, 그것도 북한의 일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북한 내지를 직접 방문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 콘텐츠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고 후속 프로그램이 이어지지 못했다.

민족공동 문화자산의 경우 외국인보다는 남한 국민 또는 재외동포에게 훨씬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이므로 남북한 사이의 '남북관광'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은 그 점에서 민족공동 문화자산이 풍부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의 지리적 접근성도 좋아서 '남북관광'의 최적지라 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남북관계 속에서는 외국인들보다 남한 국민들의 방북과 북한에 서의 활동에 훨씬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제약 조 건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남북한이 민족공동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 광산업 의 활성화 방향을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는 남북관계가 개선되 어 상호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북한 전지역에서 개별적인 자유여행 (FIT)은 불가능하더라도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이 재개되어 남북관광이 어느 정 도 활성화된 조건에서 성립 가능한 제안들이다. 물론 이는 관광의 기본 속성이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성립하 기 어려운 제안들이라 할 수도 있다.

첫째, 북한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특히 고구려, 고려 문화자원과 남한의 관광

개발 노하우가 결합하면 '문화관광'에 대한 니즈가 강화되고 있는 세계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상품 활성화가 가능하다. 특히 남한은 오랫동안 인바운드 중심의 관광정책을 펼쳐왔고, 최근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으면서 그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도 '관광=외화벌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관광정책의 주방향은 인바운드 확대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한의 관광 정책 및 관광산업 경험은 직접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관광 활성화 경험을 토대로 한 북한 관광 컨설팅 사업이 상호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박물관은 문화시설이면서 가장 강력한 관광시설이기도 하다. 루브르박물 관이나 영국박물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북한 박물관 교류는 문화교류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 운영 방안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남북한 박물관 사이의 교환 전시 등은 물론이고, 학예·전시기획·교육 등 박물관 전문인력의 상호 교환 근무, 공동해외 연수 등을 기획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민족공동 문화자산의 유지·관리와 연계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남북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에서의 성공 사례만이 아니라 실패 사례 등도 함께 연구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재의 복원이나 민속공원 건설 및 운영에서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고하겠다. 북한에서 사리원 민속거리에 이어 최근 평양민속공원이 운영되고 있다. 낙안읍성과 같은 민속마을 사례도 북한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북한 지역에 산재한 고구려 산성들을 복원을 해 놓으면 그 자체로 매력 넘치는 관광자원이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민족공동 문화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 전체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 복원하여 현대 속에 공존하는 과거 도시를 만들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박물

관'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자체 계획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개성지역의 고려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도시' 조성은 남북한이 공동 부담해야 의무라 할 수 있다. 개성시와 그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역사문화 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자원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활용 관련 인프라 가 구축되면, 그 자체로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다만 개성 의 한옥마을 정비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고려궁궐 복원 등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투자되어야 제대로 된 '역사문화도시 조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거 기에 현재의 고려박물관은 고려성균관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고, 대신 '고려박물 관'을 별도로 건립하여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개 성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은 보존 정비와 복원을 제대로 하면 경주나 제주 못지않 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인천공항이나 서울·수도권에서의 접근 성, 그리고 분단 시대를 상징하는 판문점과의 인접성 등 확장성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통일 이후에는 벽란도 포구까지 복원 정비를 하게 되면 고려시대와 현대 가 어우러지는 최고의 명품 문화도시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관련한 남북한 협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과거의 무형문화유산을 원형대로 향유하는 것을 '복고주의' 라 하여 비판하는 정책을 취함에 따라 남한과 같은 무형문화유산 보존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최근 북한에서도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비물질문화유산법」 (2011) 제정을 참고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포함한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 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북한의 법제 정비가 이루어진 만큼 조선족이 보유 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중국이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데 대한 남북한의 공동 대응과 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봉산탈춤, 북청사자놀음 등 북한에서 이미 사라진 무형문화유산 가운데는 남한에서 전승. 보존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북한 현지에서 전승될 수 있도록 남북한이 협력하는 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형문화유산의 복원은 그 자체가 매력 적인 지역 관광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관광상품과 연계되는 활용 효 과도 높다. 또한 안동탈춤축제와 같이 북한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속축제도 기획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민족공동 문화자산을 매개로 한 남북한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상품에서는 지리적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남북한 연계 관광상품은 경기도나 강원도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성지역, 철원지역, 설악산-금강산 지역 등이 그 예이다. 철원지역의 경우 분단의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 줄 수 있으면서 옛 태봉국 궁궐터가 있는 DMZ가 있고, 경원선과 금강산선을 통해 남북한이 연계될 수 있다. 특히 금강산선은 서울 수도권에서 짧은 시간에 내금강 지역에 도달할 수 있어서 일제강점기 때 이용객이 매우 많았던 철도이다. 금강산선이 복원된다면 서울과 철원, 내금강 지역이 연계되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가 만들어지게 된다. 연계 관광의 가장 큰 그림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TCR, TSR 등)가 연결되었을 때 실현 가능한 남북한 연계관광이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관광과 대륙관광을 연계하는 상품이가능하게 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철도를 통한 남북한 연계 관광이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주요 사업 내용

#### ① 개성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개성은 고려의 수도로서 다양한 문화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이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성역사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개성 일원을 '개성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면 경주나 제주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성지역은 만월대, 고려박물관, 숭양서원 등 정몽주 관련 자원, 왕건왕릉, 관음사 등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자원이 풍부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개성 한옥마을, 박연폭포 등도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들이다.

또한 개성은 판문점과 연계된 관광상품의 구성이 용이하여 외국인에게도 인기

가 있고, 남한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남한 국민을 타깃으로 한 단기 관광상품 운영도 용이한 지역이다. 인천공항이나 서울 수도권과의 접근성, 분단시대를 상 징하는 '관광명소'인 판문점과의 인접성이 높으며, 벽란도 포구로 해양문화자원 까지 연계 개발하면 최고의 명품 문화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기반 조성사업으로는 한옥마을 정비 사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2013년 예정), 고려궁궐 발굴 및 복원 사업, 개성 고려성균관 기능 회복, 고 려박물관 건립 등이 있다. 고려궁궐은 건물터만 남아 있으므로 발굴 조사 사업 이후 엄격한 고증 과정을 거쳐 궁궐 전체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고려 성균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고려박물관을 별도의 부지에 신규 건립하여 개성 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변지역 유물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각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한의 지원이 필수적인 바 남북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다.

# ② 읍성 및 산성 복원 사업

북한 지역에는 평양성 외에도 고구려 시기 산성과 조선 시기 읍성 자원이 산재 해 있다. 북한의 '지역관광' 발전을 고려할 때 산성이나 읍성을 복워하는 사업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평양의 대성산성과 같이 북한 당국에 의해 복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 곳도 있지만, 안주읍성과 같은 지 역 성곽 자원에 대한 보존관리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의 낙안읍성과 같이 민속마을로 정비하는 것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 ③ 내금강 문화유산 정비 사업

금강산에는 빼어난 자연경관 외에도 풍부한 불교문화 자원이 있다. 특히 내금 강 지역에는 유서 깊은 사찰들과 백화암부도 등 국보급 문화자원이 풍부하다. 또 한 원산 공항 정비 등 원산 지역까지 연결되는 해안 관광 루트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신계사 복원사업의 사례를 참조하여 내금강 지역 장안사 복원사업을 가장 먼 저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철원에서 내금강의 금강산역에 이르는 '금강산철도' 복원 사업도 내금강 지역 문화유산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금강산철도가 복원된다면 서울에서 철원까지 경원선을 이용하고, 철원에서 DMZ를 철도로 통과하여 내금강까지 매우 짧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어 '대중관광'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내금강지역의 정비사업은 현대아산에 의해 진행되던 '금강산관광' 사업이 재 개되었을 때 관광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 ④ 무형문화유산 복원 사업

북한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12년 11월 「문화유산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무형문화유산 보존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한의 무형문화재 사례를 참조하여 현지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봉산탈춤>과 같이 서울에서 보존되고 있는 북한지역 무형문화유산을 원산지인 사리원에 전수회관 등을 건립하여 전수자들을 양성하고, 또한 현지에서 공연을 통해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한에 내려와 있는 기능 전수자들과 북한 현지의 전수시설이 결합되면 현지의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 주요 사업별 실행 계획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자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관광상품으로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외부 관광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 관광의 대상이 되는 자원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이동을 위한 교통 편의성, 숙식 관련 편의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정 수준의 오

락 시설이 있어야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광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도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에서는 관광 인프라의 개선에 상당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어 민족공동 문화 자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족공 동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공동의 협력 추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남북하이 어느 정도 신뢰 관계를 구축하 뒤에 가능 한 일이 될 것이다.

### 가) 고구려 문화유산 탐방 및 평양관광

고구려 벽화 고분, 동명왕릉 등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시대 역사문화자원(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탐방을 주요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이는 남한 국민들에게는 '부재하는 고구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 는 자원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고구려 산성이나 고산동우물과 같이 고구려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 이외의 외국인에게도 품격 있고 매력 있는 '문화관광'의 자원으로 받 아들여질 것이다. 특히 이 자원들은 대체로 평양과 남포 등 현재 북한의 중심지에 밀집해 있어서 교통과 숙박, 음식, 오락 등 관광자원화에 가장 유리한 테마라 할 수 있다. 전문적인 문화유산 테마관광으로 설정하더라도 충분히 일정을 소화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평양관광'과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품 개발도 가능하다.

평양에는 숭인전·숭녕전·용곡서원·광법사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며, 조선중 앙역사박물관·조선미술박물관·조선민속박물관·조선예술영화촬영소·만수대창작 사·평양교예극장·평양인형극장·국립연극극장·모란봉극장·인민극장·인민대학습당 등 수십 여 개의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고, 개선청년공원 유희장·능라인민유원지 등 놀이공원과 기타 호텔, 식당 등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중국 동북지역에 산재한 고구려 유적 탐방과 연계하면 보다 확장된 관광 프로 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 나) 개성 고려문화 탐방 및 DMZ 관광

개성 일원의 고려문화유산을 중심 테마로 한 광광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개성지역은 만월대, 고려박물관, 숭양서원, 선죽교, 왕건왕릉, 관음사 등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자원이 풍부하다. 고려궁궐을 복원 건립하고, 남북한 및 전 세계 에 흩어져있는 고려 문화자료를 수집하여 고려박물관을 건립·운영하게 되면 그 자원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또한 개성의 한옥마을을 정비하면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숙박 시설 등 관광 인프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전주 한옥마을 사례를 참조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남북한 지역 읍성과 한옥마을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개성지역은 분단의 현장인 DMZ와 판문점이 가까이에 있으므로 '평화관광' 프로그램과 연계된 복합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다. 판문점에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되는 경우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개성지역은 남한의 수도권에 가깝고,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에서의 접근성도 좋아서 다양한 상품의 구성이 가능하다.

#### 다) 금강산 불교문화 탐방 및 동해안 관광

금강산 관광은 현재는 단절되어 있지만 '남북관광'의 메카와 같은 곳이다. 빼어난 자연경관만이 아니라 풍부한 문화자원, 불교 문화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내금강 지역은 장안사, 표훈사, 유정사 등 유서 깊은 사찰과 백화암부도 등 국보급문화자원 풍부하다.

관광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으므로 문화유산에 대한 정비만 잘 이루어지면 곧바로 관광상품화가 가능한 지역이다. 철원에서 내금강에 이르는 금강산철도가 복원된다면 서울에서 단기 방문 상품 개발도 가능하다. 금강산에서 원산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의 해안 휴양시설과 연계하면 종합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남한 강원도의 설악산 연계 프로그램도 구성 가능하다.

# 라)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

북한에서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제도화된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남한 의 사례를 잘 활용하여 재정비해 나간다면, 살아있는 문화자산으로서 활용도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미 남한에서 전승되고 있는 북한 지역 민속예술을 현지의 문화로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리원 민속거리 주변에 봉산탈춤 상설공연장을 만들어 관광콘텐츠화하고. 안성 남사당패놀이나 안동 하 회탈춤 등과 교류 프로그램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보호법」에 따라 북한의 무형문화유산이 복원, 보존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과 재외동포가 함께 하는 '한민족문화축전'(장소 DMZ)을 개최하는 등 다 양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 마) 한반도 종단 고도(古都) 관광

경주, 공주, 부여, 서울, 개성, 평양이 연계된 한반도 고도(古都) 관광 프로그램 개 발이 가능하다. 고도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물론 고도를 연계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 자체로 최고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경주역사도시 조성의 사례를 참고삼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북한의 개성역사도시나 평양역사도시 조성 사 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남북한 고도를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 바) 기타 문화관광상품

첫째, 함흥에 있는 함흥본궁(本宮)은 '함흥차사'라는 스토리, 전주이씨와 전주 경기전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남한 국민을 타깃으로 하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지역 연고 문화예술인 또는 역사적 인물의 생가나 기념관, 기념 행 사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남한 국민 대상 관광 콘텐츠로서 가치가 높을 것이 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학 작품의 배경이 장소들, 예를 들면 영변의 약산지역은 김소월의 <진달래꽃> 관련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곳이라 할 수 있다.

# 다. 역사유산의 공동 보존과 디지털화

# 1) 한인 디아스포라 박물관 조성

## 가) 추진 필요성과 의의

민족생태계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한인은 2011년 말 기준 약 8천만 명으로, 남한 5천만 명, 북한 2천4백만 명, 재외동포는 7백2십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민족디아스포라는 일제 식민통치, 분단, 독재로 이어지는 역사적 수난의 산물로서, 아시아, 미주, 유럽 등 175개국에 흩어져 있으며 이들의 삶 속에는 역사적 트라우마가 새겨져 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 이러한 민족생태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국내에 입국한 숫자만 약 2만3천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은 이주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남한 내 체류외국인은약 1백4십만 명, 결혼이민자는 약 1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e-나라지표) 그동안우리는 민족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한인으로만 구성된 공동체를 의미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민족생태계는 분단과 디아스포라라는 변수에 세계화와 다문화사회화라는 변수가 중층적으로 결합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민족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통일생태계는 민족생태계의 일부를 형성한다. 민족생태계는 재외동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초국가적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통일생태계는 남북의 국가 간통합을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통일생태계는 재외동포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는 재외동포의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6자회담 참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은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통일생태계의 구축에 있어 '한인 디아스포라 연대'는 중요한 고리이다. 재외동포는 같은 민족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

다는 점에서 통일을 위한 지지 세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의 정 치적 영향력에 따라 통일생태계 구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생태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족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은 러시아 고려인, 재일조선인, 탈북 자의 민족정체성 형성과 분단의식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미래의 진정한 한반 도 통일은 남북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 퍼져 있는 하인 디아스포라 모두를 매개 로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통일을 위해서는 서로 이질적 기원을 갖고 있는 이들 의 아픈 역사와 경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동질성을 요 구하는 우월적 모습을 버리고 평화로운 연대와 소통의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재외동포가 거주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정체 성의 변용을 정체성의 해체가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요인으 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박영균, 2013) 이러한 연구 성과를 고려할 때, 미래 지향적인 민족생태계는 문화적 동질성을 강요하는 '동화(cultural assimilation)'가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한 '포용(cultural inclusion)'을 원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다양성 원리는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남한 내의 탈북자와 이주 민,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 박물관은 근현대 시기 한민족의 이산의 역사를 증거하는 원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 교류하는 기관이다. 박물관은 역사적 질곡 으로부터 시작된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한민족 디 아스포라의 결과로 나타난 민족생태계의 다양성을 깊이 이해하게 함으로써, 새 로운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주요 사업 내용

① 남북 및 175개국에 산재하는 8천만 한인의 삶과 문화

한인 디아스포라 박물관은 근현대 시기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통해 8천 만 한인의 삶을 기록하는 장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이주한 기록이 처음 나타

 $\langle \pm 4-2 \rangle$  재외동포 현황

(단위: 명)

					(211: 0)
연도별 지역별	2007	2009	2011	백분율(%)	전년비 증감율(%)
아 주 지 역	4,040,376	3,710,553	4,063,220	55.90	9.50
일 본	893,740	912,655	904,806	12.45	-0.86
	①(296,168)	②(320,657)	4(326,671)	12.43	
중 국	2,762,160	2,336,771 ③(1,923,329)	2,704,994	37.21	15.76
기 타	384,476	461,127	453,420	6.24	-1.67
미주지역	2,341,163	2,432,634	2,521,470	34.69	3.52
미 국	2,016,911	2,102,283	2,176,998	29.95	3.55
캐 나 다	216,628	223,322	231,492	3.18	3.66
중 남 미	107,624	107,029	112,980	1.55	5.56
구주지역	645,252	655,843	656,707	9.03	0.13
독립국가연합	533,976	537,889	535,679	7.37	-0.41
유 럽	111,276	117,954	121,028	1.66	2.59
중 동 지 역	9,440	13,999	16,302	0.22	16.45
아프리카지역	8,485	9,577	11,072	0.15	15.61
총 계	7,044,716	6,822,606	7,268,771	100	6.54

① 1952~2005년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자료: e-나라지표

나는 것은 1863년경부터이며, 가난, 탄압, 전쟁, 노동이민 등 다양한 배경으로 이주의 역사가 형성되었다. 재외동포는 2011년 기준으로 175개국에 7,268,711명이 있다. 대륙별로 보면, 아주지역 55.90%, 미주지역 34.69%, 구주지역 9.03%이다.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는 중국(2,704,994명), 미국(2,176,998명), 일본(904,806명), 캐나다(231,492명), 러시아(218,956명) 순이다.(외교통상부, 2011) 여기에 북

② 1952~2008년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③ 2000년도 중국 전국인구조사상의 조선족(중국 국적) 총수

④ 1952~2010년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한, 남한 내의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총 인구는 2010년 기준 2,419만 명이며(통계청, 2010),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은 2011 년 기준 23,095명, 현재까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한 이산가족찾기 신 청자 수는 2011년 기준 128,496명이다.(e-나라지표) 8천만 한인이 근현대 과정에 서 겪은 삶의 이야기들은 그 자체가 문화콘텐츠의 풍부한 자산이다.

- ② 한인 디아스포라 역사 및 한인 공동체의 생활문화 수집, 기록, 보존 한인 디아스포라 박물관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세 계 각지에 있는 한인 공동체의 생활 전반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 기록, 보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박물관 부설로 한인 디아스포라 아카이브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 수장고에는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유물 을 수집, 보존한다면, 아카이브에는 문헌, 사진, 영상 등 기록물을 수집, 보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외 한인공동체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기억하는 원로들을 대 상으로 한 구술기록 자료의 생성작업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인 관련 유물과 기록물은 디지털화를 통해 전 세계 한인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③ 한인 디아스포라 역사 및 한인 공동체의 생활문화 비교 연구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박물관이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박물관에서 직접 조사연구를 수행함은 물론 국내외 연구기 관과 네트워크 통해 공동 조사연구, 민간 연구 프로젝트 지원사업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의 출판과 보급을 통해 디아스포라 역사와 한인공 동체의 다양성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④ 전시, 공연, 상영 등을 통한 정서적 공감대 형성 한인 디아스포라 박물관은 전시를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해외 한인

의 생활과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시는 크게 상설전시, 특별전시, 순회전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상설전시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실, 남북을 비롯하여 175개국에 분포하고 있는 한인 공동체의 다양성을 대륙별로 보여주는 전시실, 한인 디아스포라 역사에서 중요한계기를 갖고 있으며 한인 다수 거주국가의 한인 전시실 - 재중한인, 재일한인, 재미한인, 재캐나다한인, 재러시아한인, 재독한인 등 - 북한 전시실,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등을 포함하는 남한전시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별전시는 국가별, 주제별로 다양한 비교전시를 기획할 수 있다. 언어, 의식주, 문화예술 등에 있어서 한인 공동체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문화다양성의 시각에서 비교하여 보여주는 전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설전시와 특별전시는 재외동포들도 볼 수 있도록해외순회전시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인의 삶을 담은 공연, 영화 등을 정기적으로 공연, 상영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⑤ 내국인 및 재외동포 대상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인 디아스포라 박물관은 내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해외에 이주했을때 겪었던 차별과 고통을 기억하고 국내의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정에 대해 포용적인 자세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남한이 다른 체제 하에서 있기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생활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이중적 정체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한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르지만 서로 같은 한인으로서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⑥ 정기적인 한인 문화교류축전의 개최

박물관을 중심으로 상설적인 한인 문화교류축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한민족화해평화체제(매년 6월 25일), 한민족통일문화대축전(매년 8월 15 일), 한민족민속문화대축전(매년 음력 8월 15일)의 개최를 통해 남한 주민, 북한 주민, 해외 교민이 함께 모여 한민족의 문화적 공통성과 다양성을 확인하는 계기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3)

### 다) 실행계획

한인 디아스포라 박물관에 대한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를 수행한다. 박 물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국립기관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는 박물관의 미션을 설정하고 박물관이 갖 고 있는 수집, 기록, 보존, 연구, 전시, 교육, 교류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박 물관 건립부지, 건립규모, 건립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박물관 건 립부지는 이산과 분산의 역사를 상징하는 DMZ나 인근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고 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 박물관의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물관 건립프로세스 를 추진할 건립추진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건립추진위원회는 국내뿐만 아니 라 해외에 있는 재외한인 대표자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물관은 재외동 포와 북한을 포함하고 있고 정서적 공감대와 문화적 포용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 에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건립추진 단은 이들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sup>23)</sup> 박영정 외 (2012),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통합의 방향과 과제』,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 2) 남북 문화유산의 공동보존과 디지털화 사업

### 가) 추진 필요성과 의의

그동안 남북 문화유산 교류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북한 문화유산을 파악하고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다. 북한 문화유산의 답사와 조 사, 북한 문화유산을 국내에 소개하기 위한 전시와 출판, 북한문화재를 온라인에 서 소개하는 북한문화재자료관 사이트의 구축과 운영이다. 둘째, 북한의 문화유 산에 대한 공동조사와 복원이다. 개성만월대 등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북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공동복원 작업이 이루 어진 바 있다. 셋째, 문화유산과 관련한 국제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북한 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공동협력, 문화재 반환을 위한 공동협력, 중국이 아리랑 등 우리 문화유산을 유네 스코에 자국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대한 공동대처가 이루어졌다.<sup>24</sup>)

남북 문화유산 교류의 특징을 종합하자면, 주로 근대 이전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유산, 무형문화재, 근현대문화재,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분야에서는 남북 문화유산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남북 문화유산의 공동보존이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취약했던 이들 분야에 대한조사연구, 보존관리, 디지털화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나) 주요내용

① 남북 언어유산의 공동보존과 디지털화

언어 분야에서의 남북교류는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겨레말큰 사전 발간이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한글박물관의 설립을 계기로 언어유 산, 즉 한글과 관련된 고문헌과 근현대 자료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공동보존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sup>24)</sup> 앞의 책, p. 137.

한글의 역사를 규명하기 위해 남북 공동으로 한글 고문헌 및 근현대 자료에 대 한 수집과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글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한글 관련 고 문서, 국어사전, 국어교과서, 한글타이포그래피 등에 대한 수집이 이루어지기 시 작하였는데, 고문서뿐만 아니라 근현대 시기 자료도 원본을 수집하는 데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다. 한글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남북한 언어유산의 공 동보존, 연구, 교류를 위한 장기계획 하에, 남북의 한글 고문서와 근현대 한글 역 사 자료를 수집하고, 언어유산의 디지털화를 통해 남북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 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공동연구와 정기적인 남북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성과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 ② 남북 무형문화유산의 공동보존과 디지털화

무형문화재 분야에서의 남북교류는 그동안 특히 미진했던 부분이다. 북한에 는 우리와 같은 무형문화재 보존제도가 2012년 11월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 하면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무형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전승하 기 보다는 현대에 맞게 개량하여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25) 그러나 중국이 아리랑을 중국의 세계문화유 산으로 등재하려한 것을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북한에서도 무형문화재 를 공동보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게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무 형문화재의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관한 법률 을 별도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남 북 무형문화재 공동보존을 위한 협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sup>25)</sup> 박영정 외 (2013),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 ③ 남북 근현대문화유산의 공동보존과 디지털화

남북의 예술과 문화산업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인해 서로 다른 전개양상을 갖게 되었으나, 동일한 근대문화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같은 민족의 근현대시기 예술과 대중문화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남북의문학, 미술, 연극, 무용,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등은 미래 통일한국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현대 예술 및 문화산업 자료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전통문화보다 수집과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근대문화재 보존은 남한에서도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문화재청은 2001년에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정이 주로 건축 및 시설물 위주이며 지정된 등록문화재 수도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문학, 미술, 영화, 만화 등 근현대 예술과 문화산업 분야에서 등록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진 것은 2000년대 후반으로, 영화 2007년, 문학 2010년, 미술 2012년, 만화 2013년부터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문화산업 관련 근현대문화재의 지정은 수적으로 미약해서 현재 '청춘의 십자로'(안종화, 1934) 등 영화필름 8편, '토끼와 원숭이'(김용환, 1946) 등 만화작품 3편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뿌이다.26)

북한의 근현대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도와 보존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 알려진 바가 없다. 문화재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북한문화재자료관에 따르면, 근대문화재 1건, 현대문화재 2건이 등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를 감안할 때북한에서는 아직 근현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대문화재 보존에 머물고 있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현대까지 확대하고, 남북이 예술 및 문화산업 유산의 공동보존을 위해 상호협력함으로써 서로의역사를 이해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통일문화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있다.

<sup>26)</sup> 문화재청 (2013), 『2012년도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langle \pm 4-3 \rangle$  등록문화재 지정 현황

(단위: 건)

						( - 11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366	422	452	466	485	535
종교시설	50	51	51	53	56	59
업무시설	60	65	67	67	67	67
교육시설	38	41	41	41	41	40
 주거숙박시설	33	35	35	36	35	36
전쟁관련시설	20	25	25	25	25	25
 문화집회시설	10	7	7	7	7	7
의료시설	11	12	12	12	12	12
 산업시설	24	25	25	25	25	25
공공용시설	60	64	64	65	65	65
 인물기념시설	21	21	22	22	23	31
 상업시설	6	6	5	5	5	5
동산	16	52	80	91	106	146
기타시설물	17	18	18	17	17	17

자료: 문화재청(내부행정자료), e-나라지표.

이를 위해 예술 및 문화산업 유산의 공동보존을 위해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 및 사료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한국예술자 료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만화박물관, KOCCA음악아카이브 등 관련 기관을 연 계하여 국내 예술과 문화산업에 대한 통합적 기록보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북한 의 유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남북한 예술 및 문화산업 유산에 대한 체계 적 조사연구와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없는 자료, 예를 들면, 1960년대 이전 남한영화필름, 월북예술인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교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 예술 및 문화산업 유산의 디지털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예술 및 문화산업 유산의 디지털화와 북한 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 및 문화산업 유산의 디지털화를 지원하여 남북 예술 및 문화산업 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국내외 연구자와 제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 예술 및 문화산업 유산의 공동보존을 위해 보존과학 기술 및 기자재의 지원이 필요하다. 재질별 보존과학 전문인력의 양성과 보존과학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을 통해 북한이 보유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④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공동보존 및 디지털화

문화재청은 2012년에 제정된 '국외소재문화재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 거하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는 총 20개국에 152,910점이 있다.(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홈페이지) 국외소재문화재는 크게 세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고대국가인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영토가 현재의 국 경 범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이다. 둘째, 근대시기 에 프랑스, 일본 등에 의해 국외로 불법 반출된 해외소재 우리문화재이다. 셋째, 근 현대시기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해외소재 문화재이다. 이 중에 서 고대사 규명과 문화재 반환 관련 국외문화재는 그동안 남북 문화유산 교류와 협 력의 성과가 높은 분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다. 첫째,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고대사와 관련된 국외문화재에 대한 보존은 중 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협력이 심화되어야 할 분야이 다. 국내에서 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동 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과 홍보 중심인 한계가 있다. 그 러나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물적 증거의 확보와 조 사연구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고대사 분야에서 남북 공동조사, 보존, 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주변국가의 잘못된 역사인 식에 공동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langle \pm 4-4 \rangle$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현황

(2013.1. 현재, 단위: 점)

소 장 국	유물수량	주요 소장처	
일 본	66,819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국	42,325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영 국	7,954	영국박물관 등	
 독 일	10,727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등	
러시아	4,067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등	
프랑스	2,896	국립기메박물관 등	
중 국	8,278	북경고궁박물원 등	
덴마크	1,278	국립박물관	
캐나다	2,192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35	리이덴국립민속박물관 등	
스웨덴	51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1,511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298	민족박물관	
스위스	119	민족학박물관 등	
벨기에	56	왕립예술역사박물관	
 호 주	41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탈리아	17	국립동양도자박물관	
카자흐스탄	1,024	국립도서관	
대 만	2,881	국립고궁박물원 등	
 헝가리	341	훼렌쯔호프동양미술박물관	
계 (20개국)	152,910		

자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홈페이지, <www.overseaschf.or.kr>.

둘째,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은 남북 문화유산 교류에 서 가장 성과가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2011년 기준 20개국 14만560점에 이른다. 문화재 환수는 남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인 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일본에 소재한 국외문화재의 경우, 남한은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으로 인해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문화재 반환청구를일본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환수가 매우 중요하다. 이미 북관대첩비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실의궤 등의반환에 있어서 남북 공조의 힘이 큰 역할을 했다. 27) 남북공동의 문화재 환수는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의 동질성을회복하고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근현대시기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국외소재 문화재는 근현대 문화재로 지정하고 매입을 통해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 재단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2012년에 매입한 바 있다. 러시아, 중국 등 구 사회주의권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해서는 남북한 공동조사와 협력을 통해 보존관리를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다.

### ⑤ 남북 문화유산 통합 포털 구축 및 운영

북한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는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문화재자료관이 유일하다. 이는 1998년 문화관광부가 운영해온 남북통합문 화관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이관을 받아 북한문화재자료관 사이트로 전환한 것 으로서 북한에서 출판한 조선유적유물도감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문화유산을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남북 문화유산을 함께 찾고 볼 수 있는 남북 문화유산통합포털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sup>27)</sup> 혜문 (2011), "남북공조를 이룬 문화재환수 남북교류 한단계 도약 계기", 《민족21》, 127, pp. 122~125.

북한문화재자료관 **海란 - 교소식 - 문화역장기 - 특별건시란 - 연료검색 - 지도검색 - 자료상 - 게시란** 안약 3호부 "챙;玤도" 시대구분 -14대(14) 산국기(54) 청동기(221) 용기(165) 낙합(80) 대합 고구비(235) 백제(1) 신라(6) 가야 통통신라(25) 발제(15) 교리(432) 조선(651) 근대(1) 현대(2) 기타(2) 미살(6) 세계유산 고구려 고분박화 홈페이지 게시판 통합문업 안내 고구의 고문학회를 5세등의 급간에서 자상 체험에 본다. 북한문화재그리기 미술공모전 수상. 고구려택화 남북 공동 보존작업 고구리 궁성의 지하를 했더니 🚥 류**청구분 •** 류적 열산유적(5) 주거유적(14) 분모유적(17) 성작관합유적(5t) 사당 메사유적(3) 사람관립유적(5t) 사원 항교유적(5 북한문화재그리기 미술골모전(국업... 궁광 전이름적(5) 누정(15) 명승류적 류물태장 산토류적 기타(6) 복한의 문화유산 ##657 @ 2007 북한문화재그리기 미술공.. 유물 정산용구류(147) 무구이구류(205) 전작류(3) 회화류(14) 오소류(32) 토자류(81) 금속공예류(180) 한속공예·장식용류(252) 자연유물류(0) 화견류(30) 기타(18) 역한지 열선, 운송우리, 공석, 유율 용용 용명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200T 북한문화태그리기 미술공.. 박한의 명송지 목록(일부) 북한의 국보유적 목록 복한의 및 사람 0 구호물 탐부도류(41) 석불류(7) 비각류(12) 수라관제시설류(5) 과학시설류(1) 기타 박한의 국보 지정 사항을 중심으로 사용에 관한 영향을 살 때 볼 수 있다. NEW CO 개설의 문화유적 명양특별시(SE2) 남포작활시(SE) 개성작활시(SE) 라선작활시(43) 개성의 문화주제를 통해 개성의 과거의 먼저를 요합되었다. 환하님도(100) 환배복도(88) 원만님도(50) 원만복도(88) 자갑도(67) 강원도(56) 달감도(5) 한경남도(17) 한경목도(66) 경기도 러시마(4) 중국(195) 발본 기대(263) 미상(527)

[그림 4-5] 북한문화재자료관 홈페이지

자료: 북한문화재자료관, <a href="http://north.nricp.go.kr/nrth/kor/inx/index.jsp">http://north.nricp.go.kr/nrth/kor/inx/index.jsp</a>>.

### 다) 실행계획

우선 남북 문화유산 공동보존을 위한 추진기구로서 가칭 '남북 문화유산보존 회의'를 구성한다. 남북 문화유산보존회의는 남북 문화유산 공동보존과 디지털 화를 위한 합의 및 실행총괄기구로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 문화유산 공동보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남북 문화유산 공동보 존은 남한, 북한, 국외소재 문화재를 모두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 문화유산 공동보존의 대상과 범위를 ① 남북이 자체적으로 보존하는 문화재 ② 북하에 소 재하고 있으나 공동보존을 위해 남한의 지원이 필요한 문화재 ③ 국외소재 문화 재로 남북 공동보존과 대응이 필요한 문화재로 분류하여 남북협력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문화유산 디지털화 및 통합포털 구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유

럽연합에서는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련 서적, 영상, 음반 등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유로피아나(European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유로피아나는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이 이를 디지털화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정보통신기술을 감안하여 디지털화 인력, 기술, 장비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문화재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관련 서적, 영상, 음반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필요가 있다.

넷째, 단계별 남북 문화유산 공동보존 및 디지털화 사업의 세부계획을 실행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산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 라. 남북 문화콘텐츠 협력

# 1) 추진 필요성과 의의

### 가) 문화융성과 사회발전

21세기 국가와 사회의 발전 방향은 문화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3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제시 하였다. 문화융성은 단순하게 문화를 발전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다. 문화융성은 문화가 국가 전반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 문화 의 세기란 단순하게 문화를 산업과 연결하고, 인문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지난 세기 동안 추진했던 인간 발전의 근본 모델을 성찰하고, 인간 중심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융성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문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 문화를 통한 새로운 세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 어나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인류는 새삼 인문학의 가치에 주목하고, 인문학을 요청하고 있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주목은 새로운 세기의 현상이다. 지난 20 세기는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 동물학적 존재'로 규정하였다. 다윈의 '진화론', 홉스의 '리바이어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대표되는 사회학, 정치학, 경제 학 등의 근대학문들은 모두 '생물적, 동물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기본 전제 에 입각한 것이다. '생물학적 존재, 동물학적 존재'에 입각한 근대학문이나 이러 한 근대학문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결정적으로 훼손되었다. 과 학의 발달이 역설적으로 인간 존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성도 잠깐, 인간의 근 본적인 삶의 문제, 일상의 성찰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최근 몇십년 동안 인류가 이룩한 과학문명의 발전과 정보통신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 문제에 대한 비판적 반성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심화되는 자본주의의 문명 속에서 '인간소외', '인간 의 물질화'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현대사회는 역설적으로 인간을 배 제함으로써 '인간소외'와 '인간성 상실'을 더욱 촉진시켰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엄청난 경제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발전에도 불 구하고 물신화, 자원 낭비, 빈부 격차 등의 부작용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부작용 은 사회 발전에서 인간을 배제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회 발전이 인간을 위한 발전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인간을 사회발전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 이다. 그 결과 상당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불행해 졌다.28)

<sup>28)</sup> 김여수 (2012), "인문학과 문명의 치유",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2012.11.1, [부 산: UNESCO], p. 12; "2006년 의료, 재산,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상관요인으로 레스터 대학의 한 분석심리학자가 고안한 주관적 행복(well-being)지수인 '삶에 대한 만족 지수(Satisfaction with Life Index)' 조사에서 한국은 '20-50 클럽'에 가입했음에 도 불구하고 102위에 불과했다.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고, 부탄은 8위, 미국은 23위, 동티모르는 69위, 중국은 82위, 일본이 90위였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개 인수명, 교육, 소득에 대한 종합지수인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 서도 한국은 조금 나은 순위를 기록했을 뿐이다. 2011년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 면 한국은 28위로, 1위에 오른 노르웨이, 6위 프랑스, 29위의 미국과 대비된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인문학에 대한 열풍은 사회발전이 낳은 부작용에 대한 반성과 연결된다. 인문학에 대한 열망은 무한 경쟁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도구화 되어가는 시대에 대한 반성이며 인간의 복지에 대한 근원적 모색이다. 전 지구적인 인문학 열풍은 인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인간성 회복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구이다. 21세기, '인간다움'을 지키며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현대 사회가 유발하여 현대인이 당면하게 된 문제점을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토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융성'은 현대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발전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제시된 '문화융성'의 핵심은 인문정신의 회복이다. 인문정신이란 곧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 존재를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가진 '인간의 존엄성'에 주목한다.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규정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에 둘러싸여, 생존을 위한 즉각적 대응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인문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철학, 역사학, 문학 등인문학을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법학 등 사회과학도 재구성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존엄에 바탕을 둔 정책이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근본적 규정을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두고 학문과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세기 제조업 중심의 하드웨어적 발전양식을 벗어나 문화적 요소를 새로운 발전 동인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29

<sup>29)</sup> 인문학과 사회발전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소셜미디어, 스마트폰을 비롯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분석한 황주성 외 (2011), 『ICT·인문사회 융합 활성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문학적 시각에서 정보화 문제와 활용능력을 다룬 정보사회와인문학 (1999), 『정보사회와 인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들이 인문적인 사고의 의미를 짚어 본 김경동·최재천 외 (2010), 『인문학 콘서트』,

인간 존재에 대한 관심은 철학적이고 유리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발전의 동력 그 자체가 되고 있다. 즉 인간을 중심에 둔 문화가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은 기업 경영의 새로운 키워드로 인문학에 주목한다. 오늘날 기업의 경제 위기는 산술적 통계로 분석하기 어렵다. 기업 간 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었고, 전 지구가 하나로 묶이면서 인류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행위도 경제적인 이윤 추구에서 의미 있는 가치 지향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들의 윤리와 도덕은 소비자들의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 역시 기술과 가격만으로는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 인문학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문학과 기업의 발전을 결합한 예는 갈수 록 많아지고 있다. '인문학이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기업들 이 변하고 있다. 기업 브랜드에도 인문학의 스토리를 도입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 등의 분야에 한정되었던 인문학의 영역이 문화산 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30) 국가나 지역에서도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이숲, 인문과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소통의 방향을 제시한 이덕환 (2011), 『소통: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서강대학교출판부, 현대 사회에서 인간에게 돈의 문제를 제기한 김찬호 (2011), 『돈의 인문학』, 문학과 지성사, 인문학과 르네 상스 시대의 창조성에 주목한 김상근 (2013), 『인문학으로 창조하라』, 멘토프레 스, 문화에 대한 자본의 침식과 비판적 성찰을 통한 대안을 제시한 윤채근 (2013), 『콘텐츠 시대의 불안 인문학의 생존전략』, 동아시아, 인문학 속에 숨겨진 경제이야 기를 풀어낸 김훈민·박정호 (2012),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한빛비즈. 등이 있다.

<sup>30)</sup>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은 인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신규 채용인력 6,000 명 중 5,000명을 인문학 전공자로 충원하였다. 르네상스의 출현과 디지털 신기술의 등장을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경영에 활용한 칼리 피오리나 전 HP CEO, 애플의 혁 신적 제품은 기술과 인문학을 접목한 결과라고 늘 강조했던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 등 시대를 이끌어온 기업이 주축을 이룬다. '나이키', '캐논', '오라클', '샘소나 이트', '에르메스' 등 우리에게 친근한 세계적 브랜드와 그 스토리들도 알고 보면 주 로 동서양 고전과 신화, 종교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제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와 같 은 문화 영역 전반에 인문학의 스펙트럼이 닿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

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인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 출신을 충원하거나 인문학과 디지털 신기술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이러한 인문학적 창조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환경을 맞이하였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도한 것은 수출이었다. 수출주도와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은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대외경제정책의 과실이 각 부문에 골고루 확산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글로벌 경쟁의 심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성장동력이 위축된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선진국들의 재정 긴축과 글로벌 환율 갈등,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증대되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함께하는 글로벌 창조한국'은 인간의 존엄을 중심으로 한 사회 박저을 통해 국민이 해복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구초 박저에 기억한 수 있

박근혜 성무의 '함께하는 글로벌 장조한국'은 인간의 존엄을 중심으로 한 사회 발전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구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과거 선진국을 따라 잡던 선진국 추격(catch-up)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Korean route)을 적극 적으로 개척하자는 전략이다.

#### 나) 문화콘텐츠 협력의 의미

국민행복 시대의 선도적 발전을 위한 발전 전략에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대한민국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다. 한반도의 안정없이 선진사회로의 발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한국으로 발전하기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안정 차원을 넘어, 남북의 경제협력을 사회발전의 축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은 경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도 많다.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는 남북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문화콘텐츠 협력사업은 남북협력의 상징성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으로서 경제 성을 높일 수 있다. 남북은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 들었던 예도 있다. 문화콘텐츠 협력사업은 협력 과정에서 인적교류, 문화교류를 동반한다. 이는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며, 남북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만들어 냄으로써 통일에 대한 동 력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문화콘텐츠 협력은 중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세계는 지금 인문학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콘텐츠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다. 시대적으로도 문화콘텐츠 시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협력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도 문 화콘텐츠 분야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 가능성은 성공사례를 통해 확인된 분야이다. 남북의 문화산업을 통해 해외진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애니메이 션 <뽀롱뽀롱 뽀로로>가 있다.31)

문화산업 분야의 교류는 앞선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기획과 자본, 주요 스토리 보드는 한국이 담당하고 기본 작업은 북한이 담당하는 등의 역할 구분이 가능하 여 어느 분야보다 시너지 효과가 크다. 남북교류에서 성공적인 사례들은 앞으로 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남한이 장점을 갖고 있는 문화콘텐츠 제작기획 능력이나 해외보급능력과 북한의 인적 능력을 결합하여 나갈 수 있다. 영화제작에 있어서

<sup>31)</sup> 남북 최초의 합작 애니메이션인 <게으른 고양이 딩가>에 이어 하나로 통신과 삼 천리총회사가 두 번째로 제작한 텔레비전 방송용 애니메이션이다. <뽀롱뽀롱 뽀 로로(Pororo the Little Penguin)>는 5분짜리 52편으로 구성된 시리즈 물로서 아이코 닉스가 기획하고 하나로통신과 스카이라이프가 투자했으며, 남측의 오콘과 EBS, 북측의 삼천리총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꼬마 펭귄인 주인공 뽀로로가 동물 친구들과 함께 탐험을 하면서 자연을 배워간다는 내용의 아동용 텔레비전 시리즈 로 2003년 11월 EBS를 통해 처음 선을 보였다. 방송을 통해 처음 선을 보인 이후 2003년 이탈리아 포지타노에서 열린 '카툰스 온더 베이', '프랑스 안시 페스티벌', 서울 'SICAF 영화제' 등에서 경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2003 디지털콘텐츠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문화관광부 주최의 '2003년 대한민 국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대상'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2003년에 프랑 스 최대 방송사인 TF1 방송사와 판권계약을 맺었다. 이후 '뽀통령'으로 불릴 정도 로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으면서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

기획과 자본은 한국이, 촬영지나 배우의 공급은 북한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콘텐츠는 문화와 산업이 창조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문화콘텐츠의 핵심인 창조적 상상력은 규제나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율성과 창의적인 역량이 발양(發揚)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분야의 효율적 지원체계를 갖추 어야 한다. 국가발전의 동력원으로 미래사회의 국부(國富) 창출의 동력이라는 인 식으로 규제보다는 지원과 창의성 고양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 야 한다.32)

문화콘텐츠 분야의 남북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성', '유연성',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첫째, '안정성'이란 협력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이루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협력사업은 주문 생산을 하거나 생산 여건에 따라서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제조업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문화협력사업은 문화적인 이해와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콘텐츠 협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은 단기적이고 단절적이어서는 안된다. 일관된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협력의 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하나의 이야기 소스를 가지고서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무한 확장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소스가 될 수 있는 소재는 다양하다. 남북이 공유한 전통의 문화유산으로부터 창작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분야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남북의 협력사업의 형태나 규모, 주체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남북 문화콘텐츠 협력사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필요하다.

셋째,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문화콘텐츠 공동제작에서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sup>32)</sup> 김동규 외 (2002),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통일 연구원, pp. 108~110.

작품으로 제작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콘텐츠 내용과 제작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합되어야 한다. 남북협력이 가능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남북의 제작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결과물에 대한 산업화 방향에 이르는 일관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함께 협력을 위한 저작권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콘텐츠 협력사업은 저작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남북의 문화콘텐츠 협력사업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은 저작권법을 제정해야 하며, 남북은 이미 가입한 베른협약 상태로 저작권 문제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협약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다. 북한도 내각 직속 기구로 저작권 사무국을 설치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등록, 심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이다. 남북 사이에는 이미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에 저작권, 상품권 내용을 명문화하였었다. 이후 남북 사이에 공식 의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콘텐츠 교류를 위해서는 남북합의서 등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다.33)

# 다) 문화콘텐츠 협력사업 추진 환경

남북 문화콘텐츠 협력사업은 여러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남북 콘텐츠 협력 사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은 공유의 콘텐츠 원천 소스가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는 남 북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다. 남북은 언어와 역사, 문화 분 야에서 공유한 문화자산이 풍부하다. 남북한이 문화적 공동체로 공유한 문화적 자산은 첨단산업에서도 유용한 바탕이 되고 있다. 중원기업이 수입한 북한의 체 질진단 소프트웨어 '금빛말 3.0'은 조선말 한의학자 이제마의 사상의학을 바탕으 로 한 체질분류체계 소프트웨어이며,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인 '류

<sup>33)</sup> 전영선 (2008),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 《지적재산권》, 26, 한국지적재산 권법제연구원 참고.

경바둑'을 비롯한 '류경장기'의 오락프로그램이나 '금강산', '조선료리', '천하제일강산' 등도 문화적 친연성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다. 또한 남북한 공동제작한 애니메이션 「왕후심청」은 우리의 고전소설 「심청전」을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것으로 남북 공유의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심청전」 외에도 「홍길동전」 등의 고전소설이나 역사, 설화나 태권도, 씨름 등을 응용한 개발이 가능하다. 남북한이 단일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번역 소프트웨어나 음식 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넓다. 남북교류에서 상업성 있는 게임·언어처리·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남북의 공동개발이나 기술교류, 판매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도 남북이 공유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의 언어적 공통성에 기반 한 번역프로그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관광지, 북한의 역사유적지(고구려고분, 고려의 유적지 등), 북한의 민속놀이, 북한 지역 전통문화 먹거리 등의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

둘째, 문화콘텐츠 분야는 교류형태와 규모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IT분야를 전략적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나 투자 자본의 부족, 국제적 규제 등으로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34) 남북교류의 규모에 있어, 소프트웨어의 단순 수입 판매에서, 프로그램 공동개발, 관련합작회사 설립에 이르기까지 투자규모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기술협력에 이르는 협력규모나 방법의 다양화가가능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남북교류에서 북한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단순 판매부터 프로그램 개발, 대규모 프로젝트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참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sup>34)</sup> 북한의 주요 SW개발 기관으로는 조선콤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조선알보강기술개발회사, 국가과학원, 리과대학, 은별콤퓨터기 술연구소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해외 SW개발을 위해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센터를 설립하여 용역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문화콘텐츠 분야는 북한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는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어 남북교류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단번 도약'을 통한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전통적인 제조업 으로는 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파악하고 IT분야를 선택하고 있다. 남북이 원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콘텐츠는 남북교류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은 해방 직후 일본인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가 동된 산업 시설 운용에 필요한 인력 확보로부터 출발하여 전후복구에 필요한 기 술도입, 군사노선 강화를 위한 기술혁명으로 이어져 왔으며,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산업 자재와 설비의 품질 향상과 함께 반도체, 원자력, 전자공업 분야를 과학기술 정책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 년대부터 조선과학원·김책공업종합대학에 전자계산연구소 설립하여 컴퓨터 분 야의 기초를 세운이래, 1986년 7월 평양프로그램센터, 1990년 10월 조선콤퓨터센 터(KCC)를 설립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1999년 김일성종합대학에, 2001년 김책공 업대학에 컴퓨터과학대학을 설치하는 등 컴퓨터 대학이나 과학기술 영재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과학기술의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정책을 '과학정 치'로 규정하고 경제 분야의 과학화를 강조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과제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독려하고 있다.35) 북한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대외적인 교류

<sup>35) &</sup>quot;나라의 륭성번영은 과학기술과 인재에 의하여 안받침된다. 우리는 공업의 기술개 건과 현대화를 중요하고 절실한 부문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해나가야 한다. 과학기 술을 전반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면서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에 힘을 집중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인재중시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실력 있는 첨단과학기술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 내야 한다",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2002.1.1. "선 군정치가 오늘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군력강화 그자체만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만능의 정 치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국방을 위주로 하는 우리 식의 독특한 경제구조가 튼튼히 다져 지고 경제강국을 건설할

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과 문화를 결합한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에서도 2004년 중국 심양시 영산중로에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조선6·15심양봉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시작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고 외국과의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남북 간의 협력은 다양한 범위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술격차가 적기 때문에 남북 교류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는 남북 간에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격차를 보이는 분야이다. 초기 남북교류는 상호 적대적인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 내부의 대화와 협력을 우선하는 상호 포용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전망은 북한이 강점을 가진 ①양질의 노동력, ②천연자원, ③저수준 산업기술을 활용하고, 생산기지 확대 및 이전을 통해, 북한 자체시장보다는 중국의 동북 3성 및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시장에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시장확대, 통일 후의 통합후유증 감소 등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었다.

남한이 IMF를 지나면서 남북한은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서 남북한의 분업화 체제를 살릴 수 있는 남한의 사양산업의 이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사회주의문화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었다", "선군정치는 우리 시대 반제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로동신문, 2002. 4.1

<sup>&</sup>quot;우리는 라남의 로동계급처럼 혁명과업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내며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로동계급이 건설하는 공장, 기업소와건축물들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고 후대들에게 떳떳이 물려 줄수 있게 최상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정보화,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이 맡겨 준 임무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결사관철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에서 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높이 떨치자", 로동신문 2002. 5.1.

전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즉 남한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주력하고 중 저부가가 치 산업은 북한과의 경협을 통해 더욱 확고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수출산업으 로 육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북경협은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와 '투자 마 인드'의 부족이라는 문제와 함께 남북한 사이의 기술력 격차도 크기에 단기간 내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에 비하 여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까지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자동차, 전력, 조선, 화 학섬유, 방직, 제지산업의 기술수준이 가장 낙후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컴퓨터 분야와 비철금속 분야가 격차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6) 이들 산업 분야 가 운데 소프트웨어 분야는 국가의 적극적 정책 추진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 이 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바둑게임과 지문검색 시스템, 번역프로그램은 국제적 인 수준이다.37)

이러한 적은 기술 격차는 남북 사이의 장점은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다. 남하의 발전될 IT 분야의 기술력과 북하의 우수하 인적 자원을 최대하 활용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컴퓨터 관련 붐이 일면서 영재교육기관에서 특별히 컴퓨터 수재반이 운영되고 있어,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은 인력양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도 컴퓨터대학, 컴퓨터학부, 컴퓨터학 과 및 전공반, 프로그램센터 신설 등 각급 학교의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컴퓨터과학대학이라는 별도의 단과대학을 설립하였다. 김 일성종합대학의 컴퓨터과학대학은 자동화학부와 물리학부의 일부 학과를 통합 하여 단일 단과대학으로 개설한 것으로 단과대학으로 설립된 것은 극히 이례적 인 일이다.

평양과 함흥에 컴퓨터기술대학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김일성종합대학을 비 롯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 이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에 프로그램학과와 컴퓨터

<sup>36) 『</sup>한국경제』, 2001년 5월 28일.

<sup>37)</sup> 전영선 (2001), "북한의 개혁개방정책과 과학기술정보산업의 교류가능성 모색", 《중소연구》, p. 189.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에서의 컴퓨터 관련 전문 인력양성을 체계화하고 있다. 8의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부를 신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대학 강의에도 컴퓨터공학부와 정보공학강좌, 정보공학과가 각각 신설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에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컴퓨터기술 개발과 관련한 인력 양성은 중고등학교로 확대하여 고등중학교에서 컴퓨터과목을 확대하면서 영재교육에 컴퓨터인재를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영재육성 교육기관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및 평양학생소년궁전과부속학교인 금성제1고등중학교, 금성제2고등중학교에 컴퓨터반을 신설하였으며, 시도별로 2~3개 '본보기학교(시범학교)'를 조성할 계획으로 각 도, 시, 군(구역)에 설립된 제1고등중학교에 컴퓨터반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9)

# 2) 주요 사업내용

가) 문화콘텐츠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안정적인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안정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시기 동안 남북 문화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였다. 남북의 문화교류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합의된 이후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되었다. 1991년 남북은 비경제적인 분야, 즉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구성에합의하였다. 남북은 남북교류에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1992년 2월 19일 합의서 발표 후 1개월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협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협력사업은 남북관계

<sup>38)</sup> 김책공업종합대학 컴퓨터정보센터는 지난 1997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설치되었다. 이 센터에서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3년 과정의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sup>39) 『</sup>연합뉴스』, 2001년 5월 3일.

악화와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무산되었다.40)

국민의 정부 시기, 남북은 관계 회복과 함께 경제협력 활성화 및 사회문화 분 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에 합의하였다.41)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하 간에 사회문화교류는 양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몇 십 명, 몇 백 명 단위에 불과 했던 방북자 숫자가 만 명 단위를 넘어서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남북 문화교류 도 다각도로 추진되면서 10년 동안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행 사의 부대행사로 진행되거나 남북관계 정세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남북 문화교류협력이 남북한 정세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점을 극복해 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42)

- 40)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남북 간 문화교류가 정치·군사 적 상황으로 인해 단절되는 상황에서 비정치적 순수 학술, 문화, 예술 교류 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하다. 현재 남북 문화교류는 경제 인도적 교류에 비해 일시 적·단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양적 교류 확대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미비하였다.
- 41)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4항에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 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하는 데 합의하였다.
- 42) 남북 문화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남북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10·4선 언 제6항에서 전반적 남북교류와 함께 사회문화 분야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 가기는데 합의하고, 후속조치로 열린 2007년 11월 총리회담을 통해 『남북사회문 화협력추진위원회』구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8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별 도의 기구 및 위원회 설치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고, 5·24조치로부터 예외적인 역 사, 민족문화 발굴사업 관련 교류와 저작권 교류와 같은 범국제적 교류 등 모든 남 북관계가 단절되면서 후속조치 또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 해볼 때 남북관계가 좋을 때에는 남북 문화교류 또한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남북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었을 경우, 역사유적과 사료 발굴 및 보존과 같은 민족문화 발굴사업 등과 같은 정치적 영향을 피할 수 있는 문화교류 부분까지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관계에서 정치와 일정하게 분리된 별도의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북교류의 모든 업무가 통일부를 통해 추진되면서 비정치적이며 안도적인 분야까지도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구조로 되 어 있다. '5·24 조치'에서 인도적 분야는 예외로 하였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남북교

콘텐츠 분야의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교류를 유지한다는 일관성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인도적 지원 분야는 남북 상호 간에 이해와 신뢰 형성 과정으로서, 사회문화교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남북 사이의 공동기구를 구성하고, 공동의 준거들을 만들고, 상호 간에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반 교류가 일시적,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 문화 분야 교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43)

남북 문화협력사업은 남북의 문화교류에 그치지 않는다. 남북 문화교류는 교류 협력 차원에서 나아가 통일을 대비한 사회통합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거시적 목 표를 전제로 남북 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본원칙, 체계적 지원 방안, 지원 기준 등을 법제화하여 안정적·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0 년 이후 남북교류에서 북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분야는 문화 분야이다. 북한 내에서의 한류를 비롯한 남한 문화의 유입은 북한 사회 변화의 한 요소가 되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선진적인 문화를 접한 사람은 이보다 못한 문화를 수용하지 못한다. 정서나 심리는 '불가역성(不可易性)'이 높은 만큼 남한문화를 비롯하여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관 계 개선을 전제로 남북 사이에는 교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남북사 회문화협정'을 비롯하여 '문화협력'을 지원하고 추진할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다.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이 증가하고,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류 전반에 미쳤다. 모든 업무가 통일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정치적 상황으로부 터 자유롭지 못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sup>43)</sup> 남북의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필요성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2005년 11월 24일 국회의원 22명의 명의로 '남북사회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 안」이 상정된 적이 있었다. 통일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사회문화교류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왔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 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 정치·군사·외교적 상황과 무관하게 문화 분야 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서는 조직기구의 설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화분야의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정세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조직 이 구성되어야만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 과정에 따른 단계별 문화교륙협력 방안의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다.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문화분야의 교류협력 토대 구축은 한반 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통일대비 남북 상호이해에 도움을 주어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편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나) 민족공동의 콘텐츠 협력

콘텐츠 협력사업은 남북의 정세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하고 무궁하다. 우선적으로는 남북이 공유한 민족문화 자산의 DB 구축과 민족문화콘 텐츠 개발 사업을 우선 진행할 수 있다. 민족문화 자산의 DB 구축은 고구려 유적 등의 역사유적 발굴 사업을 통해 우리 역사의 공통 역사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 다.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경색되어 있는 시점에서도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문화콘텐츠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도 기여할 것이다. 기존의 남북교류 사업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 거나 이행되지 않아도 사후 보장 체제가 없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 도하기 어려웠다. 남북 문화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들 역시 안심하고 교류 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협력사업이 진행될 수 있 을 것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북한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핵심 기관은 조선컴퓨터센터(KCC)이다. 조선 컴퓨터센터 산하 체계프로그램 분소에서는 청년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음성인식 프로그램, 다국어번역 프로그램 등의 첨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평양정보센터, 과학원 수학연구소, 은별컴퓨터센터, 김일성종합대학 산하 컴퓨터 과학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각 대학의 연구기관들이 상호 연계해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소프트웨어는 '과학기술계산 프로그램'이나 '자료기지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 등을 비롯하여 경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영업무 및 생산조종 프로그램, 과학기술 계산프로그램, 설계프로그램, 정보처리부문 프로그램, 교육·문화·보건 분야의 응용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44) 소프트웨어 가운데 일부는 조총련계 벤처기업과 연계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 다) 개성문화콘텐츠협력센터

문화산업 분야의 남북교류는 시장논리로서도 제작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잦은 교류를 통한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고급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며, 북한 자체의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화콘텐츠 공동제작은 문화적 동질성을 맞추어 갈 수 있는 분야로 이는 문화산업을 앞으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남한의 전략과도 부합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북이 상시적인 협력이 가능한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를 살린 교류방안을 발굴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남북 문화교류는 정치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았다. 문화콘텐츠 교류는 교류협력과정에서 합의할 부분이 많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인적 교류가 동반되어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sup>44)</sup> 북한의 컴퓨터 산업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윈도우즈용 조선글 처리프로그램인 '단군', 문서편집프로그램인 '창 덕' 등의 문서 서식 프로그램, 1998년 조선컴퓨터센터에서 개발한 온라인 바둑 프로그램 '은별'은 일본에서 열린 세계컴퓨터 바둑대회에서 1위 차지하기도 하였다.

남북의 문화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성공업지구 내에 남북 문화협력센 터를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상징성도 있으 며, 문화교류가 문화산업을 동반할 콘텐츠 분야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산업적 연 계성이 높아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안에 문화협력을 위한 거점을 만드는 것이 현 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개성공단 부지 일부를 남북 문화협력센터를 축으로 한 문화협력 지구로 개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화교류협력 관련 회담의 개최는 물론 협력사업을 위 한 실질적인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교류협력센터는 남북 문화교류 회담 개최, 남북 문화교류 시범사업 추진, 남북 문화교류 자료 관리, 민간 분야의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 지원, 남북 문화 협력사업 시범 공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남북 문화교류의 거점이면서, 문화산 업 지원과 남북 문화통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장 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를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협력 지대로서 통일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남북 문화교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행 정적 지원, 전문자료의 보존과 관리, 원활한 남북 문화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남북 문화교류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남북 문화교류의 협력적 사업 모델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콘텐츠 협력을 위한 거점으로서 개성남북 문화협력센터는 북한 문화콘텐 츠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남북 콘텐츠 교류 전문가 양성, 남북 콘텐츠 협력 사업 자문 및 지원, 남북 문화분야의 협력사업 개발 등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문화콘텐츠 관리 및 문화교류 아카이빙

남북한의 콘텐츠 자료 수집과 관리, 남북 콘텐츠 일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은 북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체계 화된 정보 제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한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고, 남북교류나 통일정책에 필요한 북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통일

사료(史料)로써 활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의한 자료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자료의 분류가 가능하고, 양적 으로 통계 자료의 활용에 용이하다. 하지만, 사업 자체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남북 문화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원자료를 시스템과 별도로 수집하고 보존관리하며, 활용을 지원하는 아 카이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45)

또한 남북 문화교류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와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남북 문화교류의 과정과 성과는 향후 남북한의 문화적 통합을 위한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남북 문화교류를 통해서 축적된 성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문화협 력사업의 아카이빙이 필요하다. 문화협력사업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협력사업 가운데 문화 분야의 사업과 사회문화협력사업 가운데 문화 분 야의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46)

남북교류 사업에서 축적된 자료들, 예컨대 남북 문화교류 공연실황 자료나 남 북작가회의 영상기록이나 『통일문학』 잡지나 남북교류를 통해서 제작된 음반 등 의 협력사업 자료들은 그 자체로서 교류협력의 역사이자 기록일 뿐만 아니라 문

<sup>45)</sup> 박영정 외 (2013),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p. 137.

<sup>46)</sup> 현재 남북협력사업은 '남북경제협력사업'과 '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구분한다. 남 북경제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 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 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제공, 행사개최 및 조 사·연구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 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단순 인적교 류, 교역은 제외)하고, 사회문화협력사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 체 형성을 위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및 계약에 따라 계획 ·준비·실시 및 사후처리 등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함. 교육·학술, 문 화·예술, 종교, 보건, 과학, 체육, 출판·보도 등의 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 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비영리적 활동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책, p. 137 참고.

화협력을 확대하는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 문화협력 아카이빙은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한 문화정책의 수립과 통 일 과정의 사회 통합을 위한 통일방송국과 같은 기구 운영과도 관련된다. 통일 문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화자료(분단이후 북한에서 생산된 모든 문화 자료)에 대한 수집 및 관리도 중요하지만, 남북한 사이의 문화교류협력사업 과정 에서 발생한 일체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 하다.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에서 상호 분리된 채 생성해낸 문화자료를 남한 문 화자료 또는 북한 문화자료라 한다면,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에서 만들어진 자 료는 그 규모는 작지만 두 문화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갈등하고 조정하고 통합하 여 만들어낸 제3의 새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향후 통일 문화를 준비하 는 직접적인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래적 가치는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 남북 문화협력 아카이빙은 남북 문화교류 사업을 관리하고, 통합을 대비한 관 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도 활용 될 수 있다. 수십 년의 분단 상황에서 군사적 대치와 극단화된 체제 경쟁을 하면 서 적대의식을 심화시켜온 남북한이 미약하지만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물줄기를 생성해 나온 과정은 크고 작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라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통일 과정에서 전 국가적으로 겪게 될 미래의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 를 가지고 있다.47)

또한 보다 직접적으로는 당장 추진하고 있는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한 훌륭한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 콘텐츠 교 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련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남북의 문화 인력 은 소수이며, 연구 환경도 초보적인 수준이다. 문화통합에 대비한 전문 인력 자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통일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인프라 구 조,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류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 내용의 전

<sup>47)</sup> 위의 책, p. 132.

문성과 교류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남북 물류전문가, 남북 문화협력 전 문가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마) 남북 및 해외코리언의 사이버 한민족문화 사료관 구축

남북의 콘텐츠 공동제작은 산업분야로 한정되지 않는다. 남북이 공유한 민족 문화 자산도 남북협력의 콘텐츠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북이 공유한 민족문화를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은 훼손 위기에 있는 북한의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동시에 민족문화 자산을 문화산업화 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정에 해당한다. 북한 소재 민 족공동문화자산의 보존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북한은 문화재 관리의 기술과 자본 부족으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민족문화 유적들이 제대로 관리되지못하고 있으며, 훼손·멸실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족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사업은 역사의 공백을 보완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지역적으로 북한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48)

문화콘텐츠 진흥원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던 민족문화 원형 개발 사업을 남북교류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학분야인 언어, 역사, 민족문화 분야에 대한 콘텐츠 발굴과 보존 사업을 남북 당국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남북 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당국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일반 민간 차원의 협력사업과 달리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민족문화콘텐츠에 대한 협력사업이 필요한 것은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달라서 민족문화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민족문화 수용의 광복과 함께

<sup>48)</sup> 연구성과 공백을 보완하고, 분단으로 인한 문화자산 보존·복원·계승과정의 남북 간 상이함과 격차를 해소하고,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통한 통일준비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통일부에서도 민족공동문화자산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 정책과제로 '민족공동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방안'을 연구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진행된 남북의 문화정책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발전해왔다. 남한의 민족문화 정책은 당시대의 삶을 고찰할 수 있는 원형에 대 한 충실한 발굴과 보존에 목적을 둔다.49) 문화재 유형별로 원래의 모습이 보존 될 때 원형을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도 가능하고 문화적, 역사적 정 체성이 있는 민족문화 창달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50) 반면 북한에서는 전통문화의 현재적 기능과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시기에 발전한 민족 문화는 당시대에는 훌륭하였을지 몰라도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 에 현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족문화의 원 형을 현시대의 요구와 목적에 맞게 살려나가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북한은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면서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역사를 민족의 역 사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이후에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이념화하 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장은 민족적 가치를 정치적 이념 앞에 내세워 정치적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즉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선 민사상에 입각한 민족을 강조했다.51) 정치적 대응논리로 출발한 민족주의는 김

<sup>49)</sup> 송인범 (2009),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의 현황과 과제", 《백제문화》, 40, 백제문화 연구소, p. 71, "19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제정된 "문화유산헌장"은 문화 유산을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 의 자산"으로 규정한다.

<sup>50)</sup> 위의 책, p. 71.

<sup>51)</sup> 김정일은 1986년 7월 당중앙 책임일꾼들과 가진 담화인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에서 주체사상과 민족문제를 연계하여 언급하였다. 이 담화 에서 김정일은 "우리 인민이 지닌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 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령도 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사회를 일떠세웠으며 사회주의 모법을 창조하였습니다"고 하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 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정의한다. 이어 김정일은 1989년

일성 주석 사망이후 '김일성민족' 담론으로 전환되었고, 조선민족제일주의는 1990년대 들면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국제적인 고립 상황에서 체제 단속의 논리로 강화되었다. 세계사적 변화에 대응해 단행했던 일련의 조치들로 오히려 자본주의 사상의 유입이라는 부작용이 나자 강력한 민족주의 드라이브를 걸어 나갔다.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의 탁월한 지도자인 김일성을 모시고 있어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념화시켜 나갔다.52)

차별화된 민족주의는 2000년 이후 '아리랑민족'으로서 극단적 민족주의로 전환되었다. 2002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된 '아리랑민족'은 민족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고려한 개념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발전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 혈통주의가 강화되면 아리랑 민족으로서 민족적 차별을 고려한 새로운 민족론이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 남북 사이에는 아직까지 분단 상황을 두 개의 민족으로 규정하는 주장은 제기된 바는 없다. 남북 사이에 민족문화는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매개체가 될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족주의 담론은 민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sup>12</sup>월 28일 조선노동당 중앙 위원회 책임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인 '조선민족제일 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주체사상과 이를 연계시켜 새로운 슬로건을 제 시하면서 새로운 이념화 운동으로 전개시켜 나가기 시작한다.

<sup>52)</sup> 김정일 (1992),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p. 17, "우리의 문학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적극 기여해야 한다. 문학이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은 그 사상 교양적 기능을 높이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학은 조선 민족의 위대성을 실감있게 형상화하여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조선 사람으로 태어난 긍지와 자부심 자기 민족의 훌륭한 창조물과 자기민족의 힘과 지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민족 장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을 더 잘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민족 제일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은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혁명에 대한 신심을 잃고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되돌려 세우고 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북한이 아리랑 민족을 강화하는 것은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기존의 단 일민족 입장에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둔 차별화된 민족론이다. 즉 남북은 과거 한 민족이었으나 '남한 사회가 여러 민족이 섞이면서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민족의 순수성은 북한 주민(김일성 민족)이 갖고 있다'는 논리화 작업을 통해 민족통합에 대한 반대 논리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남북이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이념화함으로써 흡수 통일에 대한 심리적 방어기제를 작동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설득력이 약하고, 또한 하나의 민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반론의 여지도 많지만 남한의 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혈통적 우위론을 강조하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남북이 공유한 민족문화 자산을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은 통일한국의 문화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국학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교류와 함께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현안이 되고 있는 개성 만월 대 발굴복원 사업,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을 비롯하여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분야 부터 협력대상으로 삼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를 비롯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교류 창구를 제도화하고,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문헌번역사업, 조선왕조실록 4대본 전시, 전통민 요의 발굴, 전통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공동사업, 문화재 용어 표준화 등의 한국학 분 야는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개발할 수 있는 콘텐츠 사업이 될 수 있다.

전통 문화에 대한 콘텐츠화와 함께 남북과 해외 코리언의 생활문화 사료관 협 력사업도 필요하다.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과 DB 구축의 차원에서 콘텐츠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한류 등의 영향으로 국 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 지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코리언학(현대한국학)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 위상에 맞는 코리언학은 남북과 재외 한민족이 이룩한 문 화적 성과를 정리하고, 학문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문화적 한류를 지역을 넘어 한국의 문화적 자산과 가치를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 학문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향후 통일한국의 가치 정립과 재외 한민족의 가치와도 연결된다. 한민족 문화콘텐츠 사료관은 한국학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민족의 문화 통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기관이다.

남북을 비롯하여 재외 한민족의 생활문화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관리하여 하는 거점으로서 한민족생활문화 사료관이 필요하다. 한민족 문화콘텐츠 사료관은 남북과 재외 한민족의 현황을 보여주고, 한민족이 창조한 문화유산들을 체계화하여 한민족 통합을 위한 연구로 활용하고, 한민족문화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거점이다. 한민족 문화콘텐츠 사료관을 통해 국제적인 코리언학을 체계화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동시에 한민족 공동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민족 문화사료관은 남북과해외 코리언이 창조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인 동시에 남북의문화통합을 위한 자료관으로서 역할도 할 것이다.

### 바) 문화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 융성

문화콘텐츠는 실리적인 남북교류 사업이다. 문화콘텐츠 공동제작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실리적인 사업이다. 문화콘텐츠는 세계사적 흐름에 부합하면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경제개혁이나 발전을 시도하겠지만 북한식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높다. 북한으로서는 체제의 위협이 되는 개혁이나 개방을 선택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게 높지 않다. 체제의 유지를 우선으로 하면서 체제 틀 안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정도의 개혁 '새장 안의 개혁'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개혁이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춘 남북의경제의 발전적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은 문화교류로 인한 내적 가치관의 혼란과 이에 따른 체제이반현상을 우려한다. 북한에서의 한류현상에 대한 우려는이를 반영한 예이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이른바 '북한 내 한류'를 통해 남한 사회

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한다.53) 남북 문화교류가 본격화 될 경우 이러한 현 상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다. 문화교류의 부적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북한이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북한 내부의 체제이 완현상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하려고 할 것이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북한이 실리적인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면서, 정치적인 상징 성도 큰 분야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문화적 동질성을 맞추어 갈 수 있다. 이는 문화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남 한의 전략과도 부합한다. 문화산업 분야의 남북교류는 시장논리로서도 제작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잦은 교류를 통한 문화적 이질감을 해 소하고, 고급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며, 북한 자체의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 점이 있다.54) 이러한 강점을 살리면서 문화교류 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 하고, 다양한 범위와 범주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다양성을 살리면서 분야별 전 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

### 3) 실행계획

### 가) 문화콘텐츠 교류협력 추진 기구

문화콘텐츠협력사업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구의 구성이 필요하 다.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참여정부 하에서도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다 보니 일회적 이벤트성 행사,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행사가 이루어졌다. 통일에 대비한 문화 인 프라의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 상징성이 강한 민족적 사업 등 재정 규모나 사업

<sup>53)</sup> 강동완·박정란 (2011), 『한류, 북한을 흔들다』, 늘품 플러스, p. 127, "북한 주민들 은 남한 영상매체를 지속적으로 시청하면서 북한 당국에게서 교육받은 내용이 거 짓이라고는 것을 알게 된다. 그동안 자신들이 속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남 한에 대한 동경이 점점 더 커져갔다."

<sup>54)</sup> 김종세 (2002), "남북합작 3D 애니메이션 제작 사례",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의 진단과 전망 2002』,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 122.

성격상 정부나 공공단체가 맡아야 할 많은 사업들이 한 두건 외에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나 남한 사업자끼리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 남남갈등으로 인한 국내적 협력 체계의 부재 등이 남북 문화교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이라는 교류·협력 상대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오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문화콘텐츠 협력을 위해서는 협력적인 지원체제가 절실하다. 문화 분야는 사회분야에 비해 정치·군사적 상황으로부터 분리가 용이하고, 일방적 지원으로 인해 대북 강경론자들로부터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사회분야와는 달리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대등한 교류가 가능한 분야이다. 북한의 문화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통일 전 사전 투자의 성격으로 인해 '퍼주기'라든가 '소모성'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고, 문화가 갖고 있는 불가역성으로 인해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콘텐츠 협력사업은 물품반입과 같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다. 기획과 공동개발에 이르기까지 협력해 나가야 한다. 정치적 상황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무산되어서는 문화콘텐츠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없다.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화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콘텐츠를 비롯하여 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남북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사업이 올바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는 분야와 없는 분야의 제한은 없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55)

<sup>55)</sup> 전문성의 예로 음원을 보자. 남북 사이에는 북한의 음원을 들여서 음반을 제작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사업자들은 음악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음원(音源, a sound source)에 대한 개념은 이미 문화산업현장은 물론 일반

또한 주무 부처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지원 체계의 구축이 동반되 어야 한다. 다른 분야와 달리 문화분야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관련 분야의 유기적 연관성이 매우 높다. 관리부처 의 전문성이 없다면 콘텐츠 교류의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 영화교류를 예로 들면 시나리오 제작에서부터 연기, 연출, 장비, 편집 등의 기술, 마케팅, 저작권 등의 유관산업이 많다. 이러한 다양한 내용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다양한 방식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문교류로부터 합작, 공동제작, 초청공연, 협력 사업, 전시 등등의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규모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문화사업은 간단하게 음원을 공유하는 것부 터 공동제작에 이루는 다양한 규모의 사업이 가능하다. 참여의 형식과 규모 등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야 한다. 국립예술단으로부터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학생, 성인, 여성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이러한 과정을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하는 일은 교류 내용의 성격 이나 특성에 맞지 않는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정부의 틀에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다. 인적 교류에 있어서 북한 측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분야별 교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기획과 정부 부 처의 열린 인식이 필요하다. 일부 정부 부처의 냉전적 기준에 의한 교류 제한 의견 등은 통일부의 사업승인 등 절차상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정부 주무 부처 공무원들의 의식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문화교류 사업 승인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 비정 치적 분야인 문화 분야의 업무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이다. 정부 기관에서 남

인들에게도 일상적으로 통용되지만 남북교류 현장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문화 콘텐츠 영역인 음원사업의 경우에는 음원의 전문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 보되어야 한다.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제부서에서 관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 다. 또한 북한의 창작품에 대한 위작여부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교류협력 의 장애가 될 수 있다.

북교류를 관리하는 것은 문화교류의 예속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고, 추진하는 전문 추진 기관이 필요하다. 대북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참여의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 기구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통일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치에 대한 문화교류의 예속성을 지양해야 하며,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의미가 희석되어서도 곤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화교류는 문화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고 진흥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사회문화교류는 분야도 다양하고, 교류형태나 방식에서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힘든 점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고,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남북교류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참여하는 폭넓은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에서도 남북교류 사업을 직접 관장하기보다는 이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창구역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기관에게도 정부출연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남북 문화교류에 있어 대국민 설득을 통한 국민적 합의기반 형성을 위해 개방적 정책수립체계를 구축하고 대북정책의 공론화를 지향,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통일정책 환경의 변화, 정책의 투명성 확보, 정책효율성 제고와 국민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통일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서 "공공 및 사적 개인들과 제도들이 통일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북한과 관련되는 정책이나 활동, 역할 등 자신들의 공통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자원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무수한 방법의 집합이며, 갈등적인 이해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수용되면서 상호협력적인 행동이 취해지는 과정"으로서통일정책 거버넌스의 개념이 제시되기도 하였다.56)

<sup>56)</sup> 여인곤 외 (2004),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p. iv.

나) 문화콘텐츠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금 확보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문 화예술진흥기금의 남북 문화교류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의 문 화쿼터제를 도입하는 것도 재원 조달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3호에서 남북 문화예술 교류 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서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교 류협력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남북 문화교류가 침체되면서 그 사용액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보다 적극적인 방향에서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남북 문화교 류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에서 일정 부분을 문화협력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 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3월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2012년 10월 말 까지 총 조성액이 11조 1,227억 8,400만 워에 이른다.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통일부에서 하는데, 남북협력기금은 적립되는 기금이 아니어서 매년 예 산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사항,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다. 기금운용계획은 통일부장관이 수립 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되 어 있고, 결산보고서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남북협력기금은 2000년 이전까지는 비료, 식량 등 인도적 지원과 경수로 건설 사업 지원 등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6호에서 규정한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 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사용되었다. 2000년 이후 이산가족 교류 등 인 적 왕래와 사회문화 협력사업으로 확대되었다. 2001년에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이 제정되어 사회문화협력 분야에 있어서 기금 우 선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의 선정 기준, 지원 한도 및 집행 절차 등이 구체화되 었다.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면,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가 의결하고, 그 미만은 통일부장관이 기금 지원 등을 결정한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2008년 이후로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이 '겨레말 큰사전 편찬' 사업과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에만 이루어지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금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 마. 그린 데탕트의 선도적 주도

# 1) 청정개발체제(CDM)의 사업화를 통한 상호이익 창출

# 가) 추진 필요성과 의의

청정개발체제(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란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중하나이다. 청정개발제에의 구축과 관련해 남북한의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상호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많다. 관련 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고용창출에도 큰도움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남북공동의 노력으로 북한 지역 CDM을 추진할경우 북측은 온실가스 발생 시설 즉 발전소, 비료공장 등을 현대화하고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며, 남한 측도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등 남북 상생의 협력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다.

CDM을 위한 협력사업 범위와 대상은 매우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수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화력발전소의 설비 개보수, 비료공장 설비 교체, 하수쓰레기처리시설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구축, 조림사업, 페기물처리, 페수처리, 신재생에너지공급 등 다양하다. 또한 CDM 사업으로 평양과 지방 주요도시의 환경미화사업으로 발전시킬 경우 남북경협 사업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청정개발 체제'란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설비와 기술 투자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감축한 실적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승인받는 것이다. 남한 측에서는 북한의 에 너지 설비 교체, 탄소배출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탄소배출 권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반도 온난화를 막으면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 모할 수 있고, 경제협력의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창조적인 접 근을 할 수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CDM 체제를 위한 남북한의 공동협력은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반도의 기온상승은 전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다. 활발한 산업 활동을 하고 인구밀도도 높은 한 국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인접해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기온 변화와 대기 흐름, 산업화로 인한 이 같은 이상기상 외에 2011년 3월 일 본 동북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한반도가 지진과 지진해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도 일깨우고 있다. 게다가 백두산 화산은 폭발 가능성을 안고 있고 일본 서해안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2~3시간 만에 한반도 동해안에 지진해 일이 몰려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재해의 가능성이 거의 열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 변화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남북한의 협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 부는 변동성을 중장기적으로 관찰하고, 가상 각본을 연구해 선제대응과 적응계획 을 세워나가고 있기는 하다. 사실 CDM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경험도 일 천하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 삼림조 성 등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의 관련 분야 기술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남북한의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분야는 적지 않다.

마침 유엔의 프로그램에 북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추진환경 이 조성된다면 국제협력뿐 아니라 남북 간 협력사업으로도 가장 우선적으로 추 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난과 에너지난 두 가지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기 오염물질인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청정 개발을 통해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고 이를 판매해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시도를 해왔다. 북한은 수력발전을 통해 국내 전력난도 해소하고, '탄소배출권'을 얻어 국제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에 최근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이다. '탄소배출권'이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는 국가나 사업처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이다.

수력발전소 사업을 유엔에 청정개발체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개발에 비해 온실가스가 얼마나 적게 배출되는지, 총 에너지 생산량은 얼마인지 등의 자료를 유엔과 인터넷에 제시하고 엄격한 국제규약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2~3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법에 따른 투명한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탄소배출권 판매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개발, 잇따른 대남 도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등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외화를 벌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청정개발체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북한이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므로 권장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이 입장이다. 북한이 환경 친화적인 개발 사업으로 얻은 '탄소배출권'을 국제사회에 판매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이 최근 판정했다.57)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발전소를 운영하고, 유엔의 엄격한 감사를 받으면서 불법 무기 거래와는 다른 국제 상거래 기준을 엄수하며 정당하게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도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에너지 자원의 개발 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각 기관과 기

<sup>57) 『</sup>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12월 5일.

업소 등이 석탄이나 원유와 같은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태양열 등 재생에너 지 자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수요와 기존 국제협력의 경험 등을 토대로 남북한이 추진할 수 있는 주요 사업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나) 주요 사업 내용

# ① 전력사업과 CDM 연계

북한에서의 CDM 사업은 전력이용기기, 낡은 송배전망, 기존 석탄발전소 설비 등의 개선 부문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분야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어 북한 전력공 급력 증강과 경제복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북 전력사업을 CDM과 연계시 켜 추진함으로써 대북 전력사업의 걸림돌인 재원조달문제와 투자비 회수 문제를

 $\langle \pm 4-5 \rangle$  북한 전력 부문의 CDM 잠재성

구분		-	CDM 가능사업	온실가스 감축 기여요인
<b>라이 기</b> 표	발전	南 和	○ 발전설비 성능향상	○ 전력 원단위 개선
			○ 유연탄 공급을 통한 연료전환 (무연탄→유연탄)	<ul> <li>● 탄소배출계수가 낮은 연료로의 전환</li> <li>- 무연탄 26.80 Ckg/GJ, 유연탄 25.80</li> <li>Ckg/GJ</li> <li>○ 전력 원단위 개선</li> </ul>
		수력	○ 노후화된 수력발전설비 개보수(이용률 증가)	○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가동) 대체
			○ 소규모(15MW급) 수력발전소 신규건설	○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가동) 대체
	송.		○ 노후화된 송·배전설비 개보수(송·배전 손실률 감소)	○ 송·배전 효율개선에 의한 유효전력 확대
	배	전	○ 송·배전 전압의 승압	○ 유효전력 확대 - 전력손실∝ 1/(전압)2
이 용		<u>9</u> .	<ul><li>전기조명 교체</li><li>예)백열등, 형광등을 컴팩트 전등으로 교체</li></ul>	○ 전력소비 원단위 개선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해결할 수 있어 민간 기업들의 대북 에너지산업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즉, 북한 측과의 협상을 통해 발급받은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에 대한 일정 부분의 권리확보 및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CERs 판매수입을 통해 투 자비회수가 가능하다.

# $\langle \pm 4-6 \rangle$ 대북 CDM 사업 적용 사례

- ◆ 대상사업: 북한의 노후화된 송배전설비 개보수 사업
- ◆ 사업내용: 무연탄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인  $CO_2$  배출을 노후화된 송배전설비 개보수를 통한 송배전 손실률(18%→ 6.69%)을 개선해 유효전력을 확대시켜 감축하고자 함.
- ◆ 온실가스 감축량 및 경제적 효과 예측:

온실가스	기준선	송배전설비 개보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전력부문 $\mathrm{CO}_2$ 배출량
감축량	기준배출량	.143 CO <sub>2</sub> kg/(kWh·yr)
예측	사업후 배출량	.004 CO <sub>2</sub> kg/(kWh·yr)
	CO <sub>2</sub> 예상감축량	.9 CO <sub>2</sub> 백만톤/yr
경제적 효과	CER 인정기간	1년(최대 인정기간)
표 <u>자</u> 예측	CER 판매수입	S \$1,122백만
계산 근거	04년 기준): 206억kWh 사용량(북한, '04년 기준): 4,788천TOE <sup>58)</sup> ) 탄소배출계수 : 4.031 CO₂톤/TOE 15/CO₂(`05년 EU에서 거래된 CER 가격)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sup>58)</sup> 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임. 석유환산톤은 타 연료의 열량을 원유기준으로 환산한 양으로 1TOE는  $10^7 {
m kcal}$ 이다.

<sup>59)</sup>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약칭이다.

그러나 대북 전력사업이 경제성 있는 CDM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 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력산업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 등이 이루어져 야 한다.

# ② 북한의 청정에너지에 대한 CDM 등록 지원 및 연수 제공

CDM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 이득을 보는데 필요한 유엔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북한은 2011년 2월부터 체코의 에너지 회사를 통해 6 곳의 수력발전소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인정하는 친환경시설물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했 다. 유엔에 등록한 친환경 시설물은 예성강 수력발전소 3호, 4호, 5호, 함흥 1호 수력발전소, 금야발전소, 백두산 선군 청년 2호 발전소 등 모두 6곳이며 함께 등록하려던 원산군민수력발전소는 승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전문가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6개 수력발전소로 연간 50만 유로, 약 71만 달 러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수력발전소가 가동되면 화력발전소의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데 북한의 6개 친환경시설물을 통해 일 년 에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약 20만 톤이며, 이를 탄소배출권(CERs)이라는 단 위로 다른 나라의 공해를 배출하는 기업과 거래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함흥 1호 수력발전소를 비롯해 8개의 수력발전소를 유엔의 사전고려대상(Prior Consideration) 목록에 올렸고, 이어 5월에는 평양방직공장을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환경유해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으로 사전고려대상에 포 함시켰다. 2012년 12월 5일 현재 사전고려대상 사업 9곳 중 백두산 선군 청년2호 수력발전소 등 7곳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사전고려대상 다음 단계인 타당성 확 인(Validation) 목록에 등록돼 있다.

유럽기후변화협약(UNFCCC)은 함흥1호 수력발전소, 금야발전소, 백두산 선군 청년 2호 발전소 등 7곳의 타당성 확인대상 사업을 통해 총 24만 여 톤의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사전고려대상 등록과 타당성 확인 등 2년 이상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면 국제시장에서 240만 유로에서 480만 유로를 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의 승인을 받아 2013년 하반기부터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겠다던 북한의 청정에너지사업이 올해 들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수력발전시설로 이득을 보는데 필요한 유엔 등록 절차도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수력발전소들이 완공됐다는 유엔의 확인 절차가 남아 있으나 북한에 방문해 댐 공사진척 상황을 점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체코의 에너지 회사는 2013년 상반기까지 완공 확인서를 유엔에 접수하려 했지만, 현재로서는 발전소 공사가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60)

또한 CDM 사업화를 위해서는 타당성 확인이 필요한데, 이는 각 사업계획서 등자료를 검토하고 온실 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감사를 받으면 각각의 발전소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을 맺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배출권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북한이 탄소배출권을 얻을 경우 북한이 직접 인터넷 경매 등을 통해 판매 대상을 찾아야 한다.

사전고려대상 등록과 타당성 확인 등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까지는 2년 이상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북한은 자료 준비 요령 등 훈련을 요청했으며 기술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다.61) 이에 따라 북한의 외무성 관리 두명은 2011년 8월 2주에 걸쳐 유엔개발계획(UNDP) 관계자와 함께 중국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관련 시설을 시찰한 후 중국의 선진 기술을 북한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남북한 간 추진환경이 조성된다면 북한의 청정에너지에 대한 CDM 등록 지원 및 연수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다.

<sup>60) 『</sup>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3월 21일.

<sup>61) 『</sup>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9월 28일.

### ③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북한은 CDM 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 다.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자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은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는 나라에 부여되는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기 위해 8 개의 수력발전소를 유엔 청정개발체제에 등록하기에 앞서 이미 2011년 2월 8일 재생에너지 사업의 등록을 마쳤다.

독일의 민간단체 한스 자이델 재단과 독일의 감리회사를 통해 수력발전 사업을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이 정한 청정개발체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북한이 이 보다 앞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유엔 청정개발체제의 '사전 고려(Prior Consideration of the CDM)' 대상 목록에 올린 것이다.62) 유엔 웹사이트에 보면 조선남동전력회사의 재생에너지 사업(Korea South-East Power Co. Renewable Energy Bundling Project)이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사전 고려 대상으로 기록돼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은 사전 고려대상에 기록되는 것은 청정개발체제 로 등록돼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한 초보적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 고려 대상 목록에 올리는 것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CDM 사업으로 등록하 는 아주 기본 단계이다. 이 개발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CDM에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해서는 검증(Validation) 등 복잡한 과정 을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북한이 탄소배출권 판매 가능성에 기대를 갖고 수력발 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업도 유엔 청정개발체제에 등록하려는 것은 외화 획 득을 위한 불법거래를 막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기업 거래에 끌어들이는 긍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9년 11월 5일 대구시는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매립가스 CDM 사업이 유엔의 검증을 통과해 탄소배출권을 승인받은 적이 있다.

<sup>62) 『</sup>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3월 8일.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 하고 이를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아 배출권이라는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의 CDM사업은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이 공사는 탄소배출권을 발급하는 기관인 유엔으로부터 지난해 5월 처음으로 배출권 약 40만 CO<sub>2</sub>톤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확보 목표량을 지난해보다 많은 80만 CO<sub>2</sub>톤으로 잡았다. 80만 CO<sub>2</sub>톤은 승용차 약 40만 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해당한다. 1CO<sub>2</sub>톤 당 약 12유로, 미화로 약 17달러에 거래되는 현 시세로 계산하면 80만CO<sub>2</sub>톤을 팔아 약 1,324만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공사는 지난해 확보한 탄소배출권 약 40만 CO<sub>2</sub>톤 가운데 20만 CO<sub>2</sub>톤을 팔아 최근 34억원, 미화 302만 달러의 수익을 실제 낸 바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해 남북한 협력은 화력발전소 설비 개보수, 비료공장 설비 교체, 하수쓰레기처리시설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다. 이 CDM 사업으로 평양 등의 주요 대도시의 환경미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대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남북경협 사업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 ④ 친환경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

북한이 각종 공해 오염을 줄이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관련 기술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정에너지 거래와 관련해 초기 단계에서는 현금이 아닌 북한 시설물에 설치된 전구를 절전형(CFL)으로 교체하는 것 등을 비롯한 친환경 기술지원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유엔의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청정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금융 지원대상에 북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63) 기후변화협약은 북한이 청정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유엔의 금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가난한 나

<sup>63) 『</sup>자유아시아방송』, 2012년 7월 6일.

라의 청정에너지 사업 참여를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을 북한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변화협약의 청정에너지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첫째, 매년 최소한 7천500 탄소배출권(CERs)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북한 은 연간 20만 탄소배출권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기서 탄소배출권이란 국 가나 기업 간에 제한된 양 이상의 환경에 해로운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할 수 있 도록 사고파는 권리를 말하며 20만 탄소배출권은 일 년 동안 20만 톤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두 번째 조건은 추진하는 청정에너지 사 업이 10개 이하여야 하는데 북한은 례성강청년 3호를 비롯해 4호와 5호 발전소. 함흥 1, 2호 수력발전소 등 8개 청정에너지 사업을 유엔에 신청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조건인 전문가 참여와 개발비용의 투명성도 북한이 어느 정도 충족시키 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들을 참조해 남한 측은 청정에너지 개발과 관련해 필요한 기술과 금융 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실행 계획

남북한 협력에 의한 북한 CDM의 사업화는 남북한 실무접촉 → 전문가 협의 및 학술회의 → 기술인력 교육 → 실사 → 시범사업 → 전면사업 등의 6단계 로 드맵을 거쳐 실행시킬 수 있다.

학술회의는 'CDM사업화를 위한 남북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개최하면 될 것이다. 전문가 회의 및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전략회의 를 학술회의 형식을 빌려서 진행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CDM 사업화에 필요한 북한 기술인력 교육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우선 북한 내부 제도 정비 교육을 위해 특별조치법 등을 만들어 외국 자본에 사 업 유지를 보장하고, 관리기구를 지정해 담당할 인력을 확충하며, 기업들과 투자 협상을 진행하는 프로토콜을 확립해야 한다.

북한의 대상 시설 조사를 위해 합의가 필요하며 현지 조사는 북한 전역이 될 필요가 있다. 합의에 따라서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시범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사한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 립해야 할 것이다.

# 2) 남북한 그린바이오 협력

# 가) 추진 필요성 의의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림수산 등 1차 산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 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농업, 임업, 식품산업이 남북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그린바이오 산업은 남북 경제협력의 연결고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북한의 식량생산 기반 조성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연료채취나 무단 개간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홍수나 산사태가 잦아져 농경지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식량난이 심해졌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북한 지역에게만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까지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데 산림파괴로 인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급성장하는 그린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남북협력은 신성장동력원으로 유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업, 임업, 식품산업이 남북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그린바이오 산업은 남북 경제협력의 연결고리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지역 산림복구는 만성적인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북한의 자생적 경제개발 여건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농림수산업에 생명공학기술(BT)을 적용해 종자, 묘목, 형질전환, 기능성 식품 등을 생산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그린바이오 시장은 연간 2조7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5% 성장을

지속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이 이제 는 신성장동력원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기후변화, 시장개방(FTA), 식량안보 등 이슈와 맞물려 국내 외적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말미암은 생물 종의 소멸로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생명자원의 확보·보존, 지속 적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고 중장기 차 원에서 집중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협력도 원활하게 추진된 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그린바이오협력은 남북 간 녹색협력과도 맥을 같이 한다. 남북 녹색협 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와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한반도의 허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한반도의 생태계는 하나로 이어 져 있다. 북하의 산림훼손과 홍수피해, 백두산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해는 북하 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의 녹색협력은 우리의 안전을 유지하고, 통일 후 함께 살아갈 건강 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또한 녹색협력은 현재와 같은 한반도의 정 치, 군사적 긴장 상황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환경협력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 간 민간단체가 함께 추진해 온 '남북 산림녹화 협력사업'은 남북 녹색협력의 좋 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남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도 남북의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공동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일로 평가할 수 있다.64) 다만 그린바이오협력은 농림수산 등 1차 산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여 고부 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측면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이 녹색협력과의 차이

<sup>64)</sup>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3), 《2013 민화협 정책토론회: 한반도 '그린 데탕 트'의 길을 찾는다》 2013.5.7, [서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pp. 2~3.

다. 그렇지만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협력의 목표는 동일하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북한산림 복구 지원 등을 통해 녹색 한반도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 나) 주요 사업 내용

### ① 남북한 산림협력

남북 간 그린바이오 협력과 관련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산림녹화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림은 당국차원과 민간차원의 협력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있다.

남북한 당국은 2005년 8월 19일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산림녹화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을 합의한 바 있다. 즉 △시범협동농장 조성·운영, △종 자정선시설 지원, △농업 과학기술분야 협력, △축산, 과수 분야 협력, △산림녹화사업 협력 등이었다. 당시 우리 측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산림녹화사업을 본격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북한 측은 소극적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려 남과 북은 양모생산능력과 조리능력강화를 위한 산림녹화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사리원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위한 공동조사를 2008년 3월 중에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1999년부터 북한의 산림 황폐지 복구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주요 지원사업은 조림(묘목·장비지원), 양묘장 조성, 병해충 방제, 산림분야학술교류 등이었다.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은 식목행사와 연계한 묘목지원 위주의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산림협력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원은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가치가 높

고. 산림탄소배출권 확보문제와 연계되면서 지금도 꾸준히 우선 협력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반도의 산림은 매우 울창하고 산세가 아름다워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었으나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과 한국전쟁 등으로 산야는 나무가 거의 없는 벌거숭이산 으로 변했다. 남한은 다행히도 국토녹화운동의 성공으로 울창한 산림으로 회복 됐지만 북한은 아직도 산림의 황폐화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황폐화 된 산림복구를 돕기 위해 남한에서 지난 1999년 3월 출범한 민 간단체 '평화의 숲'이 인공위성 관측자료와 국제기구가 발표한 통계를 종합해 발 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황폐된 산림면적은 1백50만~200만 헥타르(ha)로 이 것은 서울시 전체면적의 25배 이상에 해당된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토질 측정 등 정확한 환경 조사를 허락하지 않아 지구관측위성 정보를 통한 연구 결과를 토 대로 내린 결론이다.

울창하던 북한의 산림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파괴된 것은 울창한 산림을 벌채 하여 목재를 수출하고 식량증산을 위해 많은 면적의 야산을 다락받으로 만들었 고 더욱이 경제난으로 인해 부족해진 땔감을 구하기 위해 마을 주변 산림에 대한 무절제한 벌채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은 1970년대 이후 '국토 개조사업」을 벌여왔다.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야를 다락밭으로 개간하고 옥수수를 심었지만 땅의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는 옥수수가 땅의 지력(地力)을 줄인 관계로 식량생산성은 떨어졌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농촌주민들은 땔감이 없어 취사 난방용으로 나무를 마구 베어내 산림은 더 욱 파괴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평양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 에서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했다. 그 결과 북한의 산은 대부분 민둥산이 되었다.

경사도가 20도가 넘는 땅을 경작지로 만들기 위해 산에 불을 지르고 몇 년 후 에 토양이 유실되면 그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화전농업도 산림의 황 폐화를 촉진시켰다. 경사가 급한 산에 농사를 지으면 오래 못 가서 토양이 씻겨 내려가 농경지를 여기 저기 옮겨다녀야 한다. 개마고원, 백무고원과 같이 해발 1

천 500미터, 2천 500미터 되는 높은 곳까지 밭으로 개간되었다. 개마고원지대의 이깔나무숲을 감자밭으로 바꾸는 화전농업으로 산림이 쉽게 훼손되면서 자연 재해가 자주 발생해 식량난이 한층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이 살던 마을의 주변 산들이 모두 개간되어 현재 북한의 대부분 마을의 1백 리 안팎에서는 나무들이 있는 산을 거의 볼 수가 없다고 한다. 북한이 지난 1998년 유엔개발계획(UNDP)등에 제출한 자료엔 산림 면적이 7백53만 헥타르로 되어 있으며 이는 1970년에 비해 약 2백24만 헥타르가 감소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심각한 가뭄이나 홍수피해의 상당부분이 황폐된 산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에 나무가 없으니 장마철이면 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려 논·밭을 뒤덮고 강은 하상(河床)이 주변 평야보다 높은 천정천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작은 비에도 강이 범람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95년 대홍수 때는 5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50억 달러의 피해를 냈으며, 2006년에는 8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2007년에는 500억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연료채취나 무단 개간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홍수나 산사태가 잦아져 농경지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식량난도 심해졌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북한 지역에게만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까지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데 산림파괴로 인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은 환경과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과 세계 각국은 산림보존을 환경문제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세계식량계획은 1999년 10월 미국 등 주요 공여국들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관개시설복구와 조림사업, 홍수조절 등을 돕는 농촌재건복구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65) 한반도 전체가 큰 피해를 받고 있는 황사를 막기 위

<sup>65) 『</sup>자유아시아방송』, 2000년 2월 29일.

해 진원지인 중국과 몽골지역에 각국이 협력해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지금부터 북한 당국과 주민이 힘을 합쳐 나무를 심어도 상습적인 수해를 막을 수 있을만큼 수목이 우거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황폐 된 산에 나무가 자라 홍수나 산사태를 막으려면 나무를 심은 지 20년이 지나야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한다.60

60년대, 70년대에 한국에도 민둥산이 많았으나 정부와 국민이 총력을 다해 세 계에서 드물게 산림 복구에 성공한 나라이다. 1999년부터 남한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조림사업을 돕기 시작했다. 남북한은 남한의 민간단체인 '평화의 숲'과 '한국수목보호연구회' 등 몇몇 민간단체들이 북한 산야의 조림사업과 솔잎혹파 리 방제사업을 돕고 있다. 남한의 백두대간 보존 복원 사업도 북한과 함께 북녘 의 백두대간보존으로까지 확대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조립을 위해서는 약 40억~50억 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어야 하 기 때문에 남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3월 "북한 산림녹화와 관련된 점진적 협력을 지금부 터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남북 환경협력에 부분적으로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더욱 적 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북한은 강수량이 꽤 많은 편이라 지도자와 국민이 열심 히 하면 복구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정권유 지에만 급급하고 열심히 복구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다.

북한은 황폐된 산림 실태 공동조사와 조림지 조성, 기술인력교류, 효율적 공동 관리, 국제기구의 지원 유치 등에 더욱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 다. 한민족이 살고 있는 한반도는 앞으로도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에 황

<sup>66)</sup>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박종화 원장과 24일 자유아시아방송의 회견, 『자유아시 아방송』, 2010년 2월 24일.

폐화된 산림은 남북한이 협력해 하루 빨리 복구시켜야 한다. 즉 남북한 간엔 환경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수출용종자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은 종자산업이다. 한국의 경우 종자산업을 육성하는 '골 든시드 프로젝트'는 이미 가동했다. 2021년까지 4천911억 원을 투자해 20개 수출용 종자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종자시장에서는 세계 곡물 메이저와 다국적 종자회사 들이 특허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방사선육종센터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종자산업법을 고쳐 연구인력도 대거 육성할 방침이다.

남북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 풍토에 맞는 옥수수 종자를 개발하여 알은 식량으로 쓰고 대는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면 식량·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f) 옥수수는 바이오연료인 에탄올의 원료로 각광을받으면서 수요가 늘어 세계적으로 옥수수 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바이오연료'란 한번 쓰면 없어지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 비해 식물을 기르기만 하면 다시 만들 수 있는 연료를 지칭한다. 옥수수, 콩 등 곡물에서 뽑아낸다. 대표적인 바이오연료가 바이오에탄올이다. 예로부터 옥수수는 한반도의 중부 산간지나 북부지방에서 완숙한 이후에 수확해, 식량으로 이용되어왔다. 바이오에탄올이란 옥수수나 사탕수수, 감자 등으로 만드는 일종의 대체연료인 것이다.

국제유가의 상승도 많은 국가들이 대체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게 만든 요인이었다. 그중 가장 각광받는 대체에너지는 바이오에탄올이다. 옥수수를 주원료로 만드는 바이오에탄올은 기존 휘발류 연료에 섞어 사용하며, 대기 오염 물질도적다. 때문에, 미국으로 비롯해 유럽연합, 브라질, 중국 등은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오에탄을 개발로 인한 옥수수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옥수수

<sup>67)</sup> 장우선 (2012), 『부상하는 신기술 융합산업』 《이슈리포트》, 12-14, 현대경제연구원.

가격도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옥수수 가격 상승은 관련 식품들의 가격 상승도 부채질 하고 있다. 옥수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서도 이미 관련 식품과 사료 값이 오르고 있다. 옥수수 가격 상승은 개발도상국, 특히 옥수수를 식용으 로 하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도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풍토에 맞는 옥수수 종자를 개발하여 식량과 대체에너지로 활용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남북한은 1999년부터 남북과학기술전문가들의 인력교 류 및 학술회의를 통해 상호 간 신뢰구축을 형성하였고 북한과학기술정보의 동 향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북한에 맞는 '수원19호 슈퍼옥수수 종자'의 개발과 국산농약을 북한 땅에 맞게 적용되도록 연구개발해 병충해제거 에 이바지하였고 국가과학원과 국내기관들과 과학기술연구회를 통한 정보교류 도 성사시킨 바가 있다.

### ③ 바이오연료 개발

바이오(생물)연료란 유기물 쓰레기나 옥수수 콩 등의 물질을 발효시키거나 태 워서 얻는 연료를 말하는데 북한에서 사용하는 나무 땔감이나 석탄을 대체할 에 너지가 될 수 있다. '바이오연료' 사업은 북한의 산림 황폐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땔감 나무를 대체하는 친환경사업이며 '태양열 발전기 사업보다 한 단계 혁신적 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바이오연료는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 와 달리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 동물의 배설물 등을 태워 전기나 각종 연료를 얻는 신재생 에너지인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주로 유럽을 찾았다. 전력난이 심각한 북한은 유럽 선진국에서 풍력과 태양열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재생하는 데 큰 관심을 보여왔다. 과거 북한 대표단은 에너지를 재생하는 기술을 배우려고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때 북한 대표단이 풍력 에너지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 수력, 바이오 가스(biogas) 등 폭넓은 분야의 재 생에너지에 관한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월드비전(World Vision)'은 함경북도 도치리에서 식수 사업과 태양열 발전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웃마을인 칠봉리에서도 식수 개선 사업을 시작하고 주민들에게 취사연료와 전기를 공급하는 '바이오연료' 사업도 추진해왔다. 월드비전은 전기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북한에 대해 보다 획기적인 대체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분이나 동물의 배설물 등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사업으로 전기 뿐 아니라 취사용 연료도 제공해왔다.

남북한 사이에도 재생에너지 및 바이오연료 개발과 관련해 협력할 대목은 많아 보인다. 예를 들면 광물 디젤유 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오늘날 생물 디젤유의 전망은 매우 밝다. 최근 생물 디젤유가 개발돼 새로운 연료로 주목되고 있다는데, 바이오에탄올과 함께 대표적인 바이오연료(bio-fuel)로 꼽힌다. 생물 디젤유는효율이 광물 디젤유에 못지 않으며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탄산가스 방출량이 적으므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생물 디젤유의 장점은 우선 재생가능한 에너지자원으로서 어디서나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 디젤은 콩, 유채, 폐식물,해조류 등 흔히 구할 수 있는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만성적인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에너지원이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난방에 이용하고 풍력, 태양 에너지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자연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바이오 디젤이 자원 절약이나 환경보호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생산원가가 광물 디젤유보다 높은 것과 상대적으로 낮은 연료 효율이 단점이다. 남북한이 협력할 경우 생물 디젤유는 이미생산돼 이용단계에 있으므로 생산원가를 낮추고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 ④ 바이오연료공장 설립

남북한 협력을 통해 전기, 취사, 난방 문제를 해결해 줄 바이오연료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월드비전'은 한때 바이오연료(bio-gas) 공장의 설계를 북한의 과학원과 함께 진행한 바 있다. 북한의 황해북도 연탄군 칠봉리에 바이오연료 공장의 설계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데 북한의 각 과학원(North Korean Academy of Sciences)과 협력해온 것이다.

북한의 바이오연료 공장은 이미 중국과 미국의 전문가가 직접 타당성을 검토 했으며 바이오연료 공장이 건설되면 인근의 대규모 닭 공장에서 나온 닭의 배설 물을 이용해 연료를 생산하고 여기에서 생긴 유기비료는 농사에 사용할 수 있어 생산량의 증가와 식량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남북한은 바이오연료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북한 주민들에게 취사와 조명 에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지역 병원 의 난방과 조명을 도울 수도 있다. 땔감 나무 대신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면 취사시 에 연기가 많이 나지 않아 결핵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⑤ 대체에너지연수원 건설

한때 스위스의 비정부기구 아가페 인터내셔널이 추진한 바 있는 대체에너지연 수원 건설 사업프로젝트는 남북한 협력과 관련해서도 적극 추진할만한 사업이다.

아가페 인터내셔널(Agape International)은 북한의 비재래식에너지개발센터(Non-Conventional Energy Development)를 지원해 앞으로 3년에 걸쳐 북한 전역의 재 생에너지 관련 기술자, 농업 전문가 등을 훈련할 '대체에너지 연수원(Alternative Energy Training Center)'을 건설할 계획을 세운 바가 있다.

이 연수원은 북한 전역에서 풍력발전기나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 등을 이용해 농사를 짓거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세계적인 대체에너지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 연수원은 건물 자체가 열효율이 높은 설계와 단열재를 사용해 지어질 뿐만 아니라,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도 태양열과 바이오 에너지 등을 활용 하는 '대체에너지 기술을 총 망라한 전시장'의 역할도 할 수 있다. 태양전지 (Photovoltaic Unit)를 이용해 컴퓨터나 전등을 가동하고 태양열로 물을 데워 난방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한 사례이다.

남북한 협력이 이뤄진다면 연수원 건축 뿐만 아니라 기술자의 연수도 담당할수 있다. 특히 풍력발전에는 중국이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북한과 가까워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이 연수원에서 일하게 될 북한의 대체에너지 기술자들을 중국에 보내 연수를 받게할 수가 있다. 중국은 혁신적인 풍력발전 기술을 갖고 있고, 거리도 가까워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독일 같은 유럽국가에 3명을 연수보낼 수 있는 비용으로 중국에서는 적어도 10명의 북한 기술자를 훈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연수원의 연구시설과 장비 등이 지원되면 남측의 기술자들을 북한으로 보내북한내에서 대체 에너지 기술자를 양성하고, 기술을 전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다) 실행 계획

상반기에 남북 간 그린바이오 협력을 위한 단계별 개발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관계부처별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이행을 점검한다. 남북한 협력에 의한 그린바이오 분야의 협력은 남북한 실무접촉 → 현지실사 → 전문가 협의 → 시범사업 → 전면사업 실행 등의 4단계 로드맵을 거쳐 실행시 킬 수 있다.

그린바이오 분야에서의 지식 경영의 확산 및 우수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융합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단체에 대한 매칭펀드 방식으로 산림협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수립되어야한다. 북한 산림 황폐지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민간단체를 통한 시범사업 성격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황폐화된 북한산림의 단계적 복구 지원계획 및 남북 간 신재생 등 에너지분야 협력기반 조성도 수립해야한다. 또한 바이오협력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전문가 사이의 사전 협의와 현지 실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바. 통일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

# 1) 창조경제 마인드 겸비 통일미래 인재의 양성

# 가)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의의

남북한 통일은 단절되어 있던 한반도 북부 경제권과 남부의 두 경제권이 단지 하 나로 통합되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창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통 일국가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경제생태계의 변화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 양자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즉 우선 긍정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첫째, 국토규모의 확대로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제적 영토가 커져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게 된 다는 점이다. 현재 남한이 차지하고 있는 국토는 세계 120위로서 99,000km에 지나지 않아 국토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편익 창출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통일 국가가 되면 물리적 경제영토가 세계 50위권인 220,000㎞로 확장되어 내수시장의 물리적 영토가 확대된다. 여기에다 인구도 세계 50위에 지나지 않은 5천만 명 수준 에서 세계 18위인 8천만 명대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통일국가의 경제생태계는 외부 경제 없이 내부경제만으로도 규모의 경제 효과 달성이 가능한 경제생태계의 변화를 가져다준다. 둘째, 남북한 통일이 되면 위로의 대륙과 아래로의 해양을 연결하는 지 경학적(Geo-Economics) 국토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그동안의 지리적 폐쇄성과 국토 의 기형성을 극복하게 된다. 한반도경제권이 북방 대륙경제권에 바로 연결되는 물류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드디어 통합물류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물류는 정보, 인간, 재화, 문화 등이 함께 이동하는 흐름으로서 경제발전의 동맥역할을 하며,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경제시대에는 하늘, 땅, 바다 모두를 활용한 복합시스템이어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통일국가 구축은 그동안 분절화되었던 이런 물류시스템의 왜곡을 정상 화하고 우리 경제생태계의 흐름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통일국가의 형성은 우리 경제생태계에 부정적 요소도 초래 하게 된다. 즉 첫째, 이질적인 두 남북한 경제체제의 통합에 따른 혼란이다. 북한 은 여타 사회주의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제도적으로 시장경제 요소 도입이 상당히 지체되어 있으면서 오랫동안 폐쇄경제(closed economy)시스템을 유지해와 국제 경제질서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이에 이미 글로벌경제화되어 있는 한국경제와 통합될 경우 경제부문별로 다양한 통합과제들이 만만치않게 대두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 동서독 통일 이후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경제논리 마인드를 가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 및 정체성 혼란도 대두될 것이다. 독일은 통일초기 1990년대에 "공짜 심리"를 가진 동독주민들과 "냉정한 경쟁마인드"를 가진 서독주민들 간의 가치관 부조화로 노동시장 및 산업현장에서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다.68)

이와 같은 통일로 인한 경제생태계의 변화는 예측치 못한 불확실성들을 가져다 주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경제가 선진일류경제로 진입하는 '한국경제의 재창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이 기회의 현실화는 창조경제적 마인드를 겸비한 통일미래 인재가 남과 북 양 지역에서 사전적으로 양성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통일이 가져다 준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통찰하고이에 도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조경제적 인재들에 의한 리드가 존재할 때 통일국가 경제는 재창조의 방향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 마인드를 겸비한 통일대비 인재양성은 남북한 양 지역 출신을 대상으로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인력은 발전된 시장경제 및 한국경제발전 경험의 전수와 더불어 통일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불확실성 요인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며 신경제를 창조하는 리드 역할을 해야 하는 반면, 북한 인력들

<sup>68) 1991</sup>년 통일된 직후 통일된 경제상태에 대해 동독주민들의 63%가 모든 것이 바뀌어야만 했다고 응답한 반면, 서독사람들은 76%나 응답했다. 동독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모든 것이 경쟁의 논리인 냉혹한 현실을 겪어야 했다"고 말한 반면, 서독사람들은 "동독인들이 성과와 업적을 중시하는 서구형 사회에 적합치 않다"라고 말함으로써 동서독주민들이 직접 대면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갈등을 표출한바 있다. 이태욱 (2001), 『두개의 독일: 독일통일과 경제·사회적 부담』, 삼성경제연구소, pp. 217~218.

은 북한경제가 시장화·개방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경제마인드 인식부여 역할과 더불어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실제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나) 주요 사업내용

① 한반도 전체 경영전략을 체화한 통일미래 리더십의 양성

독일 통일은 예기치 않게 급격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동서독 양 지역 주민들에 게 1990년대 초기 거의 6~7년간 많은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다. 서독주민 들은 유류세·담배세·부가가치세 등에 이른바 '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를 추 가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부담과 함께 자기부담 실업보험료 인상, 연금인하 등 실질소득 감소를 겪어야 했다. 동독주민들의 경우에는 많은 국영기업들의 민 영화와 산업구조 조정으로 약 970여만 명의 경제활동인구 중 1/3에 해당되는 약 300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직업재교육을 받아야 했다. 통일이라 는 특수상황을 명분으로 55세에 조기퇴직당하거나 단축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로 전환해야 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동서독 간에 중복된 산업들을 구조조정하 고 재정비해나가야 했고, 낙후된 동독지역의 인프라들도 조성해나가야 했다. 한 마디로 이질적인 두 지역경제를 통합하면서 신경제구조를 창출해나가야 했던 것 인데, 이 과정에는 많은 창조경제 마인드 겸비 인재들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그 렇지만 서독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구축해놓은 정치교육시스템이 있었고, 정치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독일문제 에 대한 교육'69) 등을 받고 성장한 인재들이 있었다. 서독주민들은 초·중·고 학 급별 교육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사회차원의 정치교육 을 통해 독일이라는 나라가 통일국가로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공동체의식과 역

<sup>69)</sup> 독일은 2차대전을 일으킨 책임 때문에 독일 통일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교육 을 시행할 수 없었다. 다시는 독일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민주시민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독일 분단 문제를 다루는 '독일문제에 대한 교육'을 정치교육의 한 영역으로 다룰 뿐이었다.

량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독의 정치교육시스템은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 그대로 확장되어 동독주민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및 민주시민교육과 사회통합교육을 해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즉 구동독 5개 주에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지부를 세우고 이 지부들에서 계층별로 체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시장경제교육 등을 행하였다. 또한 기사당·기민당·사민당 등 정당 산하의 정치교육센터들도 구동독지역에 세워져 기층적 차원에서 구동독 근로자들이 새로운 경제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이와 같은 독일의 경험사례를 참조하여, 미래 통일대비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경제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현재의 청소년계층들은 통일국가의 주요 근간이 되는세대이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계층들은 2009년 이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미래형교육과정」70)에 따라 제도적으로 과거보다 더욱 축소된 통일교육을 받고있고, 오히려 입시위주의 몰입교육 세례를 받고 성장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청소년계층들은 장기간의 분단체제에 대한 피로감으로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기 이후 과거보다 더욱 체계화되고 확산된 통일교육시스템을 정부적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이 적극실행되지 못하고 있고, 독일처럼 사회현장에서도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sup>70) 「</sup>미래형교육과정」이란, 2009년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 2009-41호로 고시된 교육과정으로서, 학기당 이수과목을 최대 5과목으로 줄이고 각급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따라 예체능 과목의 경우 몰아서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주고, 재량에 의해 최대 20%까지 교과목을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과정이다. 취지는 학교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해주는 데 있지만,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 현실에서 사실상 입시과목에만 몰입되는 현실을 낳고 있다. 오기성 (2011), "학교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에 대한 성찰", 『통일교육 과거 현재 미래』, 통일연구원, pp. 174~179.

그러므로 본 사업에서는 기존 학교교육 및 통일교육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 통일의 과정 및 통일국가 형성과정에서 요구되는 한반도 전체 경영전략 마인 드를 겸비한 통일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구축과 프로그램개발을 제안한다. 기존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체계와 연계하여 실행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 계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10년을 목표로 매년 1천 명의 남한 및 탈북 청소년의 미래인재 양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개발되고 시행된 프로 그램들은 통일 이후 북한의 시장화·개방화과정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새로운 경제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는 북한인력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의 추진 국제사회는 한국경제가 '한강의 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인력개발정책 이 시의적절 유효했던 것도 한 몫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인력개발정책 은 의무교육확대 → 기술교육확대 →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으로 경제성장단계에 따라 그 중심축을 바꾸어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인력수요를 시의 적절하게 공급해 나갔었다. 특히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을 통해 직업훈련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영학 의학·행정학·공학 등 분야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성취할 수 있는 인력양 성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적자본 확충을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토록 했다.71)

북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인력개발과정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력들은 학력수준은 높지만, 오랜 경제난으로 낙후된 산업설비와 대외 적 폐쇄성, 전근대적 경영관리 등으로 낮은 수준의 기능 및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남한 근로자 대비 노동생산성도 낮다. 북한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사상 최 초로 남북한 인력이 같이 일한 함경남도 신포 경수로 건설 현장의 건설관련 직종 4개 분야(철근조립, 형틀목공, 전기공, 벽돌조립)의 조사에서72) 남한인력 대비 평 균 33.5%로 조사된 바 있다. 통일직후 동독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도 서독 근로

<sup>71)</sup> 이정훈·송태수 (2012), "북한 인력개발협력",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번영과 북 한개발협력』, 평화재단, pp. 241~243.

<sup>72)</sup> 한국전력이 1997년 8월~1998년 4월까지 조사한 내부 보고서.

자들에 비해 약 1/3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었다. 그리하여 독일은 통일 이후 지속적인 인력양성과정을 통해 1990년대 말에는 서독근로자 대비 동독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약 80%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노동생산성의 이 같은 차이는 결국임금·소득의 차이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 이전의 과정에서부터 북한산업인력개발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의 과정에 북한의 시장화·개방화는 필연적 과정이고, 이를 추진해나갈 시장친화적이며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요 개발인력양성도 요구된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저발전국가들의 경제발전에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개인역량의 강화가 뒷받침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있음이 판명된 바 있다. 특히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화·개방화의 길을 걸으며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저발전 사회주의국가의 경우 국제경제질서와 시장경제메커니즘을 체득한 인력들이 경제부문별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한 이행의 과정이 순조롭지 못함을 경험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73)

그러므로 본 사업에서는 북한의 산업인력 및 시장친화적 인력 양성을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을 초보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발전과 북한경제의 국제경제질서 편입을 위한 북한 인력개발문제는 북한도 상당히 원하는 대외협력사업이다.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혹은 기타유엔기구의 지원으로 미국, 유럽, 중국, 싱가포르 등에 발전된 농업기술이나 금융·회계 등 시장경제연수를 다수 시행한 바가 있고, 2000년대 초반 경수로건설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 남한의 원자력관련 시설에 와서 원자력 운용에 관한 연수를받은 적도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 초기 일부 시범단지 진출 기업들은 중국에 있는 자신들의 공장에 북한인력을 불러내 미리 기술연수를 시켜 공장가동시이들이 책임기술자로서 여타 근로자들을 리드하도록 했다. 또한 스위스개발청의

<sup>73)</sup> 이종무·김태균·송정호 (2012),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통일연구원, pp. 19~23.

경우 2004~2010년간 '평양비즈니스 스쿨'을 운영해 자본주의적 경영기법과 금 융, 회계, 세무 등의 연수를 한 바 있는데, 이 때 교육받은 사람들이 현재 평양에 현금카드를 도입하고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74)

남북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현단계에서 북한인력을 직접 상대로 역량개발을 시 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김정은시대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바라보 라"라는 구호가 제기되고 있음에서 보듯이,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새로운 경제지식들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에 신뢰프로세스가 구축되어나 갈 경우 급변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이해시키고 북한 산업생산력 회복 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남북한 협력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본 사업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전개의 일환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북한인 력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구체적으로 2007년도에 준공된 개성공단 내 기술교육센터 및 중국·북한 접경지역의 교육기관을 활용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 협력방안은 남북한 사이에 본격적으로 경제공동체를 구축해나가는 과정 이전에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서, 여기서 양성된 북 한인력들은 통일 이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도 주요 역할을 할 수 있 는 것으로 기대된다.

#### 다) 실행계획

- ① 추진목표와 전략
- □ 한반도 전체 경영전략을 체화한 통일미래 리더십의 양성

첫째, 남북한 통일의 과정 및 통일국가 구축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불확실 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한반도 전체 경영능력 및 신경제 창조의 역량을 갖춘 청소년 대상 통일미래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한다. 기존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리더십배양을 위한 교육기법을 활용해 통일미래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sup>74)</sup> 연합뉴스, "북 미니MBA 산파 스위스기업인 펠릭스 압트 인터뷰", 2013.6.13일자.

둘째, 남북한 경제시스템의 이질성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통합해나가며 북한경제의 시장화·개방화를 이끌어나갈 탈북청소년 인재를 양성하도록 한다.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와 남한의 시장경제체제를 함께 경험한 탈북청소년들이 통 일 이후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시장친화적 마인드를 갖게 하고 변화된 경제생태 계에 적응할 수 있으며 신경제 창조의 주체가 되도록 함에 있어서 주요 안내자가 되는 인재로 양성한다. 또한 통일 이후 남북한 부문별 경제통합에 견인적 역할을 하는 관리자형 인재로 양성한다.

셋째, 기존 학교통일교육 및 사회통일교육체계와 네트워크화하는 가운데 추진 하도록 하여 추진실행체계의 실행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 이후 10여간 제도적으로 발전해온 기존 통일교육 인프라들을 활용하여,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 새로운 경제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는 북한인력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의 추진 첫째, 북한이 지속적인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경제개발과정으로 진입하는 데 요구되는 인력개발이 되도록 한다. 북한의 인력은 여타 저발전국과 비교해볼 때 12년제 의무교육제도75)에 의해 학력수준이 높고, 이른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인력개발방식에 따라 생산현장 지향적 기능·기술습득이 기본적으로 체화되어 있다. 그러나 수령유일영도체제의 강화에 따른 정치사상교육 및 군사교육의 확대로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지식·실용적 교육이 점차 축소됨으로써 다방면에서의 산업인력 양성에 한계를 보여왔다. 또한 개별 산업현장중심의노동인력 양성방식으로 인해 전산업발전 차원의 인력개발이 되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노동인력의 양성만을 가져왔으며, 직업향상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76) 특히 경제난으로 인력개발이 각 공장·기업소에 전적으로 맡겨짐으로써 산

<sup>75)</sup> 북한은 1972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오다가 2012년 9월에 12년제 의무교육제도로 개편하였다.

<sup>76)</sup> 이승종·이달곤·정과호 (2008), 『통일과정에서의 북한노동자 직업훈련정책에 관한

업인력 양성 자체는 제도적으로 중단되다시피 되어왔다. 낙후된 공장설비와 낮은 공장가동율로 노동인력들은 공장 기업소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기술만 습득할 뿐이고, 산업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해나가는 기술 및 신기술들에 접근하지도 못했다. 이에 우선적으로 북한이 빈곤의 늪을 탈피하는데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 에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 남북한 신뢰프로세스 과정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단 계적 남북협력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에 기여하면서 북한의 시장화 개방화를 이 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강화가 이루어지도록 인력개발을 하도록 한다. 저발전국 이 경제개발을 해나가고 시장화 개방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정비와 함께 제도를 운영할 개인의 역량개발도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역량이란, 경제협 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따르면 사람, 기관, 국가가 자신들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 한 데는 개혁·개방정책의 시작과 함께 역량개발에도 역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 로 평가받고 있다. 동구사회주의체제전환국가들 중 헝가리, 체코가 가장 성공적 으로 체제전환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도, 이들 나라에 기본적으로 풍부하 게 존재하고 있었던 과학기술 및 산업인력에 대해 공격적인 인력개발프로그램을 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량강화에 목표를 둔 인력개발은 통일 이후 창조경제를 창출해나가는데도 주요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인력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의 추진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일차적 수준에서 가동될 경우를 상정하여 모색하도록 한다. 북한인력개발을 목표로 하 는 남북협력의 추진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일상화되고 기본적 수 준의 신뢰관계가 정립되어야만 가능하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한이 주도하는 인력개발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2005년부터 개발지원에 관심을 가지면서 체 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간헐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북한

연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p. 23.

인력의 본격적 역량강화와 인력개발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설정해놓고 신뢰프로 세스의 일차적 단계에서 가능한 북한인력개발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넷째, 남북한 경제통합을 지향하면서 한반도 전체 창조경제가 발전되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북한인력 양성이 되도록 한다. 남북한 통일의 과정에서 전개되는 남북경제공동체는 단순히 두 지역경제의 통합을 넘어서 신경제구조를 창출하고 남과북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역량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 즉 남북한 이질문화가 통합의 문화로 발전하면서 이것이 한반도 전체 성장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 ② 추진체계

### □ 한반도 전체 경영전략을 체화한 통일미래 리더십의 양성

우선 창조경제 마인드 겸비 통일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의 해당부서와 통일부 통일교육원 간에 가칭 「창조경제 마인드 겸비 통일미래 인재 양성 추진회의」를 결성하여 부처 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도록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대상 통일교육 관련 정책 업무는 교육부의 해당 부서와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수립, 실행하는 이원화체계로 되어 있어 학교현장에서의통일교육이 실행력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청소년대상의 모든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주관 부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부적인 통일교육정책의 방향 및기조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수립하여 때로는 통일교육원이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일부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을 시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을 시행하기도 하는 현실이다. 이에 통일미래 인재 양성의실제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기관을 국가적으로 지정·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일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실행기관으로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을 지정하고, 통일교육원이 경기도 연천군에 건립하고 있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중심 연수기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실천사업'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방안'의 선도사업으로 2010년도에 계획

되어, 2012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2012년 11월에 착공식을 갖고 조성중이며 2014년도에 완공·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센터는 DMZ, 평화, 소통과 국 민대통합, 통일미래 비전제시 등 콘셉트를 기반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 요성을 인지시키는 체험교육장이면서 국내외 청소년의 통일미래리더십을 함양 하는 중심센터의 역할을 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남북 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나갈 경우 DMZ에 근접한 이점을 활용해 남북청소년 교류 의 장으로도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남북한이 공유하천 인 임진강의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남북 임진강댐들을 바라보면서 DMZ 의 아름다운 생태환경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에 건립되고 있어, 한반도 전체를 경영하는 마인드를 지닌 통일미래 리더십 인재 양성에 최적의 연수기관이라 할 수 있다.

통일미래 인재 양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창조경제 마인드 겸비 통일미 래 인재 양성 추진회의」에서는 보이스카웃제도를 원용하여 각급 학교별 그리 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통일미래 인재를 연간 약 1천 명 정도를 선발하여 『한 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캠프생활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예산 을 확보하도록 한다. 입시위주로 몰입되어 있는 우리의 교육시스템 현실에서 통일미래 리더십 양성을 위한 청소년 선발은 사실상 쉽지 않은 과제이다. 따라 서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면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 육적 차원의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의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거나 각종 현 장학습 중의 하나로 통일리더십 교육과정 참여를 지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각 교육지자체가 건립한 영어마을에서 영어만을 체험하며 영어 언어능력을 향상 시키듯이,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남북한 사이에 신뢰 및 통일 이후의 신 경제구조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대학생의 경우 각 대학과의 협조 하에 교양 선택과정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통 일미래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전체 경영전략을 체화한 통일미래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 다. 기존의 청소년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들은 리더십 배양 차원의 교육프로그 램이 아니라,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북한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시키 고자 하는 차원의 교육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정 서적·인지적 교육접근과 함께, 안보의식이 가미된 북한이해교육이 대부분이었고 할 수 있다. 통일은 항상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다고 강조하지만, 새로운 생 태계 변화로 야기되는 다양한 불확실성의 관리와 사회구성원 간의 상이한 가치 관 때문에 초래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신 경제 창조 방향으로 유도해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전무 하다. 한 마디로 각 개인의 리더십배양과 역량강화 측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 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청소년세대들은 N세대로서 자 기주도적이며 체험적 학습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론이라야 통일문제와 같은 추상 적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세대이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협력적 의사소통과 자기 능력 계발,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의 배양이 근 간이 되는 통일미래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남과 북의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이해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통합실 험을 해보는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통일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사회주의계획경제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비교 이해에서 출발해서, 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들 및 점진적인 개혁개방에 성공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중국 등의 시장화·개방화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및 발표 그리고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예측될 수 있는 경제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한반도 전체 신경제구조 창조를 위한 아이디어 창출 경진대회 등등 내용이 근간이 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되도록 작성한다.

한편,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미래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남한 청소년과 달리 탈북청소년은 두 체제를 경험한 세대

로서 사회주의경제체제에 대한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는 반면, 시장경제체제에 대 한 이해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에 특화된 리더십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에 정착한 탈북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창조경제 마인드 겸비 통일미래 리더십 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 독 일의 사례에서 보면, 동독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나 시장경제교육에 있어서 서독인들은 주로 관리자형 역할을 하고, 실제 교육의 담당자는 동독인력 을 양성해서 동독인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동독주민들이 스스로를 패배자로 인식하고 통일 이후의 실업과 물가상승 그리고 새로운 경제생태계에 대 한 좌절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서독인들에 의한 직접교육이 동독주민들로 하여 금 '주변자 인식'을 갖게 하고, 오히려 적응을 어렵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런 면에서 통일미래 인재 양성에 있어서 탈북청소년들은 핵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탈북청소년 대상의 통일미래 리더십 교육은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빠 르게 우리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하는데도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로운 경제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는 북한인력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의 추진 남북한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되는 단계에서 실시될 통일 대비 북한인력의 양성 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조직기구가 가칭 「북한인력개발통합위원회」라는 명칭 으로 결성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책임지고 북한인 력개발을 담당할 조직이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에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주된 정부조직은 고용노동부이며. 주무기 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포함)이다.77) 그 외의 다른 정부기구들도 특수목적의 인력양성에 참여하고 있다. 즉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개발은 통일부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고, 그 외 고용노

<sup>77)</sup> 이정훈·송태수 (2012), "북한 인력개발협력",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번영과 북한 개발협력』, p. 262.

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도 참여하고 있다. 2000년대 교류협력이 활발할 당 시 때때로 연수방식으로 진행되었던 해외에서의 북한 인력교육은 통일부의 주관 업무 아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DI 혹은 기타 유엔기구나 극히 일부 NGO단체 가 실행역할을 함으로써 계획적이지 못하고 그때 그때 계기만 되면 그것도 단기 연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수요에 따른 인력개발은 사실 상 개별기업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제 북한인력 개발문제는 통일 이후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생태계에 대한 북한인력들의 빠른 적응을 위해서라도 장기적 목표 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실행 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통일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과학기술 부,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가 참여하는 일종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10년 단위의 북한인력개발 및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남북한 관계개선 수준 및 단계에 따 라 실행하는 구체화된 액션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폐쇄체제 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국제경제질서에 편입하거나 경제개발을 하는 데에 개인, 제도, 사회, 국제 등 전차원에서 역량의 층위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남한은 우 선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신경제를 창조해나간다는 차원에서 북한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문제를 남북협력의 핵심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협력의 과제에서는 북한인력개발 및 역량강화 문제가 고려되지 못했었다. 이 문제는 '개 발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은 한 어렵다고 생각한 것인데, 남북한이 함께 개성공단을 운영하고 낮은 차원이나마 소규모 산업현장을 일군 경험을 보면 역 의 발상이 필요한 듯하다. 한편, 북한인력개발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은 통일 이후 본격화되는 경제통합과정에서 그 기능이 더욱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타당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의 북한산업 구조조정으로 인 해 탈락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직업전환교육, 직업계속교육 및 재교육 등의 기능 확대로 그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본 사업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일차적으로 가동될 경우를 상정하고 이에 가능한 남북협력의 추진방안을 모색하므로 우선 기존의 협력공간을 활용한

북한인력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개성공단 내에 이미 2007년 설립되어 있 는 기술교육센터를 활용해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산업인력들을 양성하는 남북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개성공단 내 기술교육센터는 개성공단관리위원 회와 산업인력공단이 3,300평 규모로 조성한 것으로서, 여기서 컴퓨터와 기계(선 반, 기계조립, 연삭), 섬유·봉제(양장), 전기전자, 건설 등 7개 직종을 대상으로 연 인원 약 4천명의 북한 산업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건축되었다. 건립되자마자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써 한번도 이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진되어 나갈 경우 이를 활용한 북한 산업인력 양성문제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술교육센터는 본래 개성공단 이 확장되어 나갈 경우 요구되는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현재 개 성공단의 잠정 중단으로 개성공단의 미래 자체가 불투명한 현실이고, 설사 한참 후에 개성공단이 다시 재가동될 수 있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은 이미 동력을 잃어 버린 상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협력의 공간에서 북하인력개발을 위 한 남북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 낭비로 보인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남북한 사이에 이미 만들어놓은 협력의 공간을 무시하고 새롭게 다른 장소에서 협력의 공간을 일구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개성공단 내 기술교육 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남북협력을 일단 추진하고, 신뢰프로세스의 추진단계에 따라 점차 북한이 개설한 경제특구인 나진 선봉 경제특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황 금평 경제특구 등에서의 협력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사실 우리 위탁가공업체들 이 북한 내륙지역인 남포공단에도 진출해 본 경험이 있으므로, 남북한 신뢰가 구 축되면 남포공단지역에서의 남북협력도 가능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인력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의 추진시 다양한 분야의 산업인력 양성 을 처음부터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진출기업들의 경우 사실 북한의 저임 금을 목적으로 진출하였으므로 노동집약적 단순기술인력들이 필요했었다. 그러 나 이 사업에서는 북한이 빈곤의 늪에서 탈피하여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경제개 발을 해나가는 데 요구되는 인력개발을 목표로 하므로, 북한 산업능력 회복과 인 력개발 부문의 우선순위에 따른 남북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다음 북한의 시장화 개방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중 국·북한 접경지역의 교육기관을 활용한 남북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북한 에 직접 진출해 북한인력의 역량강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지만, 남북한 사이에 완전하게 평화정착이 이루어지 않는 한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실행의 현실성을 위해 우선 중국·북한 접경지역의 교육기관을 활용하 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과거 간헐적으로 북경, 상해, 싱가포르 등에서 진 행되었던 경험을 따를 수 있겠지만, 초단기가 아닌 중장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인력의 역량강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국・북한 접경지역 에서의 남북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북한은 현재도 요녕성의 심양이나 길림성 의 장춘 등에 많은 유학생이나 연수인력을 내보내고 있어 중국·북한 접경지역에 서의 남북협력은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면상 남한 중국 북 한 간 협력구도가 되므로 북한의 거부감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남북협 력은 북한인력개발 전담기구가 심양, 장춘, 연길 등지의 대학과 협력관계를 체결 하고, 우리가 고안한 북한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현지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을 결합해 추진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전문인력을 현지 대학에 초빙형 식으로 파견하여, 현지 전문가와 합동으로 북한인력교육을 담당하도록 한다. 북 한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시장친화적이며 국제경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하도록 한다. 즉 통계, 금융, 회계, 재무, 세무, 행정, 법, 기업경영, 마케팅, 국제법, 개발지원 수용에 필요한 국제규범 등의 내용 으로 편성해 북한이 주도적으로 시장화·개방화를 추진해나갈 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10만 명의 인력을 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 에 내보내 시장경제연수를 시키고 이들이 귀국하여 개혁·개방의 핵심 역할을 하 게 함으로써 시장화와 개방화에 성공했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경제생태계의 급 변 이전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북한인력의 역량강화가 남북협력의 시급한 과제로 제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고려역사유적지 탐방을 활용한 통합리더십 인재의 배양

### 가)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의의

강산이 거의 7번 가까이 변할 정도로 지속되고 있는 68년 동안의 분단상황은 한반도 전체에 한민족생태계의 단절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점차 민족생태계 를 파괴하여 통일 이후 민족통합에 장애요인을 조성할 정도이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반세기를 넘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민족내쟁'으로 인해 남과 북 사이 의 반감과 적대의식이 우리 사고구조 내에 고착됨으로써 민족내부의 신뢰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남북한 사이의 군사안 보적 충돌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 간 불신은 냉전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확대되어 있다. 남한주민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북한의 안보적 위협으로 인해 확대될 수 밖에 없지만,78)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반감 및 적대의식도 탈북자들을 대 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남한 문화유입으로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 증가하고 있 으면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79) 북한 주민들

<sup>78)</sup> 예컨대 전국적 차원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연구원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을 경계 및 적대적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이 31.1%였던 반면, 같은 방 법으로 조사한 2012년 KBS의 조사에서는 이 응답이 56.7%로 나타났다. 박종철 외 (2005), 『2005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한국방송 남북협력기획단 (2012), 『2012년 국민통일의식조사』, KBS.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화해협력 분 위기의 남북관계가 중단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에 따른 영향으로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줄어든 것이다.

<sup>79)</sup> 한 고위탈북자의 전언(2011년 9월 입국한 A씨)에 따르면, 2010년도에 남한 영상물 의 북한 유입을 국가보위부에서 조사하였더니 1천 여 종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한 민간단체가 북한원화로 1인당 5천원을 주며 중개인을 통해 직접 북한 북부지방 거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2009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에 붙는 것이 좋겠다"가 48%, "이대로 자력갱생하는 것이 좋겠다"가 32%, "남한에 붙 는 것이 좋겠다"가 20%로 응답되었다. 조사의 신빙성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겠지 만, 이 조사내용을 탈북자들에게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 공감하는 대답이 나왔다.

의 남한에 대한 적대의식 증가가 북한당국의 선전효과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남북한 주민 간 상호 적대의식의 지속은 통일 이후 민족통합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일직후 통일의 감격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 사이에 한민족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겠지만, 점차 통일국가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남북한 주민들은 통일국가 이전 각기 '기억'으로 갖고 있던 적대의식의 의식현상화로 또 다른 갈등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경우 남한사회에 온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또래 남한 청소년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천여 년 전 백제·신라의 갈등이 오늘날 영호남 갈등으로 현재화된 데서도 고찰해 볼 수 있다.

둘째, 남북한은 반세기가 넘게 철저하게 단절되어 서로 다른 이질적 역사·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옴으로써 자칫 현재의 '한 민족 두 국가(one nation, two states)'에서 통일 이후에는 '한 국가 두 국민(one country, two people)'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김정일민족'의 신화 속에 수령관 및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살아왔고, 남한 국민들은 단군민족의 신화 속에 자유주의·개인주의 가치관에 의거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세례를 받아왔다. 이런 현실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경우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들은 통합리더십의 배양이 통일대비 차원에서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갈등을 조정하고 평화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외에 민족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민족통합의 능력을 갖춘 통일미래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민족통합의 기억을 찾아내어 이를 기반으로 통합리더십을 갖춘 통일미래 인재 양성을 제안하고자한다. 즉 개성의 고려문화유산을 민족공동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뿐만 아니라관광자원화하고, 접경지역 연계 문화·생태관광을 추진하려는 사업과 연계해서통합리더십을 겸비한 통일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한다. 고려문화탐방을 활용해

통합리더십을 겸비한 통일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는 이유는 고려의 민족통합정책 이 개방적이고 자신감넘치는 통합정책으로서 사회의 전 계층을 망라하는 실질적 인 민족통합을 이룩해나갔기 때문이다.80)

#### 나) 주요 사업내용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두 번의 통일이 있었다. 제1차 통일은 고구려, 백제를 아우르는 신라에 의한 민족통일이고, 제2차 통일은 신라, 후백제, 발해유민을 아 우르는 고려에 의한 민족통일이다. 신라에 의한 통일이 한민족 형성의 국가건설 이라면, 고려에 의한 통일은 분열된 국가를 재통합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었 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볼 때 오늘날 남북하의 통일문제는 제3차 통일로서 분 열된 국가를 재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려에 의한 재통일이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은 평화적으로 재통일을 이루고자 다양한 세력 들을 인정하고, 신라말기 이래 심화되어온 계층 간·지역 간 갈등을 새로운 국가체 제의 용광로에 집어넣어 새로운 민족통합을 이룩하는데 성공했었다. 통일국가를 형성해나가는데 있어서 기층민중인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지방세력이 유 지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주 었다.81) 그리고 고려는 민족의 재통합 이후 474년 역사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거 란족의 침략과 여진족의 침략, 60여 년 간의 몽고와의 전쟁 등 숱한 외세의 침략 에 시달려 전국토가 초토화되면서도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달해온 나라였다. 남북 한이 민족내쟁과 국제적 냉전이 겹쳐 남북 주민 간 갈등과 적대감이 심각하게 확 대되어 오고 이질적인 역사문화공동체를 이룩해왔음을 볼 때, 이러한 고려의 민 족통합정책은 통합리더십을 배우는 좋은 역사적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통 합 이후 외세에 시달리면서도 그 당시 고려청자와 고려불화, 팔만대장경으로 상

<sup>80)</sup> 민현구 (1992), "한국사에 있어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 『역사상의 분열과 재통일』 (상), 한림과학원총서 4, 일조각.

<sup>81)</sup> 조성렬 (2009),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과 전략로드맵" 비공개 초고, 2009년 11월, p. 20.

징되는 동아시아 최고의 창조적인 고려문화를 융성시킨 것은 통일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훌륭한 리더십교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사업에서는 통일미래 세대인 남북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개성과 강화도에 편재되어 있는 고려역사유적지 탐방을 통해 통합의 리더십을 배양하며 민족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앞에서 제시한 접경지대 역사문화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해 시행하도록할 것이다. 북한은 체제유지의 논리 때문에 처음부터 남북 청소년들이 함께 고려역사유적지를 탐방하며 민족통합 리더십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우리 청소년들의 고려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접경지대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행하면서 민족통합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 배양에 역점을 두고, 점차 단계적으로 남북한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남과 북에 편재해 있는 고려역사유적지를 상호 탐방하면서 고려의 민족통합과정을 학습하며 통합리더십을 배양해나고자 할 것이다.

### 다) 실행계획

### ① 추진목표와 전략

첫째, 남북한 갈등 발생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민족 재통합을 위해 남북 간 갈등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극복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를 인지하는 통합리더십을 배양하도록 한다. 적대감이나 갈등은 드러난 적대감 및 갈등의 현상에 대한 대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으로부터 연유해서 적대감과 갈등이 발행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적대감 및 갈등으로 인해 내재된 상처도 치유해나갈 때 통합의 정신이 발휘될 수 있으므로, 고려역사람방을 통해 분단 이후 남북한 사이의 '민족내쟁'을 성찰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접경지대를 평화벨트화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분쟁과 갈등의 역사인 접경지대탐방으로부터 시작해 역사적 타임머신을 타고 통합의 유적지인 고려역사

탐방을 하도록 함으로써 민족 재통합의 철학 및 가치를 복원하도록 한다. 반세기 가 넘는 남북한 역사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한 국가 한 민족'의 공동체를 이 룩하려면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속에서 재통합의 가치를 찾아내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려가 민족을 재통합해나가는 과정에서 발휘했던 민족 재통합정책에 대해 고려역사유적지를 통해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하고, 남북한 통합의 경우 어 떤 방향성을 가지고 통일 이후 민족통합을 해 나가야할지 자기주도적으로 파악 하도록 한다. 21세기 문명사적 흐름에서 민족의 재통합은 반만년 역사의 민족 공 동유산에 기초하면서도 인류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복지, 인권이 모든 공 동체 성원에게 골고루 편성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고려가 그러했듯이 통합 의 구성원이 되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더라도, 인류보편적 가치와 결합되 어 한민족의 미래를 한층 더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필요한 개방적인 통합의 리더십이 배양되어야 할 것이다.

#### ② 추진체계

통합의 리더십 인재양성 문제는 통일미래 리더십 양성과 동전의 양면과 같으 므로, 앞서 제시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추진기관으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남북한 청소년의 통합리더십 배양사업을 해나가도록 한다.

우선 첫째, 역사문화유산의 공동보존 사업과 남북 접경지대 역사문화유산 관 광이 추진되어 나갈 때, 남북청소년의 고려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 행하도록 한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에서 일반 남북접경지대 연계 관광상품의 일환으로 남북청소년의 고려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통합리더십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한다.

둘째, 단계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되어 나갈 경우 우선 먼저 남한 의 청소년들이 하루는 북한 개성지역에 있는 성균관에서, 다른 하루는 강화도의 항몽유적지에서 캠프생활을 하며 고려의 민족 재통합과정을 체험하고, 스스로

통합리더십을 키워나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남북 신뢰프로세스 가동이 본격화될 경우 여기에 북한청소년도 같이 참여하여 남북청소년 교류와 아울러 자연스럽게 남북 전체적 차원에서 통합리더십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통일 이후 민족 재통합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평화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김일성·김정일민족'과 '단군민족'으로 이원화된 민족갈등의 상처를 치유하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민족적 가치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제5장 정책적 시사점

### 가. 생태적 접근 및 선도형 통일의 접목

창조적 남북협력의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생태적 접근의 적용이라는 점이다. '한민족생태계' 개념은 분단체제와 통일문제에 생태계 개념을 접목시킨 것으로, 남북관계의 단기적 현안을 넘어 단절된 한민족 공동체의 생태적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 사회의 많은 문제가한민족생태계의 단절에 기인하고 있으며, 창조적 복원을 통해 남북한 사회의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 주목하는 것이다. 대북정책에 있어 한민족생태계 개념 도입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정책적 목표와 대상이 북한정권을 넘어 단절된 남북한 생태계의 연결 및 이를 위한 환경적 조건의 형성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며, 특히 북한 주민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울리대북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한 '내적 신뢰프로세스' 추진의 정책성도 강조되는대목이다.82)

'선도형 통일'방식의 적용을 통한 남북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선도형 통일은 남북한 모델 중 모범적 주체의 선도(善導) 및 현 단계가 아닌 발전적 미래 모델의 지향이라는 의미에서의 선도(先導)개념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이다.83) 자생력을 상실한 북한은 한민족생태계의 복원을 선도할 능력과 의지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성공적 발전의 이면에 내포된 많은 문제들로인해 한국의 현 단계도 이상적 모델로 한계를 지닌다. 한국 역시 긍정적 변화를 수반

<sup>82)</sup> 조한범 (2013), 『'한민족 생태계'의 창조적 복원을 위한 '신뢰 프로세스 전략'』, Online Series 2013-14, 통일연구원.

<sup>83)</sup> 김규륜·조한범 외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통일연구원, p. 20.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민족생태계의 창조적 복원의 시점과 형태는 미래지 향적이어야 한다.

### 나. 접경지대의 생태-평화 벨트화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 양 지역의 접경지대는 그동안 냉전의 박물관으로서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유엔은 최근 세계에 유례없는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에 주목하면서 이를 인류의 생물보존지대로 유지시켜나가야 한다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보존은 남북한 협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므로 창조 경제적 차원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사업을 북한에 제안하고 비무장지 대를 미래 한민족의 공동 생태, 평화 융합형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고도성장시기의 환경파괴적 성장전략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저개발과 빈곤의 지속으로 환경파괴가 심 한 가운데 산업생산력이 침체되어 있다. 만일 북한이 지역의 저개발상태로부터 의 탈출에 급급해 생태환경을 고려치 않은 개발을 추구한다면 통일 이후 한반도 전체의 환경불균형에 직면할 것이다. 창조적 남북 경제협력은 통일 이후 한반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 경제-환경 상생의 협력사업 아이템으로 발전되 어나갈 필요가 있다.

과거 남북 예멘은 접경지대에서 군사적 충돌이 빈번했으나, 1980년대 후반 접경지대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접경지대의 공동개발을 통한 상호공동이익의 영역을 조성함으로써 접경지대를 평화지대화 했다. 접경지대를 경제적 자산가치로만들고 공동의 부를 창출하는 협력사례를 만들어 군사적 분쟁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 공동 유기농업 단지 등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선도적 추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다. 통일과정과 미래 인재 양성의 융합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은 통일 이전 단계에서 통일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경제생태계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남북경제협력의 다양 한 과제, 북한개발 본격화의 과제, 그리고 남북경제통합시 각 부문별로 전개되어야 하 는 과제 등 한반도 전체를 경영하는 창조경제적 통일역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겸 비한 통일 대비 인력양성이 통일준비 내실화의 과제로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의 관심저하 및 개인주의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계층을 통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는 노력이 배가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전체 경영전략을 겸비한 통일 인재 양성은 국가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실천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각 정부 부처 간 협력사업으로서 통일준비의 내실화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탈북청소년 및 북한인력을 통일미래의 주역으로 양성하는 통일전략 사업으로 서의 의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통일대비의 경우 인프라 조성과 통일교육 차원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북한인력을 통일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는 사업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못했다.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의 시장화·개방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경제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시장지향적인 북한인력과 산업인력들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미래 통일 국가 주역 세대로 준비시키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입시위주 경쟁체제로 인한 청소년 세대의 취약한 리더십 교육의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통일미래 리더십 함양은 통일교육과 아울러 한반도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아울러 이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창조해나가는 창의적 사고의 형성 교육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통일연구원 등 관련 주체들 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 구체적인 인력양성 인프라의 구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라. 통일생태계와 동북아 국제환경과의 조화

민족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통일생태계 조성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제적 환경과의 조화 여부이다. 분단체제의 국제정치적 맥락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변국의 협력유도는 한민족생태계 복원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에 해당한다. 북핵 위협의 근원적 제거는 한민족생태계 복원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를 우회하는 방안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하위개념이며, 궁극적으로 한민족생태계의 창조적 복원이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단체제의 현상유지를 요구하는 국제정치의 관성을 뛰어 넘는 외교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는 정권의 성향을 초월하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한민족생태계의 복원이라는 복합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발전적 모색이 필요한 이유이다. 남북러 에너지 협력 및 철도연결사업은 북한도 관심을 보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의 다양한 비정치적국제협력 구도 형성과 한민족생태계의 창조적 복원을 위한 통일외교 강화를 위한 창의성의 발현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동완·박정란(2011), 『한류, 북한을 흔들다』, 늘품 플러스.
-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사진으로 보는 북한국보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 고영민(2012), "같지만 서로 다른, 코리안 디아스포라: 통일문제, 해외동포들도 함께 해야", 《재외동포신문》, <a href="http://www.dongponews.net.">http://www.dongponews.net.</a>.
- 김규륜·조한범 외(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통일연구원.
- 김경동·최재천 외(2010), 『인문학 콘서트』, 이숲.
- 김동규 외 (2002),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통일연구원.
- 김상근(2013), 『인문학으로 창조하라』, 멘토프레스.
- 김여수(2012), "인문학과 문명의 치유",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2012.11.1, [부산: UNESCO].
- 김영봉(2013), "남북공유하천과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2013 민화협 정책토론회: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길을 찾는다》, 2013.5.7, [서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김영봉 외(2002), 『남북협력을 통한 임진강유역의 평화적 활용에 관한 연구』, 국 토연구원.
- 김영훈·권태진(2003), 『북고성군 온실농장 협력사업 사례와 과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김정일(1992),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종세(2002), "남북합작 3D 애니메이션 제작 사례",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의 진단과 전망 2002』,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찬호(2011), 『돈의 인문학』, 문학과 지성사.

- 김훈민·박정호(2012),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한빛비즈.
- 문화재청(2013), 『2012년도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청.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2013), 《2013 민화협 정책토론회: 한반도 '그린 데탕 트'의 길을 찾는다》2013.5.7, [서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박영균(2013),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통일 한반도의 중요한 동력이다", 민족화해, 2013.3.4, <a href="http://www.kcrc.or.kr/?bo\_table=z\_culture\_1&doc=bbs/gnuboard.php">http://www.kcrc.or.kr/?bo\_table=z\_culture\_1&doc=bbs/gnuboard.php</a> &wr id =66>.
- 박영정 외(2012),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통합의 방향과 과제』,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 박영정 외(2013),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 광부.
- 박종철 외(2005), 『2005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 민현구(1992), "한국사에 있어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 『역사상의 분열과 재통일』 (상), 한림과학원총서 4, 일조각.
- \_\_\_\_(2013),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손기웅 외(2009),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활성화방안(1)』, 통일연구원.
- 송인범(2009),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의 현황과 과제", 백제문화, 40, 백제문화연구소.
- 심의섭(2007), "한강하구 지역자원의 평화적 이용방안", 『남북물류포럼 정책간담회 자료집』.
- 여인곤 외(2004),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 오기성(2011), "학교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에 대한 성찰", 『통일교육 과거 현재 미래』, 통일연구원.
- 외교통상부(2011a), 『재외동포 현황』, 외교통상부.
- (2011b), 『해외유출문화재 환수 범정부 협의체 발족』, 외교통상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7), 『민통선지역의 생태계보전과 지역사회활성화 동시달 성을 위한 조사연구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윤채근(2013), 『콘텐츠 시대의 불안 인문학의 생존전략』, 동아시아.
- 이덕환(2011), 『소통: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서강대학교출판부.
- 이승종·이달곤·정과호(2008), 『통일과정에서의 북한노동자 직업훈련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 이우영 외(2012),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해외사례 연구』, 문화 체육관광부.
- 이장섭 외(1997), 『세계한민족관(가칭)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정책개 발원.
- 이정훈·송태수(2012), "북한 인력개발협력",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번영과 북한개발협력』, 평화재단.
- 이종무(2007),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 『남북 농업협력 10년: 성과와 과제』, 한국농촌연구원.
- 이종무·김태균·송정호(2012),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통일연구원.
- 이태욱(2001), 『두개의 독일: 독일통일과 경제·사회적 부담』, 삼성경제연구소.
- 오양열 외(2013), 『'남북기본합의서' 문화분야 후속의제 개발 및 단계별 협력방 안』, 문화체육관광부.
- 장우선(2012), 『부상하는 신기술 융합산업』, 《이슈리포트》, 12-14, 현대경제연구원. 전영선(2001), "북한의 개혁개방정책과 과학기술정보산업의 교류가능성 모색", 《중소연구》, 25(2).
- 전영선 외(2012), 『남북한 문화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정보사회와인문학(1999), 『정보사회와 인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 정영순(2011), "글로벌리즘과 남북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인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연구》, 23.

- 정태헌 외(2013), 『민족공동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방안』, 고려대학교 한국사연 구소·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조성렬(2009),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과 전략로드맵" 비공개 초고, 2009년 11월.
- 조한범(2013), 『'한민족 생태계'의 창조적 복원을 위한 '신뢰 프로세스 전략'』, Online Series 2013-14, 통일연구원.
- 통일부(2012), "통일시대를 위한 민족문화자산 남북협력", 『민족문화자산 남북공 동보존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방송 남북협력기획단(2012), 『2012년 국민통일의식조사』, KBS.

함광복(2010), 『미래를 위해 남겨놓은 과거, DMZ』, 통일교육원.

행정안전부(201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행정안전부.

혜문(2011), "남북공조를 이룬 문화재환수 남북교류 한단계 도약 계기", 《민족21》. 황주성 외(2011), 『ICT·인문사회 융합 활성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UNDP(2010). Creative Economy Report. 『자유아시아방송』.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MA/ 재외동포재단 http://www.okf.or.kr

### 부 록

#### 〈부록 1〉 북한의 문화자산 보유 현황

현화사비, 영통사 대각국사비, 오룡사 법경대사비, 정릉사 8각7층석탑, 광법사 8 각5층석탑, 정릉사, 금광사, 광법사, 강서사, 자혜사, 령산선, 용화사, 금강산 표 훈사, 정양사, 신계사, 검은모루 동굴, 삼성사의 삼성전, 대동문, 보통문, 강서대 묘, 강서소묘, 약수리벽화고분, 연화총, 태성리 제1호고분, 태서리 제2호고분, 용 강대총, 대안리 제1호 벽화고분, 쌍영총, 수렵총, 감신총, 성총, 점제비, 진파리 고구려고분, 동명왕릉, 천왕지신총, 요동성총, 박천심원사, 보현사, 보현사8각13 층탑, 해주5층탑, 해주다라니석당, 안악제1호고분, 함박뫼(안학제2호고분), 안악 제3호고분, 관산리고인돌, 학립사5층탑, 성불사, 성불사5층탑, 연탄심원사, 개성 남대문, 불일사5층탑, 선죽교, 영통사 5층탑, 영통사서3층탑, 공민왕릉, 현화사 비, 현화사7층탑, 가학루, 석왕사, 장연사3층탑, 금장암사자탑, 묘길상, 묘길상석 등, 진흥왕순수비, 경성남문, 수강루, 원오리사지출토 소조보살상, 금동아미타불 좌상, 금제미륵보살좌상, 금동지장보살좌상, 관음사 대리석 관음보살좌상, 금동 아미타삼존불상, 금동투조신장상, 신계사 청동은임사 향완, 청동금고, 금동미륵 보살반가사유상, 금동아미타여래좌상, 금동관음보살상, 금동지장보살상, 성동리 다라니석당, 보현사 사적비, 보현사 구층석탑, 보현사 팔각십삼층탑, 백동향로, 아미타여래도(후불탱화), 적조사 철불좌상, 불일사 오층석탑, 현화사 칠층석탑, 현화사 사적비, 흥국사 석탑, 금동 구층탑, 금동 오층탑, 신계사 청동은입사 향 완, 원오리사지출토 소조보살상, 금동투조신장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영 명사 팔각석불감, 적조사 철불좌상, 관음사 대리석관음보살좌상, 삼존불좌상, 고 성 온정리 마애불입상, 묘길상 마애불좌상, 안양암 마애삼존불상, 금동지장보살 좌상, 금동아미타불좌상, 금동아미타삼존불상, 금제관음보살좌상, 금동아미타불 좌상, 장연사 삼층석탑, 불일사 오층석탑, 현화사 칠층석탑, 흥국사 석탑, 보현사 구층석탑, 광법사 오층석탑, 흥복하지 육각칠층석탑, 영통사 오층석탑, 금장암지 사사자석탑, 신계사 삼층석탑, 정양상 삼층석탑, 보현사 팔각십상측석탑, 자혜사 오층석탑, 학립사지 오층석탑, 해주 구층석탑, 해주 오층석탑, 화장사 지공선사 부도, 자혜사 석등, 광조사 진철대사탑비, 오룡사 법경대사비, 현화사 사적비, 영 통사 대각국사비, 보현사 사적비, 광동보제선사비, 중흥사 당간지주, 성동리 다 라니석당, 해주 다라니석당, 금동구층탑, 금동오층탑, 연복사 범종, 평양 범종, 유점사 범종, 개심사 범종, 신계사 청동은입사향완, 아미타여래도

국보급 문화 유물

보물급 문화 유물	평양종, 승인전, 오순정, 칠성문, 홍복사 6각7층탑, 영명사 8각석불감, 중홍사당간지주, 안국사, 자복사5층탑, 의주남문, 통군정, 용천다라니석당, 용천서문밖석당, 용천구읍리석수, 장경사5층석탑, 영변남문, 천주사, 첩운사, 보현사9층탑, 해주석빙고, 해주9층탑, 신광사5층탑, 신광사무자비, 소현서원, 자혜사5층탑, 자혜사석등, 구엽사, 월정사, 관산리고인돌, 연복사종, 홍국사탑, 홍국사석등, 관음사, 화장사사리탑, 영통사동3층탑, 영통사대각국사비, 영통사당간지주, 현화사당간지주, 탑동3층탑, 장안사터, 삼불암, 서산대사비, 정양사석등, 선화당, 함흥본궁, 함흥향교, 여진문자비, 복홍사7층탑, 정북사, 길주향교, 회령향교, 패궁정, 중홍사
사적	평양성, 평양성 외성, 평양성내성, 평양성북성, 연광정, 승영전, 을밀대, 현무문, 영명사터, 부벽루, 전금문, 청류정, 안학궁터, 대성산성, 청암리토성, 금강사터, 대성산부근고루겨고분, 낙랑리토성, 미림리원시유적, 금탄리원시유적, 강서삼묘 피고분, 석천고인돌군, 황룡산성, 궁산원시유적, 어울동토성, 한왕묘, 자모산성, 정진사, 의주읍성, 임천성, 고려장성, 백마장성, 구주성, 정주성, 당산원시유적, 철옹성, 농오산성, 용호리고분, 월암리고인돌군, 장수산성, 태백산성, 지탑리유적, 지탑리토성, 휴류산성, 연탄고인돌군, 개성나성, 반월성, 만월대, 고려담성대, 개성성균관, 숭양서원, 대홍산성, 현릉, 칠릉, 용성리고분군, 지릉, 지하리고인돌군, 삼일포리고분군, 백운산성, 부상리고분군, 청해토성, 농포리원시유적, 경성읍성, 하고천고분군, 무산범의구석원시유적, 부거리고분군, 나진초도원시유적, 운두산성, 회령오동원시유적, 굴포리원시유적, 공귀리 원시유적, 위원고성과 읍성, 세검정
무형 문화 유산	가야금산조, 강령탈춤, 거문고산조, 농악, 농요, 돈돌라리, 룡강기나리, 배뱅이굿, 법고춤, 봉산탈춤, 북청사자탈놀이, 사승무, 서도소리, 줄타기, 칼춤, 퉁소정악, 판소리, 팔목춤, 해금산조, 각자쟁이, 기와쟁이, 놋쇠쟁이, 누비쟁이, 단청쟁이, 대나무쟁이, 라전칠기, 망건쟁이, 명주까지, 목조각쟁이, 바느질쟁이, 배첩쟁이, 사기쟁이, 소반쟁이, 염색쟁이, 옥쟁이, 옹기쟁이, 인두화쟁이, 자수쟁이, 작은목 쟁이, 전통신발, 전통악기쟁이, 철쟁이, 초물쟁이, 큰목쟁이, 평양냉면, 함흥냉면, 향토술, 활쟁이
불교 유물	영강칠년명금동광배, 금동광배, 소조불상범, 청동보살상, 금동불입상, 금동아미타불입상, 태조왕건상, 금동지장보살상과 돌함, 금동십일면팔비관음보살입상, 금동십일면관음보살좌상, 금동불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아미타불좌상, 금동아미타불삼존불상, 금동불상과불감, 금동역사상부조, 청동탄생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불감, 청동나한상,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엽형장식, 금동탑형장식, 대자사 범종, 금사사 범종, 금강령, 금동주자, 주자문짝 사천왕상, 금동명문판, 보현사서산대사부도, 보현사부도군, 보현사서산대사비, 보현사향불탑비, 보현사중건비, 후불탱화, 명부탱화, 시왕탱화, 신중탱화, 처영진영, 휴정진영, 사명진영, 석당형 청동탑, 금강령, 륙환석장, 유점사 범종, 나옹화상 진영, 지장보

살좌상, 판문 흥왕리 삼층석탑, 청동범종, 개국사 석등, 현화사 석등, 지장보살 및 시왕상, 불좌상 및 16나한상, 청동관음보살좌상, 목조아미타불좌상, 목조비 로자나불좌상, 목조오백나한상, 목조삼존불좌상과 십육나한상, 문수보현동자상, 사천왕상, 문수 보현 동자상, 비로자나불좌상과 협시불, 삼세불좌상, 안화사 칠 층석탑, 심복사 칠층석탑, 판문 흥왕리 삼층석탑, 화정사 칠층석탑, 표훈사 칠층 석탑, 대림사 구층석탑, 성천 군자리 칠층석탑, 성천 삼층석탑, 성천 처인리 오 층석탑, 안국사 구층석탑, 원광사지 칠층석탑, 자복사 오층석탑, 금광사 오층석 탑, 의주 칠층석탑, 장경사지 오층석탑, 광조사 오층석탑, 구정사 오층석탑, 복흥 사 칠층석탑, 수증사 오층석탑, 연등사 오층석탑, 은율읍내 석탑, 은율 홍문리 오층석탑, 정곡사 오층석탑, 패엽사 오층석탑, 문형면 상탑동 삼층석탑, 성불사 오층석탑, 법왕대 다층석탑, 유점사 구층석탑, 금선대 석탑, 정광사 석탑, 강서사 오층석탑, 강서사 칠층석탑, 양화사 석탑, 속명사 오층석탑, 심원사 석탑, 영통사 대각국사 부도, 원통사 부도, 화장사 부도, 신광사 부도, 심원사 부도, 심원사 부 도군, 금장암지 부도, 금강산 백화암 서산대사 부도, 금강산 백화암 취진당 부 도, 장안사지 무경당 영운부도, 금강산 백화암 편양당부도, 석왕사 부도군, 유점 사 부도군, 정양사 나옹화상 부도, 보현사 서산대사 부도, 보현사 부도군, 안심 사 부도군, 성불사 부도, 성불사 설봉당 부도, 명적사 부도군, 안불사 부도군, 양 천사 부도군, 개심사 부도군, 학립사지 부도군, 개국사 석등, 만월대 석등, 현화 사 석등, 금장암지 공양석등, 묘길상 앞 석등, 봉선사지 석등, 장연사 석등, 정양 사 석등, 안심사 석종비, 신광사 무자비, 학립사 사적비, 연복사 탑중창비, 금강 사 백화암 서산대사비, 광법사 사적비, 광법사 중수단청비, 유점사 송월대사비, 광법사 시왕개소상비, 보현사 서산대사비, 보현사 향불탑비, 보현사 중건비, 성 불사 사적비, 명적사 비, 서운사 향불탑비, 천수암 불향비, 정광사 기적비, 개심 사 비, 강서사 사적비, 심원사 사적비, 현화사 당간지주, 영통사 당간지주, 자비 사 당간지주, 성동리 서문밖 다라니석당, 석왕사 해태상, 속명사 수조, 금동 명 문판, 금동엽형장식, 금동사리함, 금동탑형장식, 금동탑기단, 금동삼층탑, 석당 형 청동탑, 대자사 범종, 정사명 범종, 청동범종, 금사사 범종, 양천사 만세루 범 종, 보현사 범종, 용흥사 범종, 신계사 청동은입사향완, 지정6년명 청동은입사향 완, 백동향로, 금강령, 륙환석장, 융흥사 업경대, 개심사 업경대, 용흥사 불연, 시 왕탱화, 백의관음도, 신중도, 아미타구존도, 사명진영, 신중탱화, 처영진영, 휴정 진영, 대웅전 벽화, 현왕도, 후불탱화(석가삼존도), 후불탱화(석가불도), 후불탱 화(삼장보살도), 후불탱화(감로왕도), 지장시왕도 및 판관탱화, 신중도

<sup>\*</sup> 자료 : 정태헌 외 (2013), 『민족공동 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 방안』, 고려대학교 한국사 연구소·남북역사학자협의회, pp. 114~117에서 재구성

### 〈부록 2〉 북한 문화자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황

등재	고구려 고분군(2004.07 등재)
잠정 목록	<ul> <li>구장지역의 동굴(용문동굴, 백룡동굴, 개천동굴, 송암동굴)</li> <li>신생대 4기의 석회 형성물로 이루어진 지하의 카르스트 동굴로서 다양한 석회 종유석과 형성물들로 아름다운 경관 형성</li> </ul>
	- 개성 역사유적지구 • 개성은 918~1392년까지 고려시대의 수도이며, 조선시대에도 주요 행정도시로 기능하여 많은 역사유적들 보유.
	<ul> <li>평양 역사유적지구</li> <li>평양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서부터 고조선, 고구려, 그리고 고려의 제2수도로서 한반도의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만큼 큰 역사적 의미 보유.</li> </ul>
	- 칠보산(자연유산) • 백두산 화산권역에 부속되는 다양한 화산석으로 구성. 동식물, 파충류 등 종의 다양성을 보유.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11건 소재
	<ul> <li>금강산과 역사유적지구(복합)</li> <li>금강산은 심미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과 온대부터 아북 극 권역의 식물, 특히 자생 식물의 서식처 형성. 오랜 역사 속에 내려온 전설 과 불교유적과 같은 문화유산이 산재한 지역</li> </ul>
	- 묘향산과 역사유적지구(복합) • 뛰어난 경관을 갖추었으며, 불교문화와 관련된 많은 유적 보유

<sup>\*</sup> 자료 : 정태헌 외 (2013), 『민족공동 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 방안』, 고려대학교 한국사 연구소·남북역사학자협의회, p. 118.

#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전체 과제 리스트>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01-01	ICT 기반의 융합산업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3-01-02	융합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혁신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3-01-03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01-04	창조경제 기반의 농업·농촌 신성장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1-05	창의적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성장동력 육성전략	산업연구원
13-01-06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융합형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3-01-07	창의적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3-01-08	에너지 부문에서의 창조경제 구현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13-01-09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창조경제 구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01-10	교통물류부문에서의 창조경제 구현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13-01-11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추 도시권 발전과 도시재생 융합 방안	국토연구원
13-01-12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창조와 신산업 발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3-01-13	해양수산 창조경제 구현 과제와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01-14	기술-문화-산업의 융합행정을 위한 정책(부처)간 협력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3-01-15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융합촉진 법제 및 규제 선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3-01-16	창조, 융합, 안전을 지향하는 형사정책의 새로운 도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01-17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3-01-18	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3-01-19	여성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01-20	기업가적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융합형 직업교육훈련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01-21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문화기반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13-01-22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교수 학습, 교육평가 패러다임 전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01-23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01-24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혁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3-01-25	신흥경제권과의 새로운 산업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01-26	창조경제 기반 문화·환경·산업 융합 남북협력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 ● 저 자 소 개 ●

### 임 강 택

-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
-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경제학 박사
- ·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권 영 경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 학사
-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 ·연세대학교 경제학 박사
- ·현 통일교육원 교수

### 양 현 미

- ·서울대학교 미학 학사
- ·홍익대학교 미학 석사
- ·홍익대학교 미학 박사
- ·현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전 영 선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 문학사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 문학박사
- ·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 연구교수

### 조 한 범

- ·한양대학교 사회학 학사
- ·고려대학교 사회학 석사
- ·상트 페테르부르그대학교 사회학 박사
- ·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 영 정

- ·전남대학교 역사학 문학사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 문학석사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 문학박사
- ·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임 을 출

- ·영남대 무역학 학사
- ·고려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지역학 석사
-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 ·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 부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3-01-26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 창조경제 기반 문화·환경·산업 융합 남북협력 추진방안

2013년6월 25일인쇄2013년6월 25일발행

발행인 박 진 근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2호

TEL: 02-571-0002 FAX: 02-572-4092

인 쇄 ㈜예원기획 02)745-8090

ISBN 979-11-85196-17-6 ISBN 979-11-950021-1-5(세트)

#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창조경제 기반 문화 · 환경 · 산업 융합 남북협력 추진방안**



